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해외 국가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 현황과 한국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9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해외 국가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 현황과 한국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박상운 (인하대학교 강사)

연구기간 : 2019. 5. 17. ~ 2019. 9. 27.

연구단체 : 덕성여자대학교

본 연구보고서는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과제로서 연구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

목차

○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필요성 / 1	
II. 연구의 목적 / 2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1. 연구 내용 / 3	
2. 연구 방법 / 4	
제2장. 민주주의와 정책: 정당정책연구소의 의의 및 역할, 평가 ...	5
I. 민주주의의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 5	
II. 정당정책연구소의 의의와 역할 / 6	
III.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의 유형과 평가 모델 / 8	
1. 독일의 정치재단 유형 / 9	
2. 미국의 싱크탱크 유형 / 10	
3. 정책연구소 평가 모델 / 11	
1) 맥겐(McGann) 모델 / 11	
2) 범가너(APIA-Bumgarner) 모델 / 12	
3) 호블랜드(ODI-Hoveland) 모델 / 13	
4) 에벨슨(Abelson)의 정책 단계 모델 / 13	
4. 『2018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 주요 내용 / 14	
제3장.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	23
I.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와 연혁 / 23	
II.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인력, 재정 / 27	
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 27	
1) 민주연구원 / 27	
2) 여의도연구원 / 29	
3) 바른미래연구원 / 31	

- 4) 정의정책연구소 / 32
- 5) 민주평화연구원/ 33
- 6)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33
- 7) 정당정책연구소와 중앙당의 관계 비교 / 34
- 2.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인력 / 37
- 3.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 41
- III.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 49
 - 1.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 개관 / 49
 - 2.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실적 / 55
 - 3.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분야의 다양성 / 60
 - 4.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실적 / 65
 - 5.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 활동실적 / 70
 - 6.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활동실적 / 75
 - 7. 정당정책연구소 자료 발간 활동실적 / 80

제4장. 주요 해외 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 현황과 정책적 함의 ... 87

- I. 해외 국가 정당정책연구소 개관 / 87
- II. 해외 국가 정당정책연구소 사례 분석 / 89
 - 1.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KAS) / 89
 - 1) 개요 / 89
 - 2) 기독교민주당과의 관계 / 90
 - 3) 목표와 비전 / 90
 - 4) 조직 구성 / 91
 - 5) 주요 사업 / 91
 - 6) 활동실적 / 92
 - 7) 재정 확보 / 92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94
 - 2. 독일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 / 99
 - 1) 개요 / 99
 - 2) 목표와 비전 / 99
 - 3) 독일사회민주당과의 관계 / 99
 - 4) 조직 구성 / 101
 - 5) 주요 활동 / 101
 - 6) 활동실적 / 102
 - 7) 재정 확보 / 102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103
- 3. 영국 Fabian Society / 108
 - 1) 개요 / 108
 - 2) 노동당과의 관계 / 108
 - 3) 목표와 비전 / 109
 - 4) 조직 구성 / 109
 - 5) 활동 / 110
 - 6) 재정 확보 / 110
 - 7) 회계 및 감사 보고 / 111
- 4. 영국 Demos / 114
 - 1) 개요 / 114
 - 2) 정당과의 관계 / 114
 - 3) 목표와 비전 / 114
 - 4) 조직 구성 / 115
 - 5) 활동 / 115
 - 6) 재정 확보 / 116
 - 7) 회계 및 감사 보고 / 117
- 5. 벨기에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FEPS) / 121
 - 1) 개요 / 121
 - 2) 유럽사회주의당과의 관계 / 121
 - 3) 목표와 비전 / 122
 - 4) 조직 구성 / 122
 - 5) 활동 / 122
 - 6) 재정 확보 / 123
 - 7) 회계 및 감사 보고 / 124
- 6. 미국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 127
 - 1) 개요 / 127
 - 2) 민주당과의 관계 / 127
 - 3) 목표와 비전 / 127
 - 4) 조직 구성 / 128
 - 5) 주요 사업 / 128
 - 6) 활동실적 / 130
 - 7) 재정 확보 / 131
 - 8) 회계 및 감사보고 / 131
- 7. 미국 국제공화당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 133
 - 1) 개요 / 133

- 2) 공화당과의 관계 / 133
 - 3) 목표와 비전 / 133
 - 4) 조직 구성 / 133
 - 5) 주요 사업 / 134
 - 6) 활동실적 / 134
 - 7) 재정 확보 / 135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135
8. 벨기에 European Ideas Network(EIN) / 136
- 1) 개요 / 136
 - 2) 유럽사회주의당과의 관계 / 136
 - 3) 목표와 비전 / 137
 - 4) 조직 구성 / 137
 - 5) 활동 / 138
 - 6) 재정 확보와 회계 감사 / 138
9. 미국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 139
- 1) 개요 및 민주당과의 관계 / 139
 - 2) 목표와 비전 / 139
 - 3) 조직 구성 / 139
 - 4) 주요 사업 / 140
 - 5) 활동실적 / 140
 - 6) 재정 확보 / 140
 - 7) 회계 및 감사 보고 / 140
10. 미국 뉴민주당네트워크(New Democrat Network, NDN) / 141
- 1) 개요 및 민주당과의 관계 / 141
 - 2) 목표와 비전 / 141
 - 3) 조직 구성 / 141
 - 4) 주요 사업 / 141
 - 5) 활동실적 / 142
 - 6) 재정 확보 / 142
 - 7) 회계 및 감사 보고 / 142
11. 네덜란드 Foundation Max van der Stoep(FMS) / 143
- 1) 개요 / 143
 - 2) 노동당과의 관계 / 143
 - 3) 목표와 비전 / 144
 - 4) 조직 구성 / 145
 - 5) 주요 활동 / 145

- 6) 재정 확보/ 146
- 7) 회계 및 감사 보고 / 147
- 12. 스페인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FAES) / 151
 - 1) 개요 / 151
 - 2) 목표와 비전 / 151
 - 3) 조직 구성 / 151
 - 4) 활동 / 152
 - 5) 재정 확보 / 152
 - 6) 회계 및 감사 보고 / 153
- 13. 프랑스 폰다폴(Fondapol: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 155
 - 1) 개요 / 155
 - 2) 정당과의 관계 / 155
 - 3) 목표와 비전 / 155
 - 4) 조직 구성 / 156
 - 5) 주요 사업 / 156
 - 6) 활동실적 / 157
 - 7) 재정 확보 / 157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157
- 14. 이탈리아 Fondazione Italianeuropei / 158
 - 1) 개요 / 158
 - 2) 이탈리아연합(L'Unione)과의 관계 / 158
 - 3) 목표와 비전 / 158
 - 4) 조직 구성 / 159
 - 5) 주요 사업 / 159
 - 6) 활동실적 / 159
 - 7) 재정 확보 / 160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160
- 15. 스웨덴 베르틸 올린 연구소(Bertil Ohlin Institute) / 161
 - 1) 개요 / 161
 - 2) 자유당(Folkpartiet)과의 관계 / 161
 - 3) 목표와 비전 / 162
 - 4) 조직 구성 / 162
 - 5) 주요 사업 / 162
 - 6) 활동실적 / 163
 - 7) 재정 확보 / 163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163

- 16. 인도 샤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연구재단(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 SPMRF) / 164
 - 1) 개요 / 164
 - 2)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과의 관계 / 164
 - 3) 목표와 비전 / 164
 - 4) 조직 구성 / 165
 - 5) 주요 사업 / 165
 - 6) 활동실적 / 166
 - 7) 재정 확보 / 166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166
- 17. 인도재단(India Foundation) / 167
 - 1) 개요 / 167
 - 2) 인도 인민당과의 관계 / 167
 - 3) 목표와 비전 / 167
 - 4) 조직 구성 / 167
 - 5) 주요 사업 / 169
 - 6) 활동실적 / 169
 - 7) 재정 확보 / 170
 - 8) 회계 및 감사 보고 / 170

제5장.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71

- I. 자원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 171
- II. 성과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 174

제6장. 결론 179

부록 181

참고문헌 209

○ 표 목차

- <표 1> 2018 글로벌 정책 인덱스 보고서 평가지표 / 15
- <표 2> 국가별 정책연구소 수 / 16
- <표 3> 전 세계 상위 25개 정책연구소 / 17
- <표 4> 미국 제외 전 세계 상위 25개 정책연구소 / 18
- <표 5> 정책연구소 유형 분류 / 19
- <표 6> 전 세계 상위 25개 정당정책연구소 / 20
- <표 7>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 / 25
- <표 8> 정당정책연구소의 중앙당 의사결정기구 참여 / 35
- <표 9> 여의도연구원장의 보고·승인 사안 / 36
- <표 10> 정당정책연구소 인력 현황: 2018년 / 37
- <표 11> 정당정책연구소 활동경비: 2018년 / 41
- <표 12> 정당정책연구소 활동경비: 2013년~2018년 / 43
- <표 13> 정당별 보조금과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 2018년 / 45
- <표 14> 정당정책연구소별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율: 2013년~2017년 / 48
- <표 15> 정당정책연구소별 활동실적: 2018년 / 51
- <표 16> 정당정책연구소별 연구 개발 활동실적의 주체: 2018년 / 55
- <표 17>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활동실적의 주체: 2013년~2018년 / 56
- <표 18>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 연구·개발 활동실적 추진기간별 분류 / 58
- <표 19> 정당정책연구소 추진기간별 연구 개발 활동실적: 2013년~2018년 / 59
- <표 20>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 영역별 분류: 2018년 / 61
- <표 21>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 영역별 분류: 2013년~2018년 / 62
- <표 22>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2018년 / 65
- <표 23>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2013년~2018년 / 67
- <표 24>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대상별 활동실적: 2018년 / 71
- <표 25>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대상별 활동실적: 2013년~2018년 / 72
- <표 26>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수단과 활동실적: 2018년 / 76
- <표 27>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수단과 활동실적: 2013년~2018년 / 77
- <표 28> 정당정책연구소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2018년 / 81
- <표 29> 정당정책연구소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2013년~2018년 / 82
- <표 30> 해외 국가 주요 정당정책연구소 명단과 순위 / 88
- <표 31> KAS 예상 수입 내역: 2019년 / 93
- <표 32> Friedrich Ebert Stiftung 예상 수입 내역: 2019년 / 103
- <표 33> Demos 수입 금액과 구성비: 2017년 / 116
- <표 34> FAES 수입 내역: 2017년 / 153

○ 그림 목차

- [그림 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변화: 2013년~2018년 / 24
- [그림 2] 더불어민주당 조직도 / 28
- [그림 3] 민주연구원 조직도 / 28
- [그림 4] 자유한국당 조직도 / 30
- [그림 5] 여의도연구원 조직도 / 30
- [그림 6] 바른미래연구원 조직도 / 31
- [그림 7] 정의당 조직도 / 32
- [그림 8] 민주평화연구원 조직도 / 33
- [그림 9]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직도 / 34
- [그림 10] 정당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수 변화: 2013년~2018년 / 39
- [그림 11] 정당정책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수 변화: 2013년~2018년 / 40
- [그림 12] 정당정책연구소별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 2013년~2018년 / 44
- [그림 13] 정당별 경상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과 총 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 비교: 2013년~2018년 / 47
- [그림 14] 정당정책연구소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2018년 / 50
- [그림 15]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비중 변화: 2013년~2018년 / 52
- [그림 16] 정당정책연구소별 연구 개발 분야 영역 비율: 2013년~2018년 / 63
- [그림 17] 정당정책연구소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 68
- [그림 18] 정당정책연구소별 교육 연수 대상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 73
- [그림 19] 정당정책연구소별 정책 홍보 수단 비율: 2013년~2018년 / 79
- [그림 20] 정당정책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 84
- [그림 21] 기관자금(세계 보조금)의 정치재단별 배분 현황 / 94
- [그림 22] KA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8년 / 96
- [그림 23] KA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 97
- [그림 24] KAS 연례보고서 예상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 98
- [그림 25] FE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I: 2018년 / 104
- [그림 26] FE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II: 2018년 / 105
- [그림 27] FE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 106
- [그림 28] FES 연례보고서 예상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 107
- [그림 29] Fabian Society 수입 내역 및 구성비: 2018년 / 111
- [그림 30] Fabian Society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2018년 / 112
- [그림 31] Fabian Society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7년~2018년 / 113
- [그림 32] Demos 조직도 / 115
- [그림 33] Demo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 / 118

- [그림 34] Demo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7년 / 119
- [그림 35] Demos 연례보고서 현금 흐름 현황 보고 양식: 2017년 / 120
- [그림 36] FEPS 수입 내역과 구성비: 2017년 / 124
- [그림 37] FEPS 연례보고서 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 / 125
- [그림 38] FEPS 연례보고서 수입내역서 양식: 2017년 / 126
- [그림 39] NDI 세금 보고 자료: 2016년 / 132
- [그림 40] FMS 수입 내역 및 구성비: 2017년 / 147
- [그림 41] FMS 연차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 148
- [그림 42] FMS 연차결산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 149
- [그림 43] FMS 연차결산보고서 항목 상세 설명 양식 / 150

○ 부록 목차

- [부록 1] 해외 주요 정당정책연구소 현황 정리 / 181
- [부록 2] 독일 정치재단의 국가자금에 대한 공동 선언 / 185
- [부록 3] Fabian Society의 기금모금 규정 / 191
- [부록 4] FAES의 굿거버넌스 규정 / 193
- [부록 5] 인도의 대외정책(India' s Foreign Policy) 워크숍 세부 일정 / 205

요약문

2004년 3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정당정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토대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처럼 정당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물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의 선거용 부속기관이라고 인식되어 온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떻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현실을 진단하고,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 활동 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떠한 위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넷째,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료 조사에 기반한 문헌연구가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 활동 실적과 성과는 정당정책연구소가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최근의 추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 정당정책연구소 사례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가 매년 발행하는 정책연구소(Think Tank) 평가보고서(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를 참고하고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 정책연구소 평가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39개 정당정책연구소들 중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가 민주국가로 분류한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민주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정보는 해당 정당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근 가능한 보고서와 연구자료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정책 의제 구체화 단계, 정책 형성 단계, 정책 집행 단계 등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책연구소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성과를 낸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맥겐(James McGann)의 기준에 따르면 자원 지표, 수요 지표, 영향력 지표를 기준으로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맥겐의 정책연구소 평가에는 재정 수준과 안정도,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접근성, 연구 인력의 수준, 네트워크의 질과 신뢰성, 언론 노출 정도, 홈페이지 방문 수, 발표 횟수, 책자 판매 수, 정책보고서 배부 수,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수, 정책 입안자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고려된 정책, 사용자의 인식,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자문 역할, 학술지에 출판되거나 인용된 수 등의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에게 상당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에 사용하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상위 정당정책연구소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이와 같은 점은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적인 차원에서 정당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과 연계된 소속 현역의원이 정당정책연구소의 원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당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권한 보장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 소속 현역의원들이 정당정책연구소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당정책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의 충원을 확대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전문 연구인력의 비율을 높이고, 계약직 전문 연구인력의 경우에도 연봉 및 처우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 제고도 필요하다.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정당정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100분의 30의 금액을 정당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정책연구소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보조

금의 일부를 매칭펀드로 제공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을 참고하여 법인과 단체의 기부는 금지하고,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하는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당정책연구소의 자원을 효율적·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계 및 감사 보고 관련 제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회계 및 감사 보고 방식을 참고하여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과적인 차원에서 모색해볼 수 있는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과제들 중 중장기 과제 수행 비율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정당정책연구소가 정당의 매니페스트와 정책공약집 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또는 여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에 기반하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조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공동의 연구 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연구소 평가지표를 토대로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정당정책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해외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교육 활동을 중시하고 많은 비중을 두는 것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교육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거의 전적으로 국고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정당재단과 같은 민주시민교육 기능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당정책연구소의 교육 활동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경우 교육 활동이 미진한 동시에 그 대상이 당원과 당직자 등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책

연구소가 다양한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교육 활동과 연계한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독일의 정치재단의 경우 재능 있는 젊은 인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외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정치적인 영역의 민주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도 이와 같은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홍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온라인 홍보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정책 홍보의 수단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콘텐츠를 홍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각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심적인 연구성과는 영어로 자료집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배포한다면 백젠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한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가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학술적 공론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과거 한국은 정당들의 조직적 동원 경쟁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금권선거와 부정부패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고비용의 정치구조가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와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책에 기반한 건전한 선거 경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이후에도 정책 추진과 실현에 있어서 혼동과 논란이 가중되어 책임정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저효율의 정치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17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수준 정책 정당화를 기치로 내건 열린우리당이 승리를 하였다. 1인 2표 병립제 도입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원내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치 선진화 구현이라는 기치 하에 정당정책연구소의 설립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04년 3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정당정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토대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다.

정당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물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인력과 예산에 걸맞지 않게 활동이 부진하였다; 계획성이 없이 정치적 상황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과제들이 1개월 이하의 초단기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의 정책 개발에 소홀하였다; 수행 연구과제 대부분이 내부 연구진에 의하여 진행되어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특정 분야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와 정책 개발의 성과에 대한 자료집 발간이나 홍보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당의 선거용 부속기관이라고 인식되어온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떻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와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현실을 진단하고,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상을 가지며,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정당이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와 요구들을 파악하여 구체화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홍보하는 역할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정당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인 시설과 전문적인 연구 인력,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기반으로 정당의 가치·이념, 정책, 교육 등과 관련한 업무들을 관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들을 기반으로 정당의 가치, 이념, 정책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당원 및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분석 작업은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원적 차원과 성과적 차원의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먼저 자원적 차원은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정당정책연구소의 다른 자원인 시설이나 인력·조직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불어 정책연구소의 재정 조달 방식은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정당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당정책연구소의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개발비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원 수 등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성과적 차원은 정당정책연구소의 기능과 활동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정당정책연구소가 정책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주제의 다양성이나 토론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떠한 위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정당정책연구소가 거의 전적으로 국고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정당의 선거용 부속기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그 활동이 정파적인 색채가 강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참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매년 정책연구소(Think Tank)와 관련한 평가보고서(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를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된 정당정책연구소들 중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는 39개 정당정책연구소들 중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의 평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된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사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Ⅲ.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당정책연구소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에서 정책선거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정당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정당정책연구소 매년 제출하는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각 정당정책연구소가 활동적 차원에서 어떠한 특징과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떠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당정책연구소의 수입과 지출 분석, 조직 구성 분

석, 활동 내용과 실적 분석, 연구와 정책 개발 추진 기간 분석, 연구와 정책 개발 주체와 방법 분석, 홍보방법 비교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의 추이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참고할 수 있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발굴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기반한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와 정책선거와 관련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문성 확보 방안, 재정 자립성 확보 방안, 회계 보고 개선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해외 민주국가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점들을 토대로 적실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료 조사에 기반한 문헌연구가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본 연구는 해외 민주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의 경우 해당 정당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다.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의 경우 언어 문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정책연구소의 경우 이용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와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한 보고서와 연구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은 기존에 이와 관련하여 출간된 논문과 단행본들을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정책연구소가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최근의 추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2장. 민주주의와 정책: 정당정책연구소의 의의, 역할, 평가

I. 민주주의의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에 기반한 선거와 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선거와 책임정치가 민주주의 하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정책들을 제시하여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약한 정책들을 임기 중에 충실히 수행하고, 차기 선거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치적 순환구조이다 (조진만 2008; 최준영 2008).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경쟁적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원칙적이고 정략적인 정당정치의 병폐들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는 정치권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주체인 정치권과 유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가급적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먼저 정당 차원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정책에 관심이 없고, 인물이나 지역 등과 같은 비정책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투표 결정을 내린다면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 개발을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정당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특정 정책들을 선거에서 표방할 경우 필연적으로 지지 세력의 분열과 반대 세력의 결집을 이끌 수 있다(Fiorina 1989). 이러한 점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다시 말해 정권의 유지와 장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정치적 부담은 정책선거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정당은 모호한 정책,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을 남발하거나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공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유권자의 관점에서 정책 기반 투표를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해하고, 그 정책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손익을 제공할 것인지를 계산하며 투표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합리적 유권자에게 이러한 투표 선택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경우 합리적 유권자는 의도적으로 정책에 무지한 행태(*rational ignorance*)를 보이게 된다고 논리를 전개한다(Downs 1957).

하지만 정책선거와 책임정치가 잘 구현되고 있는 서구 민주국가들의 경우 정당들이 매니페스토의 형태로 제시하는 정책과 정권을 장악한 이후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Robertson 1987). 이 때 정당이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와 요구들을 파악하여 구체화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홍보하는 역할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Dickson 1972; 강원택 외 2006; 박명준 2012). 다시 말해 정당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인 시설과 전문적인 연구 인력,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기반으로 정당의 가치·이념, 정책, 교육 등과 관련한 업무들을 관장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II. 정당정책연구소의 의의와 역할

정책연구소(싱크탱크, Think Tank)는 기본적으로 정책 지향(policy oriented) 연구와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국내외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와 대중이 공공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informed)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소는 일반적으로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연구·분석하고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McGann 2019).

이 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정부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독립적으로 운용된다(Weiss 1992). 둘째, 정책연구소는 정책 지향적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공정책의 과정과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의 언론 기고, 논문 발표,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 활동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공정책 형성과 시행 등에 자신의 활동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Pugliaresi and Berliner 1989). 셋째,

정책연구소는 정책적인 방법론과 평가에 익숙하다. 따라서 정책연구소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개혁적인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통하여 누구와 접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어느 단계에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넷째, 정책연구소는 정책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의제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 또한 정치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이재철 외 2008).

정책연구소는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정책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기업이 설립한 정책연구소, 정당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구분할 수 있다(강원택 외 2006).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정부 부문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 정책연구소와 지방정부의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와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 부문 정책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황윤원 · 김재홍 2011).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당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2004년에 개정된 정당법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의 경우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정당법에 의하면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과는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당법 제 38조 1항). 또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에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8조 2항).

이처럼 정당정책연구소를 법제화한 취지는 정당정치를 정책 대결로 유도함으로써 정당들 간의 과도한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을 통하여 책임정당의 구현과 정당정치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김형준 · 김도중 2011). 정당정책연구소 설립은 정책 정당화를 통하여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정책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당의 이념과 정강에 부합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치를 정쟁이 아닌 건전한 정책 대결로 이끌어 정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형준 · 김도중 2011).

한국에서 정당정책연구소 설립의 근거가 법제화됨에 따라 과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열린우리당은 독일의 에베르트 재단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 8월 「열린정책연구원」을 발족시켰다. 한나라당은 1995년에 설립한 「여의도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였다. 민주

노동당은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당은 「국가전략연구소」, 국민중심당은 「국민중심정책연구원」을 각각 설립하였다(이재철 외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정당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당 산하 「바른미래연구원」, 민주평화당 산하 「민주평화연구원」, 정의당 산하 「정의정책연구소」, 민중당 산하 「민중정책연구원」, 대한애국당 산하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일곱 개 정당정책연구소가 연간 활동실적을 보고하였다.

Ⅲ.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의 유형과 평가 모델

정책연구소의 활동범위는 국가별로 차이를 존재하는데, 이 차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반영한다(Stone and Denham 2004). 가장 많은 수의 정책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다원주의적 전통과 개방적인 관료제 등에 힘입어 정책연구소의 활동 영역이 넓은 편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과 더불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원주의적인 정치체계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연구소의 활동 공간이 확대될 수 있었다. 또한 연방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강령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책연구소로부터 각종 자문과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수요가 높은 편이다.

한편 강력한 정당 시스템,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시스템,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어려운 폐쇄적인 관료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활동 공간이 제약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당 중심의 의사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외부의 정책 전문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따라서 정당 소속의 정책연구소는 독일, 벨기에, 영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 정부가 정책 연구를 위하여 정당정책연구소에 자금을 배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모종린 2003).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정당정책연구소 모델은 크게 독일식과 미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정당정책연구소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기구로 정치재단의 형태로 존재하며,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적 성격의 정책 네트워크나 정책 공동체로서 의회나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중점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1. 독일의 정치재단 유형

한국처럼 전적으로 국고 지원에 의존하는 독일의 정치재단은 한국의 정당정책 연구소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서현진·임유진 2016). 독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에 직접 소속된 정책연구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섯 개의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이 존재한다. 연방의회 선거에서 네 번 이상 5%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은 특정한 정치재단을 지정하여 국가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재단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한스 자이델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하인리히 뵐 재단(Henrich Boll Foundation),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 Luxemburg Foundation) 등이 있다. 이 중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경우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Union)과 연계되어 있다(한의석 2015).

독일의 정치재단은 연계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독립적인 공익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일의 정치재단은 연계 정당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을 위한 정책 개발 활동보다는 공익 차원의 연구와 시민교육에 집중한다(조진만 2014). 특히 독일의 정치재단은 연방과 주의 정치교육원 외에 가장 활발하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정치재단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익적인 정치교육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각 정치재단이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¹⁾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독일의 정치재단은 자체 기금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국가 지원금에 의하여 운영된다. 정치재단별 국고 지원액은 연방의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독일 정치재단의 재정은 의회, 연방감사원, 자금 조달에 관련된 각 부처의 공적인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정당정책연구소 기능을 하는 정치재단이

1) 1976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에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모여 만든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침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제시된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 금지, 학문과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쟁을 그대로 교육에 구현, 학생들의 정치적 행위 능력 신장이다.

연계 정당이 아닌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운영됨에 따라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공익적 성격과 독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한의석 2015).

2. 미국의 싱크탱크 유형

미국에서 정당의 싱크탱크가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 수준 제한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당들은 정당 자체적으로 정책 의제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이 오랜 전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독일과 달리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적 성격을 갖고, 정책 네트워크나 정책 공동체로서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정광호 2005).

따라서 미국의 경우 명확하게 정당정책연구소라고 부를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다만 일부 싱크탱크의 경우 정당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정책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싱크탱크도 여전히 비영리적 성격의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서현진·임유진 2016).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재정 수입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을 통하여 충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정치재단들과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높은 기부금 의존성은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이나 고액 기부자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한의석 2015).

전반적으로 볼 때 정당과의 연계성이 독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정책 지향적 연구기관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책 아이디어의 생산과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정치적 소통과 홍보를 통하여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책 마케팅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인력 충원에 있어서 퇴임하는 공직자를 싱크탱크에서 충원한다거나 싱크탱크의 연구위원이 정부 부처의 공직자로 취임하는 순환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미국 싱크탱크의 정책 영향력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의석 2015).

3. 정책연구소 평가 모델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정책 의제(Policy Agenda) 구체화 단계, 정책 형성(Policy Formation) 단계,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 단계 등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단계별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표에 의하여 측정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 지표와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McGann and Johnson 2005).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1989년 위버(Weaver 1989)를 필두로 스톤(Stone 1996), 제이콥슨(Jacobson 1995), 에벨슨(Abelson 1996), 던햄(Denham 1996), 캘러한(Callahan 1999), 플럼터와 래스킨(Plumptre and Laskin 2001), 스트루팍키(Struyk 2003), 리치(Rich 2004) 등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006년에 제임스 맥겐(James McGann)이 세계 각국의 정책연구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면서부터 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황윤원 2013).

정책연구소에 관한 대표적인 평가모델로 맥겐(McGann) 모델, 붐가너(APIA-Bumgarner) 모델, 호블랜드(ODI-Hoveland) 모델, 에벨슨(Abelson)의 정책 단계 모델이 존재한다.²⁾ 이들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된 주요 지표로는 조직의 인적·물적·관리적 역량, 연구 업적의 양과 질, 정책 결정에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황윤원 2011).

1) 맥겐(McGann) 모델

정책연구소의 영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연구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제임스 맥겐(James McGann)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정책연구소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P)’에서는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세계 주요 정책연구소들의 영향력을 평가한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GGTTI)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이 외에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정책연구소 연구센터(Center for Think Tank Studies)가 개발한 지표가 있다(Center for Think Tank Studies 2017). 이 지표는 정책연구소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결정 영향력, 학술 영향력, 사회 영향력, 국제 영향력, 발전 능력의 5가지 척도에 기반하여 중국의 정책연구소들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재철·당위남 2018)을 참조.

맥젠은 정책연구소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 지표(resource indicators), 수요 지표(demand indicators), 영향력 지표(impact indicators)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자원 지표는 주로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수요 지표는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향력 지표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요인들이다.

구체적으로 자원 지표는 재정 수준과 안정도,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접근성, 연구 인력의 수준, 네트워크의 질과 신뢰성 등 인력 자원과 재정 자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수요 지표는 언론 노출 정도, 홈페이지 방문 수, 발표 횟수, 책자 판매 수, 정책보고서 배부 수,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수 등을 포함하여 연구 성과의 외부 확산 능력을 평가한다. 영향력 지표는 정책 입안자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고려된 정책, 사용자의 인식,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자문 역할, 학술지에 출판되거나 인용된 수 등을 포함하여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의 영향력을 평가한다(황윤원 2013).

이후 맥젠 지표는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추가되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요 지표가 세분화되어 활용 지표(utilization indicator)와 산출 지표(output indicator)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자원 지표와 영향력 지표에는 보다 많은 평가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자원 지표에는 전문가 채용·보유 능력, 언론과의 접촉성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영향력 지표에는 수상 경력, 정책 토론·결정에 대한 영향력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이재철 외 2008).

2) 범가너(APIA-Bumgarner) 모델

범가너(Bumgarner)가 주축이 된 공동 연구진은 아라벨라 자선투자자자문단(Arabella Philanthropic Investment Advisors, APIA)이 의뢰한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Bumgarner *et al.* 2006). 글로벌개발센터는 국제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 자본 유동성과 위기 문제, 기후 변화, 경제 성장, 재정, 식량 농업, 보건, 세계화, 불평등, 빈곤, 이민, 인구, 기술 등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연구하는 독립적인 글로벌 정책연구소이다(황윤원 2011).

범가너(APIA-Bumgarner) 모델은 글로벌개발센터의 주요 3개 사업인 백신시장 확대 사업, 나이지리아 채무 상환 사업, 인구 동태와 경제 개발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연구주제의 적합 여부, 연구물

의 수준, 의사 소통과 도달 전략 적합 여부, 파트너십의 확립 정도를 중심으로 조직 관리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평가 과정에서 영향력 평가의 계량화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정책연구소 평가모델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황윤원·김재홍 2011).

3) 호블랜드(ODI-Hoveland) 모델

또 다른 정책연구소 평가 연구로는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의 호블랜드(Ingie Hovland)가 개발한 평가 모델이 있다. 호블랜드는 전통적인 학술 연구와 정책연구소 정책 연구 간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후자의 경우 정책 평가 연구의 속성인 감시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ovland 2007). 학술 연구는 주로 동료 평가와 피인용지수를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 연구는 이와 달리 정책 과정에서의 영향력, 실제 정책 변화, 관계 구축 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 및 평가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윤원 2011).

따라서 호블랜드 평가모델은 전략 및 방향성 평가, 경영 평가, 산출 평가, 활용 평가, 성과 및 영향력 평가의 다섯 가지 항목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전략 및 방향성 평가에는 논리적 프레임, 사회 네트워크 분석, 영향 경로 등이 포함된다. 경영 평가는 목적 타당성, 품질 감사, 수평적 평가 등이 포함된다. 산출 평가에는 학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 평가, 정책 및 브리핑 서류 평가, 웹 사이트 평가, 네트워크 평가 등이 포함된다. 활용 평가는 인용 분석의 새로운 영역, 사용자 조사 설문조사 등을 사용한다. 성과 및 영향력 평가는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변화와 혁신 등을 고려한다(이재철·당위남 2018).

4) 에벨슨(Abelson)의 정책 단계 모델

도널드 에벨슨(Donald E. Abelson)의 정책 단계 모델은 정책연구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접근하거나 공중에게 공표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무대 뒤에서 자신들의 정책 의지를 조용히 실현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정책연구소의 진정한 영향력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 과정의 다양한 시점에서 직접지표(direct

indicators)와 간접지표(indirect indicators)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elson 2002).

에벨슨은 정책 과정의 3단계별 지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슈 명료화(Issue Articulation) 단계 지표, 정책 형성(Policy Formulation) 단계 지표,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 단계 지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슈 명료화 단계의 세부 지표들로서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 수요자인 대중 설득 역량, 대중과 정책 결정자의 중간 매체인 언론·엘리트·정부 관계자 설득 역량, 특정 정책 이슈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연합 형성 역량 등을 제시한다. 정책 형성 단계에 필요한 요인들에는 연구, 평가, 브리핑, 증언, 상담, 네트워킹, 이상화 작업, 시위 등이 포함된다. 정책 집행 단계의 지표로는 계약, 자문, 미디어, 교육 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포함된다(황윤원·김재홍 2011).

4. 『2018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정책연구소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P)’에서는 매년 세계 주요 정책연구소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GGTTI)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2019년에 발간된 「2018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는 자원 지표, 활용 지표, 산출 지표, 영향력 지표라는 네 가지 평가지표를 통하여 전 세계 8,162개 정책연구소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McGann 2019).

〈표 1〉 2018 글로벌 정책 인덱스 보고서 평가지표

평가 지표	주요 내용
자원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연구인력 채용/보유 능력 - 재정 지원의 수준, 질, 안정성 - 정책 결정자 및 여타 정책엘리트에 대한 친밀도와 접근성 - 연구진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 능력 및 뛰어난 분석 역량 - 제도적 수용성 - 네트워크의 질과 신뢰성 - 정책 연구 집단과 언론에 대한 접촉성
활용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과 정책 엘리트의 좋은 평판 - 언론 노출과 인용, 웹 접속 수, 의회와 행정부 증언의 양과 질 - 정부기관 브리핑, 임명, 자문 - 연구도서 판매부수 및 보고서 배포 - 연구 결과물의 학술적·대중적 인용과 세미나 참석 정도
산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안 횟수 및 수준 - 연구결과물(책, 논문, 정책브리프 등) 횟수 및 수준 - 뉴스 인터뷰 횟수 및 수준 - 브리핑,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횟수 및 수준 - 연구진의 정부 부처 및 자문기구 추천 횟수 및 수준
영향력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결정자 또는 시민단체가 고려하거나 채택한 권고안 - 이슈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 - 정당, 후보자, 인수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 - 수상 경력 - 학술지 인용 및 등재 - 정책 토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개 행사와 언론과의 접촉성 - 메일링 및 웹 사이트 지배력 - 기존 관행과 관료적 절차를 뛰어넘는 제안 채택 여부

출처: (McGann 2019, 33-34)

「2018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는 전 세계 8,162개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지역별로는 유럽 2,219개(27.2%), 북미 1,972개(24.2%), 아시아 1,829개(22.4%), 아프리카 1,119개(13.7%), 중남미 1,023개(12.5%)의 정책연구소가 평가대상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1,871개, 인도 509개, 중국 507개, 영국 321개, 아르헨티나 227개, 독일 218개 순으로 정책연구소가 많았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중국에 이어 일본 128개, 대만 61개, 한국 60개 순으로 정책연구소가 많았다.

<표 2> 국가별 정책연구소 수

순위	국가	정책연구소 수
1	United States	1,871
2	India	509
3	China	507
4	United Kingdom	321
5	Argentina	227
6	Germany	218
7	Russia	215
8	France	203
9	Japan	128
10	Italy	114
11	Brazil	103
12	Canada	100
13	South Africa	92
14	Sweden	90
15	Mexico	86
16	Netherlands	83
17	Switzerland	78
18	Austria	74
19	Israel	69
20(공동)	Bolivia	66
20(공동)	Spain	66
22(공동)	Chile	64
22(공동)	Colombia	64
22(공동)	Iran	64
25	Taiwan	61

출처: (McGann 2019, 36)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우수 싱크탱크(Top Think Tank in the World)로 선정되었고, 한국 싱크탱크로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20위에 선정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서는 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중

국·인도·일본·한국 등 4개국 대상 싱크탱크 순위(Top Think Tanks in China, Indi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최우수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

<표 3> 전 세계 상위 25개 정책연구소

순위	정책연구소 (국가)
1	Brookings Institution (United States)
2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RI) (France)
3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United States)
4	Bruegel (Belgium)
5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ted States)
6	Fundacao Getulio Vargas (FGV) (Brazil)
7	Chatham House (United Kingdom)
8	Heritage Foundation (United States)
9	RAND Corporation (United States)
1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United Kingdom)
11	Wilson Center. FKA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United States)
1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United States)
13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 (United States)
14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Japan)
15	Cato Institute (United States)
16	Konrad Adenauer Foundation (KAS) (Germany)
1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United States)
18	Fraser Institute (Canada)
19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Germany)
2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Republic of Korea)
21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SWP) (Germany)
22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iddle East Center (Lebanon)
23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 (Belgium)
24	Brookings Institution (India)
25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 (Japan)

출처: (McGann 2019, 61-67)

<표 4> 미국 제외 전 세계 상위 25개 정책연구소

순위	정책연구소 (국가)
1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RI) (France)
2	Bruegel (Belgium)
3	Chatham House (United Kingdom)
4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United Kingdom)
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Republic of Korea)
6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DIIS) (Denmark)
7	Fundacao Getulio Vargas (FGV) (Brazil)
8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 (Belgium)
9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CICIR) (China)
10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Japan)
11	Konrad Adenauer Foundation (KAS) (Germany)
12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Germany)
13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iddle East Center (Lebanon)
14	Clingendael,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therlands)
15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 (Japan)
16	Fraser Institute (Canada)
17	Amnesty International (AI) (United Kingdom)
18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weden)
19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SWP) (Germany)
20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Germany)
21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 (United Kingdom)
22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oscow Center (Russia)
23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 (United Kingdom)
24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 (China)
25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India)

출처: (McGann 2019, 55-60)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범주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류하고 있다. 즉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연계된 기관과 재정적 독립성 등의 기준을 통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책연구소가 범주화되고 있다. 이들 정책연구소들 중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정책연구소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다.

〈표 5〉 정책연구소 유형 분류

범주	정의
자율적 · 독립적 (Autonomous and Independent)	이익집단 혹은 기부자로부터 상당한 독립성 확보하고 유지, 정부로부터 운영과 재정면에서 자율성을 확보(Significant independence from any one interest group or donor and autonomous in its operation and funding from government)
유사 독립적 (Quasi Independent)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 하지만 재정의 많은 부분을 공급함으로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 기부자, 혹은 계약을 맺은 집단이 존재함(Autonomous from government but controlled by an interest group, donor, or contracting agency that provides a majority of the funding and has significant influence over operation of the think tank)
정부 연계 (Government Affiliated)	공식적인 정부 구조의 일부(A part of the formal structure of government)
정부 유사 연계 (Quasi Governmental)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으나 공식적인 정부 구조의 일부가 아님(Funded exclusively by government grants and contracts but not a part of the formal structure of government)
대학 연계 (University Affiliated)	대학의 정책연구센터(A policy research center at a university)
정당 연계 (Political Party Affiliated)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과 연계되어 있음(Formally affiliated with a political party)
기업형(이윤 추구) (Corporate (For Profit))	이윤을 추구하는 공공정책 연구 조직으로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단순히 이윤 추구 기반으로 운영됨(A for-profit public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a corporation or merely operating on a for-profit basis)

출처: (McGann 2019, 13)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는 정당정책연구소(Political Party Affiliated Think Tank)들에 대한 순위도 함께 발표한다. 〈표 6〉은 「2018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에서 발표한 정당정책연구소 가운데 상위 25위에 선정된 정당정책연구소의 국가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독일이 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벨기에 5개, 미국 4개, 영국 2개, 프랑스 2개, 네덜란드 2개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의 1개 기관만이 상위 25위 정당정책연구소로 선정되었다.

<표 6> 전 세계 상위 25개 정당정책연구소

순위	정책연구소 (국가)
1	Konrad Adenaur Foundation (KAS) (Germany)
2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Germany)
3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Germany)
4	Fabian Society (United Kingdom)
5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FEPS) (Belgium)
6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United States)
7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United States)
8	Henrich Boll Foundation (HBS) (Germany)
9	Hanns Seidel Foundation (HSS) (Germany)
10	European Ideas Network (EIN) (Belgium)
11	Demos (United Kingdom)
12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WMCES), FK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Belgium)
13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United States)
14	Party School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hina)
15	Fundacion Jaime Guzman (FJG) (Chile)
16	New Democrat Network (NDN) (United States)
17	Foundation for EU Democracy (Belgium)
18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KA Evert Vermeer Foundation (Netherlands)
19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 (FAES) (Spain)
20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Fondapol) (France)
21	Green European Foundation (GEF) (Belgium)
22	Rosa Luxemburg Foundation (RLS) (Germany)
23	Wiardi Beckman Foundation (WBS) (Netherlands)
24	Terra Nova (France)
25	Fondazione Italianeuropei (Italy)

출처: (McGann 2019, 197-198)

한국의 경우 정당에게 상당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에 사용하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상위 정당정책연구소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점

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한 다양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제3장.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

I.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와 연혁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8조 1항에 따라 중앙당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운영된다. 그리고 「정당법」 제38조 2항과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³⁾ 2018년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은 총 일곱 개로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민주평화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다. [그림 1]은 「정당법」 제35조 3항에 따라 2018년에 정기 보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일곱 개 정당정책연구소들의 변천사를 제시한 것이다.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기존 명칭은 민주정책연구원이었는데 2016년 11월 4일에 그 명칭을 바꾸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기존 명칭은 여의도연구소였는데 2008년 8월 27일에 그 명칭을 바꾸었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연구소인 바른미래연구원은 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이후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2018년 10월 30일에 설립되었다. 정의당의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기존 명칭은 진보정의연구소였는데 2015년 8월 24일에 미래정치센터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2017년 11월 17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평화연구원은 2018년 3월에, 민중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중정책연구원은 2018년 1월 12일에,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정책연구소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에 설립되었다.

3)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하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 제한 등)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제35조(정기보고)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림 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변화: 2013년~2018년

정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더불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2008. 8. 27. 이후)			민주연구원 (2016. 11. 4. 이후)		
자유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2008. 8. 27.)					
바른 미래당				국민정책연구원 (2016. 3. 2.) 바른정책연구소 (2017. 4. 7.)	바른미래당 창당 (2018. 2. 13.)	바른미래연구원 (2018. 10. 30.)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2012. 12. 11.)	미래정치센터 (2015. 8. 24.)		정의정책연구소 (2017. 11. 17.)		
민주 평화당	민주평화당 창당 (2018. 2. 6.)				민주평화연구원 (2018. 3.)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2018. 1. 12.)	
대한 애국당	대한애국당 창당 (2017. 8. 3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 12. 11.)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대한애국당(現 우리공화당)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소(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참조: 1) 여의도연구원의 전신인 여의도연구소는 1995년 2월 3일에 설립
2) 민중정책연구원 설립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인등록일 기준
3) 대한애국당은 2019년 6월 24일에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

이들 정당정책연구소는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표 7>은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된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제시한 것이다. 공통점은 앞서 언급한 「정당법」 제38조 1항에 따라 각 정당들이 당헌에 정당정책연구소를 중앙당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57조 1항, 자유한국당은 당헌 제46조 1항, 바른미래당은 당헌 제74조, 정의당은 당헌 제46조 2항, 민주평화당은 당헌 제107조, 민중당은 당헌 제45조 1항,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헌 제50조 1항에 정당정책연구소의 별도 법인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정책연구소는 중앙당과는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당헌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 대표가 정당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인사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각 정당들마다 당 대표가 정당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57조 2항, 민주평화당은 당헌 제108조 2항, 민중당은 당헌 제45조 3항에 정당정

책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의 임명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당헌 제75조 2항,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헌 제50조에 연구소장의 임명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당규(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원장 등)에 따라 연구원장은 이사장(당 대표 겸임)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이 당 대표가 연구원장을 임명할 때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정당 지도부의 정책연구원장 임명 권한이 더 강한 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애국당(現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된 당규를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중앙조직 규정 내에 정책연구소 관련 규정이 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정책연구소 규정이 있다.

<표 7>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

항목	개정 시기	조항	내용	당규
더불어 민주당	2018. 8. 25.	제57조 (정책연구소)	제57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없음
자유한국당	2019. 1. 17.	제46조 (정책연구소)	제46조(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5. 6. 30. 제정 2018. 2. 2. 개정

바른미래당	2019. 6. 28.	제74조, 제75조 (정책연구원)	제7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제7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당규 (중앙조직 규정) 2018. 3. 12. 제정 2019. 1. 16. 개정
정의당	2017. 10. 21.	제46조 (정책연구소)	제46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정책연구소) 2012. 11. 9. 제정 2019. 5. 4. 개정
민주평화당	2018. 2. 6. 제정	제107조, 제108조 (정책연구원)	제107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제108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당규 (중앙조직규정) 2018. 2. 27. 제정
민중당	2017. 10. 15. 제정	제45조 (정책연구소)	제45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정책연구소 규정) 2017. 11. 1. 제정 2018. 8. 1. 개정

대한 애국당 (현 우리 공화당)	2019. 2. 11.	제50조 (정책연구소)	제50조(정책연구소) ① 국가 발전 및 당의 정강 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없음
-------------------------------	-----------------	-----------------	---	----

출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홈페이지

II.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인력, 재정

각 정당은 당헌과 당규에 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세부 운영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당정책연구소가 얼마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의 조직 관계와 연구소 내부 조직 및 인력 구성, 그리고 재정 운영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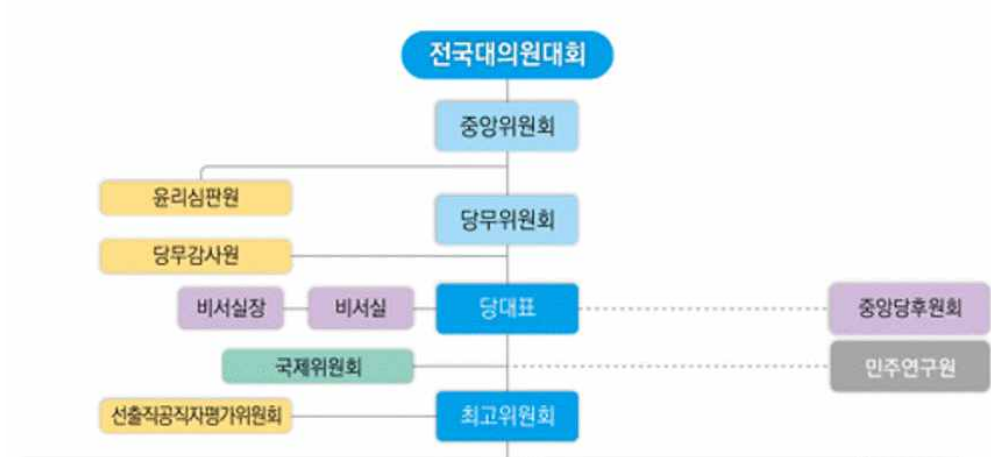
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본 소절에서는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민주평화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중앙당과의 조직 관계, 연구소 내부 조직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민중정책연구원은 홈페이지가 없고, 민중당 홈페이지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민중정책연구원의 조직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1) 민주연구원

[그림 2]는 민주연구원이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도이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위원회 산하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당 대표의 산하 조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조직도상 국제위원회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더불어민주당 조직도



출처: 더불어민주당 조직기구도 중 일부(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제시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밝히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임무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연구원의 임무는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의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사업, 국민·당원의 참여 사업 실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목표는 국가 비전 제시, 선거 승리의 동력 제공, 당의 필수 조직, 국민에게 기억되는 기관이 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민주연구원 조직도



출처: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그림 3]은 민주연구원의 내부 조직도이다. 민주연구원은 이사회, 감사, 원장, 명예원장단(역대 원장), 부원장, 외교안보팀(국제협력), 운영기획실, 전략연구실, 정책연구실, 정책네트워크실로 내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민주연구원은 원장이 명예원장단(역대 원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다른 실들이 부원장 산하에 위치하여 있는 것과 비교하여 외교안보팀(국제협력)은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주연구원 조직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민주연구원은 집단지성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를 부설연구소로 두고 있다. 먼저 집단지성센터는 2017년 7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 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채널(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과 성공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실현 방안 및 국가 모델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집단지성센터의 목표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 모델과 과제 제안,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의 정책적 실행 및 보완, 좋은 어젠다를 제안하고 비판과 대안을 담은 사회적 보고서를 생산하는 플랫폼 구축, 국내외 연구소·학회·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의제 발굴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센터는 2018년 1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는 시장과 정부 실패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국가 비전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동향 분석, 우수 사례 등 정보 교류와 당·정 정책 네트워킹 활성화, 당과 정부에 선제적인 정책 제안을 통하여 민주연구원의 정책 그룹 위상 강화 및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를 담은 새로운 국가 모델을 연구하고,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와 담론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소통 채널을 통하여 열린 정책 공간으로 운영하고, 당·중앙정부·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단위 네트워킹 및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다.

2) 여의도연구원

[그림 4]는 여의도연구원이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의 조직도이다. 이 조직도를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사무총장과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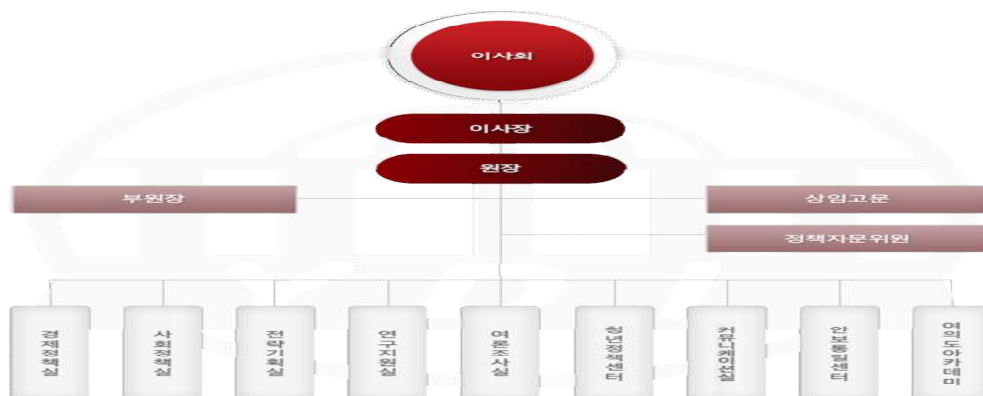
[그림 4] 자유한국당 조직도



❖ 출처: 자유한국당 조직기구도 중 일부(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여의도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제 분야의 정책 발전과 중장기 국가 성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시민·청년 교육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책 정당과 교육 정당을 선도하고 정치 발전과 국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정당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소,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연구소,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연구소,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연구소, 지식 정책 생태계의 중추적인 허브연구소를 ‘5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여의도연구원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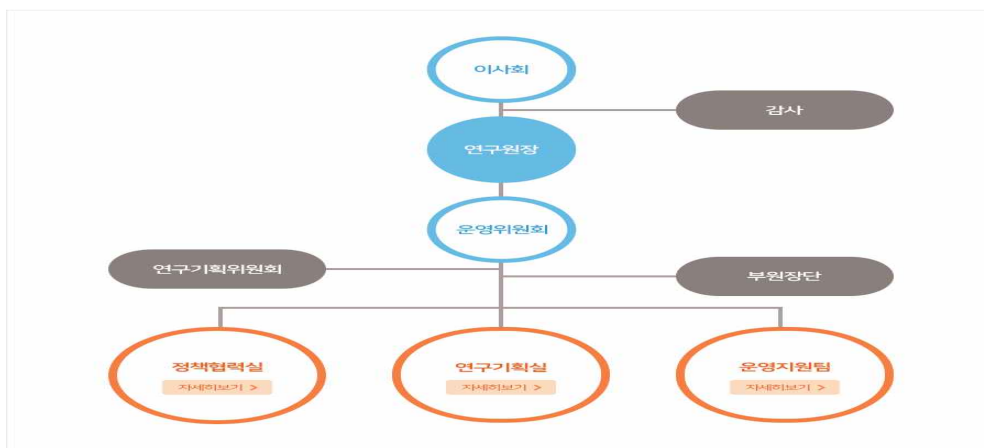
❖ 출처: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그림 5]는 여의도연구원의 내부 조직도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이사회, 이사장, 원장, 부원장, 상임고문, 정책자문위원, 경제정책실, 사회정책실, 전략기획실, 연구지원실, 여론조사실, 청년정책센터, 커뮤니케이션실, 안보통일센터, 여의도아카데미로 내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부원장이 아닌 원장이 모든 실(청년정책센터 포함)들을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원장과 상임고문이 동일 선상에 위치하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의 당규 제16호 4조(임원의 구성) 1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9인 이상 11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당규 제16호 5조(의사회의 구성)에 따라 이사장, 원내 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연구원장,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 이내, 외부 인사 중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로 구성된다.

3) 바른미래연구원

현재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서 바른미래당 조직도가 준비 중이다. 그러므로 바른미래연구원이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바른미래연구소가 비교적 최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생겨난 정책연구소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 간의 조직 구성과 운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바른미래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에 따라 비전과 정책의 연구 개발, 교육 활동, 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 6] 바른미래연구원 조직도



❖ 출처: 바른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그림 6]은 바른미래연구원의 내부 조직도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이사회, 감사, 연구원장, 운영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부원장단, 정책협력실, 연구기획실, 운영지원팀으로 내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2개실과 1개팀을 두고 있으며, 연구기획위원회와 부원장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정의정책연구소

[그림 7]은 정의정책연구소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의당의 조직도이다. 이 조직도를 보면 정의정책연구소는 당 대표 직속으로 비서실, 대변인실과 함께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 정의당 조직도



출처: 정의당 조직기구도 중 일부(정의당 홈페이지)

정의정책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정의당의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데 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이사장, 이사, 소장, 부소장, 연구기획실, 연구행정팀으로 내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당규 제11호 4조(임원의 구성)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당규 제11호 6조(이사회 구성)에 따라 이사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장,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은 인사로 구성된다. 또한 정의정책연구소는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달리 당규 제11호 8조(임원의 자격 제한)에 따라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⁵⁾ 정의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5) 정의당은 민중당과 동일한 정당정책연구소의 임원과 이사회 구성 관련 당규를 가지고 있다. 민중정책연구원도 당규 제13호 4조(임원의 구성)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당규 제13호 7조(이사회 구성)에 따라 이사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장,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은 인사로 구성된다. 또한 민중정책연구원도 당규 제11호 9조

연구소 내부 조직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5) 민주평화연구원

현재 민주평화당 조직도에는 민주평화연구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민주평화연구원이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림 8]은 민주평화연구원의 내부 조직도이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이사회, 감사, 원장, 부원장, 고문/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전략기획실, 정책연구실, 교육연수실로 내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부원장 산하에 모든 실과 위원회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8] 민주평화연구원 조직도



출처: 민주평화연구원 조직기구도 중 일부(민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6)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그림 9]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조직도이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당 대표의 직속기구로서 특보단, 비서실과 함께 위치해 있다. 다만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홈페이지가 없고 인력이 1명뿐이어서 내부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임원의 자격 제한)에 따라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림 9]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직도



출처: 우리공화당 조직기구표 중 일부(우리공화당 홈페이지)

7) 정당정책연구소와 중앙당의 관계 비교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조직도뿐만 아니라 정당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세부 규정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8>은 정당정책연구소의 구성원들이 중앙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주연구원을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장과 부원장은 당헌 제15조(지위와 구성) 2항에 따라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당헌 제19조(지위와 구성) 2항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입기관으로서 800명 이하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민주연구원장은 당헌 제22조(지위와 구성) 2항에 따라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당헌 제28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2항에 따라 상임고문, 국회부의장과 함께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헌 제41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2항에 따라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 심의를 하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당헌 제48조(정책조정회의) 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간의 정책 조정을 하는 정책조정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이처럼 민주연구원장과 부원장은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비교하여 중앙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연구원의 위상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8> 정당정책연구소의 중앙당 의사결정기구 참여

정책 연구소	정당기구	원장	부원장	연구 위원	연구원	근거 조항
민주 연구원	전국대의원대회	○	○	-	-	당헌 제15조
	중앙위원회	○	○	-	-	당헌 제19조
	당무위원회	○	×	-	-	당헌 제22조
	최고위원회	△	×	-	-	당헌 제28조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	○	-	-	당헌 제41조
	정책조정회의 위원구성	×	○	-	-	당헌 제48조
정의정책 연구소	전국위원회	○	×	-	-	당헌 제4장 제2절 제18조
	통합인사위원회	○	×	-	-	당규 제4호 제1장 제4조
바른미래 연구원	전국당원대표자대회	○	○	○	○	당헌 제12조
	당무위원회	○	○	×	×	당헌 제18조
민주평화 연구원	전국당원대표자대회	○	○	-	-	당헌 제12조
	중앙위원회	×	○	-	-	당헌 제18조
	당무위원회	○	×	-	-	당헌 제23조
	최고위원회	△	×	-	-	당헌 제35조

❖ 출처: 더불어민주당 당헌(2018년 8월 25일 전면 개정); 정의당 당헌(2017년 10월 21일 개정); 정의당 당규(2019년 5월 4일 개정); 민주평화당 당헌(2018년 2월 6일 전면 개정); 바른미래당 당헌(2019년 6월 28일 개정)

❖ 참조: ○ 위원으로 참여함, ×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함, △ 위원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발언권은 가짐, -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정의정책연구소를 보면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당헌 제18조(지위와 구성) 2항에 따라 당 대회가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 전국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당규 제4호 1장 4조(통합인사위원회) 1항에 따라 통합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반면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앙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의 구성원이 없다는 규정이 없다.

바른미래연구원의 경우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는 달리 연구원장 또는 부원장이외에도 연구위원과 연구원도 중앙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연구원은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 2항에 따라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의 구성원

이 된다. 그리고 바른미래연구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당헌 제18조(지위와 구성) 2항에 따라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300명 이내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이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 3항에 따라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그리고 민주평화연구원장은 당헌 제23조(지위와 구성) 2항에 따라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당헌 제35조(소집과 의결정족수) 2항에 따라 고문, 국회부의장, 사무총장, 정치연수원장, 윤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과 함께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당헌 제1조(지위와 구성) 3항에 따라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5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여의도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정당의 당헌에 중앙당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장이 중앙당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들을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표 9〉 여의도연구원장의 보고·승인 사안

사안	보고·승인사항	보고·승인대상	해당 당규
보고 사항	연구원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최고위원회의	제12조 1항
	여론조사 - 정치 현안 및 정책 개발 조사 - 공천 조사 및 선거 조사 -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최고위원회의	제15조 3항
승인 사항	연차사업계획서, 예산·결산, 감사 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최고위원회의	제12조 2항

출처: 자유한국당의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년도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분석집.

〈표 9〉는 자유한국당이 당규로 규정한 여의도연구원장의 보고·승인 사안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여의도연구원장은 당규 제12조(보고 및 승인) 1항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장은 당규 제15조(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3항에 따라 정치 현안 및 정책 개발 조사, 여론 동향 분석 보고,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결과들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연구원장은 당헌 제12조(보고 및 승인) 2항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 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민주평화당은 정책연구원장의 보고·승인 사안을 당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정책연구소에 관한 당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인력

<표 10>은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인력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연구원 수는 총 158명이다. 기타 연구원이 63명(39.9%)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석사급 연구원이 52명(33%), 박사급 연구원이 43명(27.2%)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정당정책연구소 인력 현황: 2018년

정책연구소	수치/ 비율	연구원 수				직원 수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민주연구원	수(명)	22	19	29	70	-	-	-
	비율(%)	31.4	27.1	41.4	100	-	-	-
여의도연구원	수(명)	6	18	29	53	1	-	1
	비율(%)	11.3	34	54.7	100	100	-	100
바른미래연구원	수(명)	8	6	1	15	-	-	-
	비율(%)	53.3	40	6.7	100	-	-	-
정의정책연구소	수(명)	2	6	2	10	2	-	2
	비율(%)	20	60	20	100	100	-	100
민주평화연구원	수(명)	3	1	-	4	3	-	3
	비율(%)	75	25		100	100	-	100
민중정책연구원	수(명)	1	2	2	5	-	-	-
	비율(%)	20	40	40	100	-	-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수(명)	1	-	-	1	1	-	1
	비율(%)	100			100	100	-	100
합계	수(명)	43	52	63	158	7	-	7
	비율(%)	27.2	33	39.9	100	100	-	100

❖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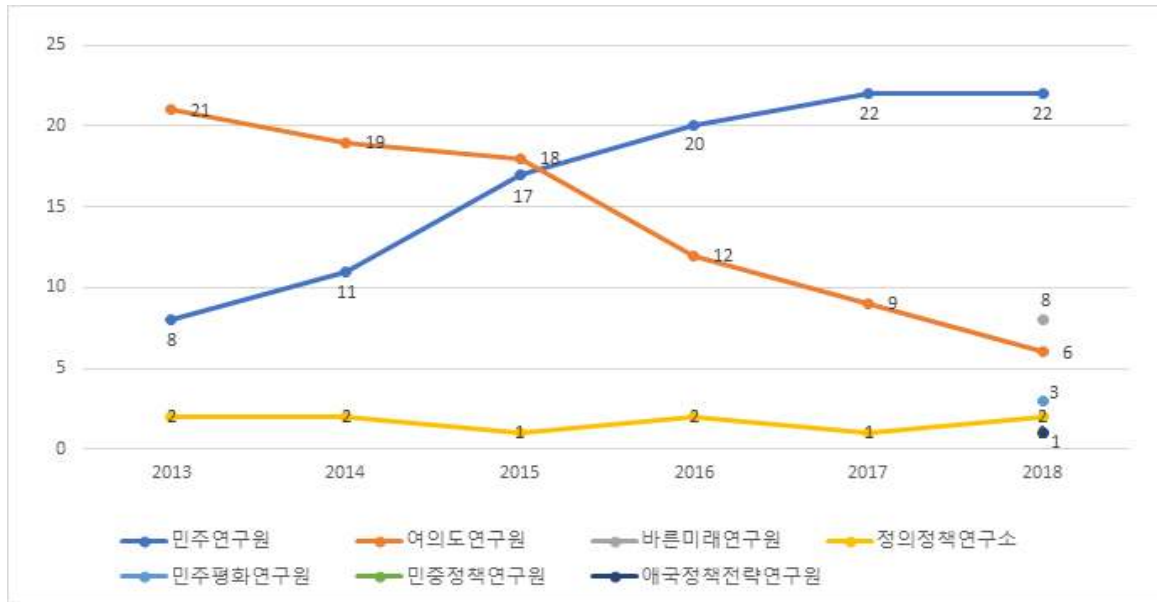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연구원 구성을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연구원 수는 총 70명이다. 기타 연구원이 29명(41.4%)으로 가장 많다. 박사급 연구원이 22명(31.4%)이고, 석사급 연구원이 19명(27.1%)이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원 수는 총 53명이다. 기타 연구원은 29명(54.7%)으로 가장 많다. 석사급 연구원이 18명(34%)이고, 박사급 연구원이 6명(11.3%)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의 연구원 수는 총 15명이다. 박사급 연구원이 8명(53.5%)으로 가장 많다. 석사급 연구원은 6명(40%)이고, 기타 연구원은 1명(6.7%)이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는 총 10명이다. 석사급 연구원이 6명(60%)으로 가장 많다. 박사급 연구원과 기타 연구원은 각각 2명(20%)이다. 민주평화연구원의 연구원 수는 총 4명이다. 박사급 연구원이 3명(75%)으로 가장 많다. 석사급 연구원은 1명(25%)이고, 기타 연구원은 없다. 민중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수는 총 5명이다. 석사급 연구원과 기타 연구원이 각각 2명(40%)이고, 박사급 연구원이 1명(20%)이다. 마지막으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1명만을 두고 있다.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원 구성을 비교해보면, 박사급 연구원 수는 민주연구원이 22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바른미래연구원 8명, 여의도연구원 6명, 민주평화연구원 3명, 정의정책연구소 2명, 민중정책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명의 순서로 적다. 그리고 석사급 연구원 수도 민주연구원이 19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18명, 바른미래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 각각 6명, 민중정책연구원 2명, 민주평화연구원 1명의 순서로 적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석사급 연구원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기타 연구원 수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29명으로 가장 많다. 정의정책연구소와 민중정책연구원은 각 2명, 바른미래연구원은 각 1명의 기타 연구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평화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는 기타 연구원이 없다.

연구원이 아닌 총 직원 수는 7명이며, 모두 자체 고용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직원 수를 살펴보면, 민주평화연구원이 3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 2명, 여의도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각 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은 별도로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

정당정책연구소의 경우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 연구와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 수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박사급 연구원 수를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10] 정당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수 변화: 2013년~2018년 (단위: 명)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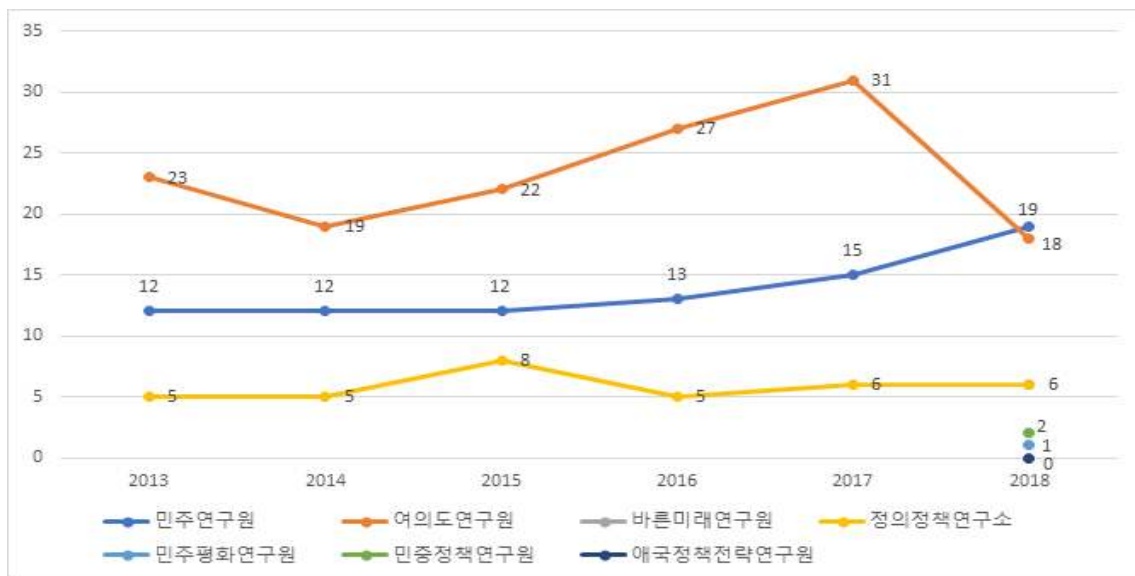
- ❖ 참조: 1) 민주연구원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었음.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진보정의연구소, 2015년과 2016년에는 미래정치센터, 2017년부터 정의정책연구소로 연구소명을 바꾸었으며 각각 당시 정책연구소명의 정기보고를 참고함
- 2) 현 바른미래당 정책연구소인 바른미래연구원은 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한 이후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2018년 10월 30일에 설립되어서 2018년도 박사급 연구원 수만 표기함
- 3) 민중정책연구원은 2018년 1월 12일, 민주평화연구원은 2018년 3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에 설립되어 최근 5년 동안 박사급 연구원 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 박사급 연구원 수만 표기함

민주연구원은 2013년에 8명, 2014년에 11명, 2015년에 17명, 2016년에 20명, 2017년~2018년에 22명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박사급 연구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에 21명, 2014년에 19명, 2015년에 18명, 2016년에 12명, 2017년에 9명, 2018년에 6명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박사급 연구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는 2013년~2014년에 2명, 2015년에 1명, 2016년에 2명, 2017년에 1명, 2018년에 2명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11]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석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2013년~2015년 12명에서 2016년에 13명, 2017년에 15명, 2018년에 1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에 23명에서 2014년에 19명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2명, 2016년에 27명, 2017년에 31명으로 증가한 후에, 2018년에 1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는 2013년~2014년 5명에서 2015년에 8명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5명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17~2018년에 6명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인 석사급 연구원 수 변화의 추세를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2017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에 12명을 줄여서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여 민주정책연구원은 2016년부터 석사급 연구원 수가 서서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는 2015년(8명)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1] 정당정책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수 변화: 2013년~2018년 (단위 : 명)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정기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

- ❖ 참조: 1) 민주연구원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었음.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진보정의연구소, 2015년과 2016년에는 미래정치센터, 2017년부터 정의정책연구소로 연구소명을 바꾸었으며 각각 당시 연구소명의 정기보고를 참고함
- 2) 현 바른미래당 정책연구소인 바른미래연구원은 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한 이후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2018년 10월 30일에 설립되어서 2018년도 석사급 연구원 수만 표기함
- 3) 민중정책연구원은 2018년 1월 12일, 민주평화연구원은 2018년 3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에 설립되어 최근 5년 동안 석사급 연구원 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 석사급 연구원 수만 표기함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원 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2017년까지 석사급 연구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에 급감하고, 박사급 연구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원 수의

변화 추세를 이끈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다만 정당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특히 박사급 연구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개발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표 11>은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활동경비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2018년 총 수입액은 20,881,292천원이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13,869,475천원이었고, 잔액은 7,011,819천원이었다. 총 수입액은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 이월금의 합계이다. 이 중에서 정당이 정책연구소로 지원해주는 정당 지원금이 17,002,913천원(8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타 수입이 2,391,570천원(11.4%)이었고, 전년 이월금이 1,486,809천원(7.1%)이었다.

<표 11> 정당정책연구소 활동경비: 2018년 (단위: 천원, 이하 동일)

정책 연구소	건수/비율	수입				지출	잔액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 이월금	계		
민주 연구원	금액	5,744,836	66,429	196,354	6,007,619	5,720,804	286,815
	비율(%)	95.6	1.1	3.3	100		
여의도 연구원	금액	6,097,397	2,323,279	1,065,453	9,486,129	6,430,155	3,055,974
	비율(%)	64.3	24.5	11.2	100		
바른미래 연구원	금액	3,427,044	81	-	3,427,125	314,423	3,112,703
	비율(%)	100	-	-	100		
정의정책 연구소	금액	800,651	66	225,002	1,025,719	840,585	185,135
	비율(%)	78	-	22	100		
민주평화 연구원	금액	716,245	118	-	716,363	454,914	261,450
	비율(%)	99.9	0.01	-	100		
민중정책 연구원	금액	196,740	1,597	-	198,337	106,594	91,742
	비율(%)	99.2	0.8	-	100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금액	20,000	-	-	20,000	2,000	18,000
	비율(%)	100	-	-	100		
합계	금액	17,002,913	2,391,570	1,486,809	20,881,292	13,869,475	7,011,819
	비율(%)	81.4	11.4	7.1	100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이하 동일)

정당정책연구소별로 활동경비를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은 총 수입액이 6,007,619천원, 총 지출액이 5,720,804천원, 잔액이 286,815천원이었다. 민주연구원은 총 수입액에서 정당 지원금이 5,744,836천원(95.6%), 전년 이월금이 196,354천원(3.3%), 기타 수입이 66,429천원(1.1%)을 차지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총 수입액이 9,486,129천원, 총 지출액이 6,430,155천원, 잔액이 3,055,974천원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총 수입액에서 정당 지원금이 6,097,397천원(64.3%), 기타 수입이 2,323,279천원(24.5%), 전년 이월금이 1,065,453천원(11.2%)을 차지하였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총 수입액이 3,427,125천원, 총 지출액이 314,423천원, 잔액이 3,112,703천원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총 수입액에서 정당 지원금이 3,427,044천원(100%), 기타 수입이 81천원을 차지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총 수입액이 1,025,719천원, 총 지출액이 840,585천원, 잔액이 185,135천원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총 수입액에서 정당 지원금이 800,651천원(78%), 전년 이월금이 225,002천원(22%), 기타 수입이 66천원을 차지하였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총 수입액이 716,363천원, 총 지출액이 454,914천원, 잔액이 261,450천원이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총 수입액에서 정당 지원금이 716,245천원(99.9%), 기타 수입이 118천원(0.01%)을 차지하였다. 민중정책연구원은 총 수입액이 198,337천원, 총 지출액이 106,594천원, 잔액이 91,742천원이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총 수입액에서 정당 지원금이 196,740천원(99.2%), 기타 수입이 1,597천원(0.08%)을 차지하였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총 수입액이 20,000천원, 총 지출액이 2,000천원, 잔액이 18,000천원이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정당 지원금 20,000천원(100%)만이 총 수입액이었다.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수입을 대부분 정당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의도연구원은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비교하여 기타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12>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활동경비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수입에서 정당 지원금을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에 15,797,012천원(93.1%), 2014년에 15,641,889천원(86.5%)에서 2015년에 16,115,947천원(86.9%)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12,165,030천원(78%)으로 감소한 후에, 2017년에 14,848,592천원(79%), 2018년에 17,002,913천원(81.4%)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 수입은 2013년에 243,620천원(1.4%), 2014년에 59,674천원(0.3%), 2015년에 252,136천원(1.4%), 2016년에 59,476천원(0%), 2017년에 522,777천원(3%)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18년에 2,391,570천원(11.4%)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도 여의도연구원의 기타 수입이 다른 정당정

책연구소들과 비교하여 높은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에 1,264,977천원(7.3%)에서 2014년에 2,387,949천원(13.2%)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2,175,041천원(11.7%)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6년에 3,333,548천원(21%), 2017년에 3,453,392천원(18%)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1,486,809천원(7.1%)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수입의 70% 이상을 중앙당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이처럼 재정적 독립성이 낮기 때문에 중앙당이 그 운영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표 12> 정당정책연구소 활동경비: 2013년~2018년

연도	건수/ 비율	수입				지출	잔액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 이월금	계		
2013	금액	15,797,012	243,620	1,264,977	17,305,613	14,917,663	2,387,949
	비율(%)	91.3	1.4	7.3	100		
2014	금액	15,641,889	59,674	2,387,949	18,089,514	15,914,472	2,175,041
	비율(%)	86.5	0.3	13.2	100		
2015	금액	16,115,947	252,136	2,175,041	18,543,126	15,384,537	3,158,588
	비율(%)	86.9	1.4	11.7	100		
2016	금액	12,165,030	59,476	3,333,548	15,558,056	12,104,662	3,453,392
	비율(%)	78	0	21	100		
2017	금액	14,848,592	522,777	3,453,392	18,824,764	17,337,953	1,486,809
	비율(%)	79	3	18	100		
2018	금액	17,002,913	2,391,570	1,486,809	20,881,292	13,869,475	7,011,819
	비율(%)	81.4	11.4	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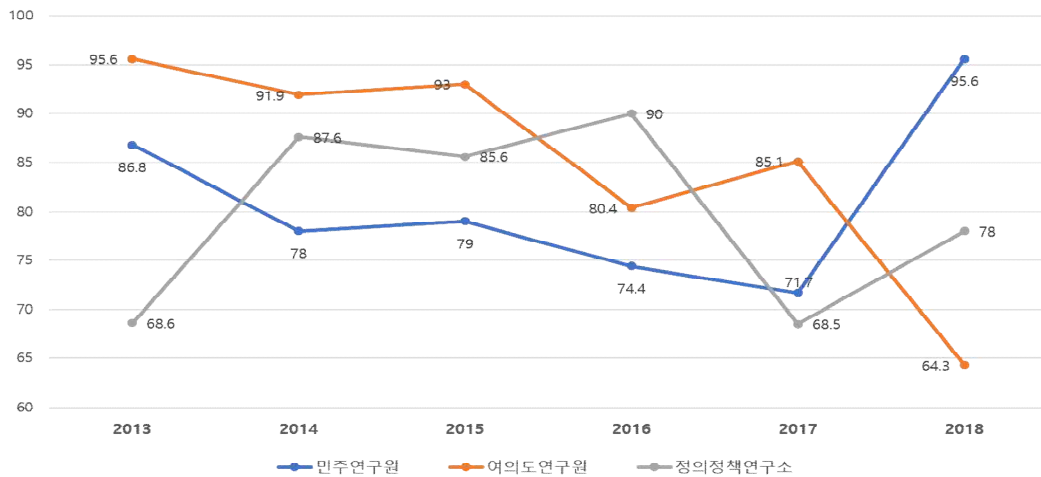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3년~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지출액은 2013년에 14,917,663천원에서 2014년에 15,914,472천원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5,384,537천원, 2016년에 12,104,662천원으로 감소한 후에, 2017년에 17,337,953천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13,869,475천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잔액은 2013년에 2,387,949천원, 2014년에 2,175,041천원에서 2015년에 3,158,588천원, 2016년에 3,453,392천원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1,486,809천원으로 감소한 후에, 2018년에 7,011,819천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12]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별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

금 비율의 변화를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주연구원의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은 2013년에 68.5%에서 2014년에 78%, 2015년에 79%, 2016년에 74.4%, 2017년에 71.7%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95.6%로 증가하였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의 총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은 2013년에 95.6%에서 2014년에 91.9%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93%로 증가한 후, 2016년에 80.4%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85.1%로 다시 증가한 후 2018년에 64.3%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정의정책연구소의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은 2013년에 68.6%에서 2014년에 87.6%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85.6%로 감소한 후, 2016년에 90%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68.5%로 감소한 후에 2018년에 78%로 다시 증가하였다.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을 비교해보면 민주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8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는 특정한 추세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2] 정당정책연구소별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 2013년~2018년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3년~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이처럼 2018년에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이 민주연구원은 2017년 대비 23.9% 포인트 급증한 반면에, 여의도연구원은 2017년 대비 20.8% 포인트로 급감한 이유는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집권 초기에 민주연구원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것과 비교하여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선거 패배로 정권을 내주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정당별 보조금과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 2018년

항목	구분	지급 총액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대한 애국당	민중당
경상 보조금	1/4분기	10,640,875	3,186,406	3,236,527	-	622,251	658,569	6,443	18,951
	2/4분기	10,640,875	3,384,584	3,441,085	2,470,964	637,324	677,581	7,520	21,815
	3/4분기	10,640,875	3,354,208	3,325,899	2,429,484	628,977	662,059	6,923	233,321
	4/4분기	10,640,875	3,354,208	3,325,899	2,429,484	628,977	662,059	6,923	233,321
	총액	42,563,500	13,279,406	13,329,410	7,329,932	2,517,529	2,660,268	27,809	507,408
	비율(%)	100	31.2	31.3	17.2	5.9	6.3	0.1	1.2
선거 보조금	총액	42,563,502	13,538,338	13,764,340	9,883,857	2,549,298	2,710,327	30,080	87,259
	비율(%)	100	31.8	32.3	23.2	6	6.4	0.1	0.2
여성 추천 보조금	총액	2,736,525	2,369,078	256,562	110,884	-	-	-	-
	비율(%)	100	86.6	9.4	4.1	-	-	-	-
장애인 추천 보조금	총액	547,305	482,531	64,773	-	-	-	-	-
	비율(%)	100	88.2	11.8	-	-	-	-	-
총액	총액	88,410,832	29,669,353	27,415,085	17,324,673	5,066,827	5,370,595	57,889	594,667
	비율(%)	96.7	33.6	31	19.6	5.7	6.1	0.1	0.7
정책 연구소 지원금	총액	17,002,913	5,744,836	6,097,397	3,427,044	716,245	800,651	20,000	196,740
	경상보조금 중 비율(%)	40	43.3	45.7	46.8	28.5	30.1	71.9	38.8
	총액 중 비율(%)	19.2	19.4	22.2	19.8	14.1	14.9	34.6	33.1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 (2001년~2018년)」 과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1)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위 일곱 개의 정당 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있지만 현재 바른미래당으로 통합되어 제외함. 그러나 국고보조금 중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교하기 위해서 총 지급액 중 각 정당이 받은 보조금 중 일곱 개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만을 포함하여 산출함.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포함되지 않아서 경상보조금과 총액의 합과 비율에 오차가 발생함.

2) 여성추천보조금 =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3) 장애인추천보조금 =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한편 각 정당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상보조금⁶⁾에서 얼마나 많은 액수

6)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

를 정당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정당들이 정책연구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3>은 2018년도에 각 정당들이 수령한 보조금과 정당정책연구소에 지급한 지원금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각 정당들이 수령한 총 보조금은 88,410,832천원으로 경상보조금이 42,563,500천원, 선거보조금이 42,563,502천원, 여성추천보조금이 2,736,525천원, 장애인추천보조금이 547,305천원이었다. 그리고 각 정당별로 수령한 총 보조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9,669,353천원(33.6%)으로 가장 많이 수령하였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7,415,085천원(31%), 바른미래당이 17,324,673천원(19.6%), 정의당이 5,370,595천원(6.1%), 민주평화당이 5,066,827천원(5.7%), 민중당이 594,667천원(0.7%), 대한애국당이 57,889천원(0.1%) 순으로 수령하였다.

여기서 정당 운영에 사용되는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47,305천원(31.2%)으로 가장 많이 수령하였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3,329,410천원(31.3%), 바른미래당이 7,329,932천원(17.2%), 정의당이 2,660,268천원(6.3%), 민주평화당이 2,517,529천원(5.9%), 민중당이 507,408천원(1.2%), 대한애국당이 27,809천원(0.1%)을 수령하였다.

특히 각 정당들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으로 정당정책연구소를 지원하는 액수에 차이가 있다. 각 정당들은 총 42,563,500천원의 경상보조금에서 17,002,913천원(40%)을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6,097,397천원(45.7%)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5,744,836천원(43.3%), 바른미래당은 3,427,044천원(46.8%), 정의당은 800,651천원(30.1%), 민주평화당은 716,245천원(28.5%), 민중당은 196,740천원(38.8%) 대한애국당(現 우리공화당)은 20,000천원(71.9%) 순으로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각 정당들이 지급 받은 총 지원금 대비 정당정책연구소에 지급한 지원금 비율을 살펴보면 대한애국당(現 우리공화당)이 34.6%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민중당이 33.1%, 자유한국당이 22.2%, 바른미래당이 19.8%, 더불어민주당이 19.4%, 정의당이 14.9%, 민주평화당이 14.1%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당의 경상보조금과 총 지원금 대비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이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이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을 더 높이도록 지원금 지급 비율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당정책연구소가 중앙당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이외에 후원회 등을 만들어서 기타 수입을 더 많이 올려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후원회는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을 참고하여 법

분·지급한다. ③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인과 단체의 기부는 금지하되, 소액 다수의 기부는 장려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정당별 경상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과 총 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 비교: 2013년~2018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 (2001년~2018년)」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그림 13]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별 경상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과 총 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당별로 경상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에 31.6%, 2014년에 32.7%, 2015년에 34.2%, 2016년에 36.9%, 2017년에 41.4%, 2018년에 43.3%로 해가 지날수록 민주정책연구원에 지급하는 지원금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13년에 58.7%, 2014년에 54.6%, 2015년에 48%, 2016년에 37.5%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70.1%로 증가한 후에, 2018년에 45.7%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정의당은 2013년~2015년에 각각 30%, 2016년~2017년에 각각 30.3%, 2018년에 30.1%로 정의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지원금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 비율이 해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 2018년에 다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원금 비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군소 정당이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거대 정당과 동일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군소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정당별로 총 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에 31.6%에서 2014년에 15.7%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34.2%로 증가한 이후에, 2016년에 18.4%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17년에 20.8%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 19.4%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13년에 58.7%, 2014년에 26.7%, 2015년에 48.1%, 2016년에 18.1%, 2017년에 36%, 2018년에 22.2%로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정의당은 2013년에 30%에서 2014년에 15%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30%로 증가한 이후, 2016년에 16.5%, 2017년 15.1%, 2018년에 15%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4> 정당정책연구소별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율: 2013년~2017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합계 (%)	14,917	9369 (63)	14914	11899 (75)	15385	10895 (71)	15965	10979 (67)	20861	14643 (70)
민주 연구원	4,306	850 (20)	5462	3219 (59)	5900	3308 (56)	5242	2558 (49)	7036	3653 (52)
여의도 연구원	9,804	8190 (84)	9844	8303 (84)	8825	7184 (81)	9040	7357 (81)	9317	7509 (81)
국민정책 연구원	-	-	-	-	-	-	925	606 (66)	2898	2680 (92)
바른정책 연구소	-	-	-	-	-	-	-	-	626	280 (45)
정의정책 연구소	807	329 (41)	608	377 (62)	659	403 (61)	758	458 (60)	984	521 (53)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3년~2017년 연간활동실적분석집;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3년~2018년 연간 활동실적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1) 단위: 백만원

2)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는 현재의 바른미래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소멸되었음

한편 <표 14>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⁷⁾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율은 2013년 63%에서 2014년에 75%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71%, 2016년에 67%로 감소한 이후에, 2017년에 70%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7) 2013년부터 2018년까지가 아니라 2017년까지만 자료를 구성한 이유는 2018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가 아직 출판되지 않아서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지출액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정기보고에서 총 지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부 지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2017년도까지의 수치를 제시하였다.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은 2013년에 20%에서 2014년에 59%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56%, 2016년에 49%로 감소한 이후, 2017년에 52%로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2014년에 각각 84%, 2015년~2017년에 각각 81%로서 80% 초중반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2013년에 41%에서 2014년에 62%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61%, 2016년에 60%, 2017년에 5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바른미래연구원 설립 이전에 있었던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를 살펴보면 국민정책연구원은 2016년에 66%에서 2017년에 92%로 증가하였고, 바른미래연구소는 2017년에 총 지출액의 45%를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여의도연구원이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비교하여 정책개발비를 80%대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연구원은 2016년도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50%대로 정책개발비를 지출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도 2014년부터 50~60% 초반대로 정책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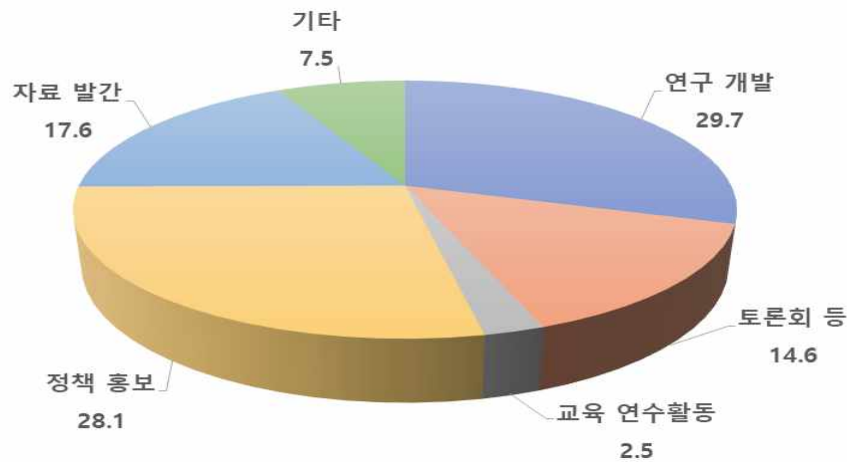
Ⅲ.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1.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 개관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활동실적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최근 2018년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활동실적들과 함께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들도 함께 분석하여 활동실적의 추세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14]는 2018년 7개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그 실적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연구 개발(29.3%)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 홍보(28.1%), 자료 발간(17.6%), 토론회 등(14.6%), 기타(7.5%), 교육 연수(2.5%) 순으로 활동실적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14] 정당정책연구소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2018년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연구진이 작성

❖ 참조: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 기한 부족으로 정기보고에서 주요 활동실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함(이하 동일)

다음으로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각각 어떤 종류의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당정책연구소별 활동 형태를 파악한 내용은 <표 1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민주연구원은 정책 홍보가 193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구 개발은 122건(19.1%), 토론회 등은 118건(18.5%), 자료 발간은 98건(15.3%), 기타 활동은 97건(15.2%), 교육 연수는 11건(1.7%)이었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연구 개발이 162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책 홍보가 127건(30.4%), 자료 발간이 60건(14.4%), 토론회 등이 51건(12.2%), 기타 활동이 14건(3.3%), 교육 연수는 4건(1%)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연구 개발이 12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토론회 등이 9건(29%), 교육 연수/정책 홍보/자료 발간이 각각 3건(9.7%), 기타 활동은 1건(3.2%)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연구 개발이 130건(5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료 발간이 43건(17.2%), 정책 홍보가 32건(12.8%), 토론회 등이 22건(8.8%), 교육 연수가 12건(5.2%), 기타 활동은 10건(4%)이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토론회 등이 27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료 발간이 18건(30.5%), 정책 홍보가 14건(23.7%), 연구 개발/교육 연수/기타 활동은 없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정책 홍보가 89건(38.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료 발간이 64건(27.7%), 연구 개발이 58건(25.1%), 토론회 등이 11건(4.8%), 교육 연수가 9건(3.9%)이었다. 기타 활동은 없었다.

정리하면 민주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은 정책 홍보를 가장 많이 하는 것과 비교하여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는 연구 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중점을 두는 활동이 다르다는 점이 파악된다.

<표 15> 정당정책연구소별 활동실적: 2018년

정책 연구소	건수/비율	연구 개발	토론회 등	교육 연수 활동	정책 홍보	자료 발간	기타	합계
민주 연구원	수(건)	122	118	11	193	98	97	639
	비율(%)	19.1	18.5	1.7	30.2	15.3	15.2	100
여의도 연구원	수(건)	162	51	4	127	60	14	418
	비율(%)	38.8	12.2	1	30.4	14.4	3.3	100
바른미래 연구원	수(건)	12	9	3	3	3	1	31
	비율(%)	38.7	29	9.7	9.7	9.7	3.2	100
정의정책 연구소	수(건)	130	22	13	32	43	10	250
	비율(%)	52	8.8	5.2	12.8	17.2	4	100
민주평화 연구원	수(건)	-	27	-	14	18	-	59
	비율(%)	-	45.8	-	23.7	30.5	-	100
민중정책 연구원	수(건)	58	11	9	89	64	-	231
	비율(%)	25.1	4.8	3.9	38.5	27.7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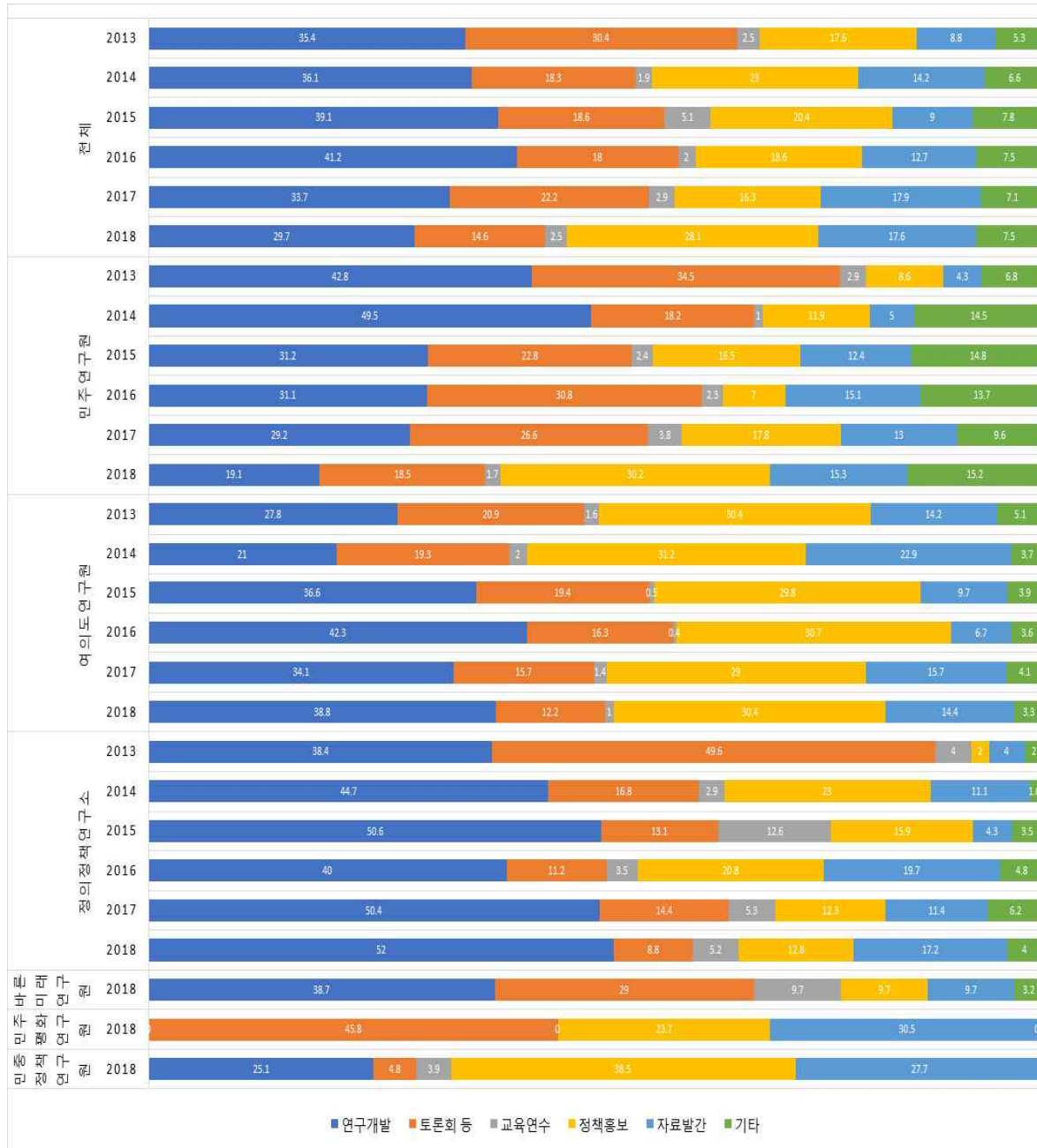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연구진이 작성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활동실적을 형태별 비율로 살펴보면, 연구 개발은 정의정책 연구소가 5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38.8%, 바른미래연구원 38.7%, 민중정책연구원 25.1%, 민주연구원 19.1%의 순서로 나타났다. 토론회 등은 민주평화연구원이 45.8%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바른미래연구원 29%, 민주연구원 18.5%, 여의도연구원 12.2%, 정의정책연구소 8.4%, 민중정책연구원 4.8% 순이었다. 교육 연수는 바른미래연구원이 9.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 5.2%, 민중정책연구원 3.9%, 민주연구원 1.7%, 여의도연구원 1%를 차지하였다. 정책 홍보는 민중정책연구원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30.4%, 민주연구원 30.2%, 민주평화연구원 23.7%, 정의정책연구소 12.8%, 바른미래연구원 9.7%를 기록하였다. 자료 발간은 민주평화연구원이 30.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민중정책연구원 27.7%, 정의정책연구소 17.2%, 민주연구원 15.3%, 여의도연구원 14.4%, 바른정책연구원 9.7% 순서로 나타났다. 기타 활동은 민주연구원이 15.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 4%, 여의도연구원 3.3%, 바른미래연구원 3.2% 순서를 보였다.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다른 활동들과 비교하여 교육 연수의 비율이 1~10% 이내이거나 교육 연수를 아예 실시하지 않아서 교육 연수 활동이 매우 저조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당정책연구소가 정책 개발 이외에

도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실시 확대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5]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비중 변화: 2013년~2018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참조: 바른미래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은 모두 2018년도에 설립되어서 2018년도 활동실적 비율만을 표기함

[그림 15]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활동형태별로 어떤 중

류의 활동에 비중을 두어 왔는지를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전체 정당정책 연구소들의 연구 개발 활동 비율은 2013년에 35.4%, 2014년에 36.1%, 2015년에 39.1%, 2016년에 41.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33.7%, 2018년에 29.7%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18년도의 경우 이전년도들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은 특징도 보였다.

토론회 등 활동 비율도 2013년에 30.4%, 2014년에 18.3%, 2015년에 18.6%, 2016년에 18%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22.2%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2018년에 14.6%로 감소하였고, 2018년도의 경우 이전년도들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교육 연수 활동 비율은 다른 활동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 2.5%, 2014년에 1.9%에서 2015년에 5.1%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2%, 2017년에 2.9%, 2018년에 2.5%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책 홍보 활동 비율은 2013년에 17.6%, 2014년에 23%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20.4%, 2016년에 18.6%, 2017년에 16.3%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2018년에 28.1%로 다시 증가하여 2018년도의 경우 이전 년도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자료 발간 활동 비율은 2013년에 8.8%에서 2014년에 14.2%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9%로 감소한 이후, 2016년에 12.7%, 2017년에 17.9%, 2018년에 17.6%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타 활동은 2013년에 5.3%, 2014년에 6.6%, 2015년에 7.8%, 2016년에 7.5%, 2017년에 7.1%, 2018년에 7.5%로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이전 년도들과 비교하여 2018년에 연구 개발과 토론회 등 활동 비율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정책 홍보 활동 비율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당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 비율은 2013년에 42.8%, 2014년에 49.5%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31.2%, 2016년에 31.1%, 2017년에 29.2%, 2018년에 19.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토론회 등 활동 비율은 2013년에 34.5%에서 2014년에 18.2%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2.8%, 2016년에 30.8%로 증가한 이후, 2017년에 26.6%, 2018년에 18.5% 다시 감소하였다. 교육 연수 활동 비율은 2013년에 2.9, 2014년에 1%, 2015년에 2.4%, 2016년에 2.3%, 2017년에 3.8%, 2018년에 1.7%로 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정책 홍보 활동 비율은 2013년에 8.6%, 2014년에 11.9%, 2015년에 16.5%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7%로 감소한 이후, 2017년에 17.8%, 2018년에 30.2%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6년을 제외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 홍보 활동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료 발간 활동 비율은 2013년에 4.3%, 2014년에 5%, 2015년에 12.4%, 2016년에 15.1%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13%로 감소한 이후, 2018년에 15.3%로 다시 증가하였다. 기타 활동 비율은 2013년에 6.8%에서 2014년에 14.5%,

2015년에 14.8%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13.7%, 2017년에 9.6%로 감소한 이후, 2018년에 15.2%로 다시 증가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 비율은 2013년에 27.8%에서 2014년에 21%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36.6%, 2016년에 42.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34.1%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38.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회 등 활동 비율은 2013년에 20.9%, 2014년에 19.3%, 2015년에 19.4%, 2016년에 16.3%, 2017년에 15.7%, 2018년에 12.2%로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육 연수 활동 비율은 2013년에 1.6%, 2014년에 2%, 2015년에 0.5%, 2016년에 0.4%, 2017년에 1.4%, 2018년에 1%로 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정책 홍보 활동 비율도 2013년에 30.4%, 2014년에 31.2%, 2015년에 29.8%, 2016년에 30.7%, 2017년에 29%, 2018년에 30.4%로 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자료 발간 활동 비율은 2013년에 14.2%에서 2014년에 22.9%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9.7%, 2016년에 6.7%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5.7%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14.4%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 활동 비율은 2013년에 5.1%, 2014년에 3.7%, 2015년에 3.9%, 2016년에 3.6%, 2017년에 4.1%, 2018년에 3.3%로 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 비율은 2013년에 38.4%, 2014년에 44.7%, 2015년에 50.6%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40%로 감소한 이후, 2017년에 50.4%, 2018년에 52%로 다시 증가하였다. 토론회 등 활동 비율은 2013년에 49.6%, 2014년에 16.8%, 2015년에 13.1%, 2016년에 11.2%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14.4%로 증가한 이후, 2018년에 8.8%로 다시 감소하였다. 교육 연수 활동 비율은 2013년에 4%에서 2014년에 2.9%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2.6%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3.5%로 다시 감소하다 2017년에 5.3%, 2018년에 5.2%로 증가하였다. 정책 홍보 활동 비율은 2013년에 2%에서 2014년에 23%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5.9%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20.8%로 다시 증가하다 2017년에 12.3%, 2018년에 12.8로 감소하였다. 자료 발간 활동 비율은 2013년에 4%에서 2014년에 11.1%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4.3%로 감소한 이후, 2016년에 19.7%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11.4%로 감소하다 2018년에 17.2%로 증가하였다. 기타 활동 비율은 2013년에 2%, 2014년에 1.6%에서 2015년에 3.5%, 2016년에 4.8%, 2017년에 6.2%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 4%로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연구 개발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정책 홍보와 자료 발간 활동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대로 여의도연구원은 연구 개발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토론회 등의 활동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 정책 홍보, 자료 발간 활동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토론회 등의 활동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2.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실적

<표 16>은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연구 개발 활동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였는지, 외부에 의뢰하였는지, 아니면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건수와 비율을 파악하여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전체 연구 개발 활동 건수는 총 484건이다. 이 중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413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에 의뢰한 것이 39건(8.1%),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 32건(6.6%)으로 나타났다.

<표 16> 정당정책연구소별 연구 개발 활동실적의 주체: 2018년

정책연구소	건수/ 비율	자체·단독	외부용역	자체·외부 (공동)	계
민주연구원	수(건)	99	2	21	122
	비율(%)	81.1	1.6	17.2	100
여의도연구원	수(건)	153	2	7	162
	비율(%)	94.4	1.2	4.3	100
바른미래연구원	수(건)	12	-	-	12
	비율(%)	100	-	-	100
정의정책연구소	수(건)	110	17	3	130
	비율(%)	84.6	13.1	2.3	100
민주평화연구원	수(건)	-	-	-	-
	비율(%)	-	-	-	-
민중정책연구원	수(건)	39	18	1	58
	비율(%)	91	7	2	100
합계	수(건)	413	39	32	484
	비율(%)	85.3	8.1	6.6	100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1) '외부용역' 은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등으로 표기된 것임(이하 동일)

2) '자체·외부(공동)' 은 자체·외부(외부전문가)로 표기된 연구 개발 실적으로 그 이외 나머지는 '자체' 로 분류함(이하 동일)

먼저 민주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 건수는 총 122건이었다.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99건(81.1%)로 가장 많았고,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 21건(17.2%), 외부에 의뢰한 것이 2건(1.6%)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 건수는 총 162건이었다.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153건(94.4%),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 7

건(4.3%), 외부에 의뢰한 것이 2건(1.2%)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 건수는 총 12건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경우 모든 연구 개발 활동 건수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 건수는 총 130건이었다.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110건(84.6%), 외부에 의뢰한 것이 17건(13.1%),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 3건(2.3%)이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 건수는 총 58건이었다.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39건(91%), 외부에 의뢰한 것이 18건(7%),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 1건(2%)이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연구 개발 활동실적이 없었다.

다음으로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연구 개발 활동실적별 비율의 크기를 살펴보면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은 ‘자체 > 외부용역 > 자체·외부(공동)’ 순이었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와 민중정책연구원은 ‘자체 > 자체·외부(공동) > 외부용역’ 순이었다. 정당정책연구소별로 보면 자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바른미래연구원으로 100%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민주연구원으로 17.2%이었다. 외부에 의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정의정책연구소로 13.1%로 나타났다.

<표 17>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활동실적의 주체: 2013년~2018년

구분	건수/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체	수(건)	235	298	422	467	536	413
	비율(%)	81.6	86.4	87.4	85.7	91	85.3
외부용역	수(건)	22	23	23	38	41	39
	비율(%)	7.6	6.7	4.8	7	7	8.1
자체·외부 (공동)	수(건)	31	24	38	40	12	32
	비율(%)	10.8	7	7.9	7.3	2	6.6
계	수(건)	288	345	483	545	589	484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표 17>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연구 개발 활동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였는지, 외부에 의뢰하였는지, 아니면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건수와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개발 건수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에 의뢰한 건수와 비율,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수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개발 건수와 비율은 2018

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외부에 의뢰한 건수와 비율은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수와 비율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개발 건수는 2013년에 235건(81.5%), 2014년에 298건(86.1%), 2015년에 422건(87.4%), 2016년에 467건(85.7%), 2017년에 536건(91%)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엔 413건(85.3%)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 개발 건수는 2013년에 22건(7.6%), 2014년에 23건(6.7%), 2015년에 23건(4.8%), 2016년에 38건(7%), 2017년에 41건(7%), 2018년에 39건(8.1%)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외부에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개발 건수는 2013년에 31건(10.8%), 2014년에 24건(7%), 2015년에 38건(7.9%), 2016년에 40건(7.3%)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12건(2%)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32건(6.6%)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개발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개발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내부적인 연구 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에 기반하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8>은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연구 개발 활동실적을 추진기간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전체 연구 개발 활동은 총 484건이었다. 이 중에서 추진기간이 1개월 이하는 338건(69.8%), 2개월 이하는 56건(11.6%), 3개월 이하는 33건(6.8%), 4개월 이하는 36건(7.4%), 5개월 이하는 11건(2.3%), 6개월 이하는 7건(1.4%), 6개월~12개월은 3건(0.6%), 12개월 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은 총 122건이었다. 이 중에서 추진기간이 1개월 이하가 76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4개월 이하는 19건(7.4%), 2개월 이하는 15건(12.3%), 5개월 이하는 5건(4.1%), 3개월 이하와 6개월~12개월은 각각 3건(2.5%)이었다. 6개월 이하는 1건(0.8%)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은 총 162건이었다. 추진기간 1개월 이하가 127건(78.4%)으로 가장 많았다. 2개월 이하는 25건(15.4%), 3개월과 4개월 이하는 각각 5건(3.1%)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연구 개발 활동은 총 12건이었다. 모두 연구 개발 활동은 1개월 이하로 진행되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은 총 130건이었다. 추진기간이 1개월 이하가 86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개월 이하는 15건(11.5%), 4개월 이하는 12건(9.2%), 3개월과 5개월 이하는 각각 6건(4.6%), 6개월 이하는 5건(3.8%)

이었다. 민중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은 총 158건이었다. 추진기간이 1개월 이하가 37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3개월 이하는 19건(32.8%), 2개월 이하는 1건(1.7%)이었다.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경우 연구 개발 추진기간이 1개월 이하로 단기간에 종료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활동들을 주로 실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연구 개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 추진기간별 분류

정책 연구소	건수/비율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6~12개월	12개월 이상	계
민주 연구원	수(건)	76	15	3	19	5	1	3	-	122
	비율(%)	62.3	12.3	2.5	15.6	4.1	0.8	2.5	-	100
여의도 연구원	수(건)	127	25	5	5	-	-	-	-	162
	비율(%)	78.4	15.4	3.1	3.1	-	-	-	-	100
바른미래 연구원	수(건)	12	-	-	-	-	-	-	-	12
	비율(%)	100	-	-	-	-	-	-	-	100
정의정책 연구소	수(건)	86	15	6	12	6	5	-	-	130
	비율(%)	66.2	11.5	4.6	9.2	4.6	3.8	-	-	100
민주평화 연구원	수(건)	-	-	-	-	-	-	-	-	-
	비율(%)	-	-	-	-	-	-	-	-	-
민중정책 연구원	수(건)	37	1	19	-	-	1	-	-	58
	비율(%)	63.8	1.7	32.8	-	-	1.7	-	-	100
합계	수(건)	338	56	33	36	11	7	3	-	484
	비율(%)	69.8	11.6	6.8	7.4	2.3	1.4	0.6	-	100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작성함

<표 19>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연구 개발 활동실적을 추진기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의 단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217건, 2014년에 311건, 2015년에 44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381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2017년에 428건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394건으로 감소하였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28건, 2014년에 34건, 2015년에 43건, 2016년에 6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2017년에 46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9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19> 정당정책연구소 추진기간별 연구 개발 활동실적: 2013년~2018년

정책 연구소	추진기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민주 연구원	단기	112	140	137	99	148	91
	중장기	7	10	7	8	13	31
여의도 연구원	단기	79	66	115	163	128	152
	중장기	9	20	25	27	13	10
바른미래 연구원	단기	-	-	-	-	-	12
	중장기	-	-	-	-	-	0
정의정책 연구소	단기	26	105	188	119	152	101
	중장기	12	4	11	31	20	29
민주평화 연구원	단기	-	-	-	-	-	0
	중장기	-	-	-	-	-	0
민중정책 연구원	단기	-	-	-	-	-	38
	중장기	-	-	-	-	-	20
합계	단기	217	311	440	381	428	394
	중장기	28	34	43	66	46	9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과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단기는 2개월 이하를, 중장기는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추진된 활동실적임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단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112건에서 2014년에 14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99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148건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91건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7건, 2014년에 10건, 2015년에 7건, 2016년에 8건, 2017년에 13건으로 변동이 크지 않다가 2018년에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의 단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79건에서 2014년에 66건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15건, 2016년에 163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28건으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152건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9건, 2014년에 20건, 2015년에 25건, 2016년에 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13건, 2018년에 10건으로 감소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의 단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26건, 2014년에 105건, 2015년에 18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119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52건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101건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은 2013년에 12건에서 2014년에 4건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1건, 2016년에 31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20건으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29건으로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보다 단기 연구 개발 활동에 치우쳐 있는 특징을 보였다. 비록 민주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가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 연구 개발 활동실적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것은 단기 연구 개발이 중장기 연구 개발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실적을 쌓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을 보인다. 하지만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정책적 기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당의 비전과 국가적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중장기 과제의 수행 비율을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정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의 다양성

<표 20>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연구 개발 분야를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주연구원은 기타·종합 분야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가 26건, 정치·행정 분야가 23건, 경제·민생 분야가 21건, 사회·복지 분야가 8건, 교육·문화 분야가 4건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외교·안보 분야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경제·민생 분야가 33건, 교육·문화 분야가 27건, 정치·행정 분야가 26건, 기타·종합 분야가 21건, 사회·복지 분야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치·행정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경제·민생 분야가 28건, 기타·종합 분야가 18건, 사회·복지 분야가 11건, 외교·안보 분야가 8건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정치·행정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육·문화 분야가 2건, 경제·민생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1건, 기타·종합 분야는 없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경제·민생 분야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가 20건, 정치·행정 분야가 6건, 기타·종합 분야가 4건, 교육·문화 분야가 3건, 사회·복지 분야가 1건이었다.

한편 연구 개발 분야에서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진 정당정책연구소들을 살펴보면 정치·행정 분야는 정의정책연구소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안보

분야, 경제·민생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문화 분야는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40건, 33건, 12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종합 분야는 민주연구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20>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 영역별 분류: 2018년

분야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바른미래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
정치·행정	23	26	61	4	6
외교·안보	26	40	8	4	20
경제·민생	21	33	28	1	25
사회·복지	8	12	11	1	1
교육·문화	4	27	4	2	3
기타·종합	40	21	18	0	4
합계	122	159	130	12	59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1) 민중정책연구원은 정기보고(58개)와 다르게 연구 분야 총 합계가 59개임

2) 민주평화연구원, 애국전략정책연구원은 2018년도 연구 개발 실적이 없어 제외함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기타·종합 분야에서, 여의도연구원은 외교·안보 분야,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치·행정 분야에서, 바른미래연구원은 정치·행정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중정책연구원은 경제·민생 분야에서 연구 개발 역량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중점을 두는 연구 개발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1>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연구 개발 분야의 영역별 실적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는 2013년에 81건에서 2014년에 165건, 2015년에 179건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149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95건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120건으로 감소하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2013년에 40건, 2014년에 43건, 2015년에 73건, 2016년에 72건, 2017년에 85건, 2018년에 8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민생 분야는 2013년에 42건, 2014년에 58건, 2015년에 81건, 2016년에 14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99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108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3년에 23건에서 2014년에 54건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44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54건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7년에 43건, 2018년에 33건으로 감소하였다. 교육·문화 분야는 2013년에 21건에서 2014년에 13건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8건, 2016년에 39건, 2017년에 60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40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기타·

종합 분야는 2013년에 38건에서 2014년에 12건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80건, 2016년에 88건, 2017년에 108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83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21>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 영역별 분류: 2013년~2018년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치·행정	81	165	179	149	195	120
외교·안보	40	43	73	72	85	98
경제·민생	42	58	81	143	99	108
사회·복지	23	54	44	54	43	33
교육·문화	21	13	28	39	60	40
기타·종합	38	12	80	88	108	83
합계	245	345	485	545	590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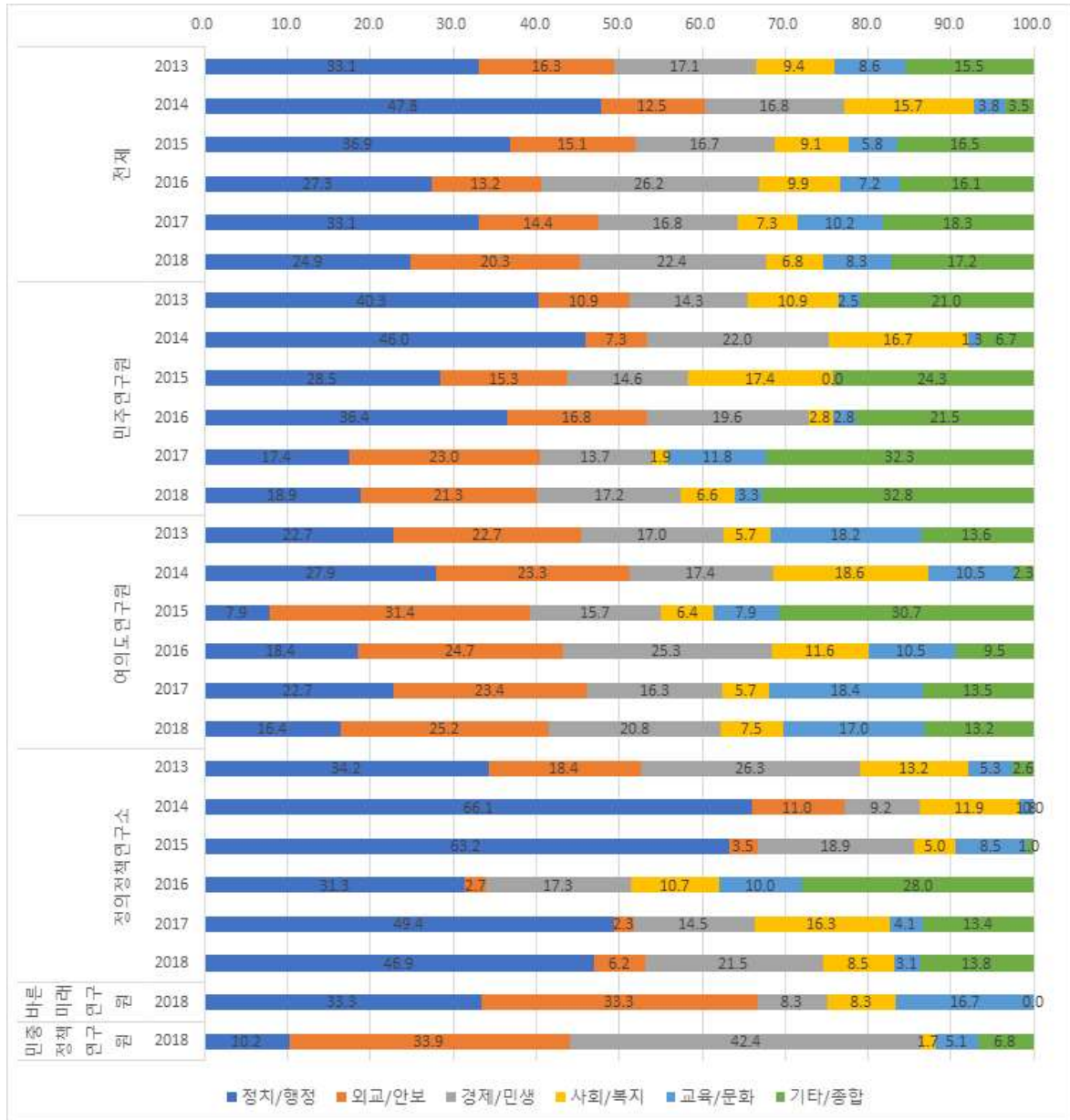
출처: 정당정책연구소 2013년~2018년 연간 활동실적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정리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가장 많이 한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의 연구 개발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외교·안보 분야에 연구 개발 역량 투입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연구 개발 분야 영역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주연구원이 연구 개발을 한 정치·행정 분야는 2013년에 40.3%에서 2014년에 46.3%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28.5%로 감소한 이후, 2016년에 36.4%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17.4%로 감소하다가 2018년에 18.9%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2013년에 10.3%에서 2014년에 7.3%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5.3%, 2016년에 16.8%, 2017년에 2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21.3%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제·민생 분야는 2013년에 14.3%에서 2014년에 22%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4.6%로 감소한 이후, 2016년에 19.6%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13.7%로 감소하다가 2018년에 17.2%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3년에 10.9%에서 2014년에 16.7%, 2015년에 17.4%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2.8%, 2017년에 1.9%로 감소한 이후, 2018년에 6.6%로 다시 증가하였다. 교육·문화 분야는 2013년에 2.5%, 2014년에 1.3%, 2015년에 0%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2.8%, 2017년에 11.8%로 증가한 후에, 2018년에 3.3%로 다시 감소하였다. 기타·종합 분야는 2013년에 21%에서 2014년에 6.7%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4.3%로 증가한 이후, 2016년에 21.5%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32.3%, 2018년에 32.8%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16] 정당정책연구소별 연구 개발 분야 영역 비율: 2013년~2018년



- ❖ 출처: 정당정책연구소 2013년~2018년 연간 활동실적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 참조: 1) 바른미래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은 모두 2018년도에 설립되어서 2018년도 활동실적 비율만을 표기함
- 2) 민주평화연구원과 애국전략정책연구원은 연구 실적이 없어 그래프에서 제외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이 연구 개발을 한 정치·행정 분야는 2013년에 22.7%에서 2014년에 27.9%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7.9%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18.4%, 2017년에 22.7%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16.4%로 감소하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2013년에 22.7%, 2014년에 23.3%, 2015년에 31.4%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24.7%, 2017년에 23.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25.2%로 다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를 제외하면 20% 초·중반대를 기록하였다. 경제·민생 분야는 2013년에 17%, 2014년에 17.4%에서 2015년에 15.7%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25.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6.3%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20.8%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3년에 5.7%, 2014년에 18.6%, 2015년에 6.4%, 2016년에 11.6%, 2017년에 5.7%, 2018년에 7.5%로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였다. 교육·문화 분야는 2013년에 18.2%, 2014년에 10.5%, 2015년에 7.9%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10.5%, 2017년에 18.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17%로 다시 감소하였다. 기타·종합 분야는 2013년에 13.6%에서 2014년에 2.3%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30.7%로 증가한 이후, 2016년에 9.5%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13.5%, 2018년에 13.2%로 또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정의정책연구소가 연구·개발을 한 정치·행정 분야는 2013년에 34.2%에서 2014년에 66.1%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63.2%, 2016년에 31.3%로 감소한 이후, 2017년에 49.4%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46.9%로 감소한다. 외교·안보 분야는 2013년에 18.4%, 2014년에 11%, 2015년에 3.5%, 2016년에 2.7%, 2017년에 2.3%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6.2%로 증가한다. 경제·민생 분야는 2013년에 26.3%에서 2014년에 9.2%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8.9%로 증가한 이후, 2016년에 17.3%, 2017년에 14.5%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21.5%로 증가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3년에 13.2%, 2014년에 11.9%, 2015년에 5%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10.7%, 2017년에 16.3%로 증가한 이후, 2018년에 8.5%로 다시 감소한다. 교육·문화 분야는 2013년에 5.3%에서 2014년에 1.8%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8.5%, 2016년에 10%로 증가한 이후, 2017년에 4.1%, 2018년에 3.1%로 다시 감소한다. 기타·종합 분야는 2013년에 2.6%에서 2014년에 0%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 2016년에 28%로 증가한 이후, 2017년에 13.4%, 2018년에 13.8%로 다시 감소한다.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2017년부터 정치·행정 분야의 비중이 기타·종합 분야의 비중보다 낮아지고,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들과 비교하여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는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비교하여 정치·행정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 역시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정당정책연구소가 각기 중점을 두는 연구 개발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

부 기존 연구들(김형준·김도중 2011)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연구 개발 분야가 일부 영역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일부 영역들을 특화하는 것도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4.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실적

<표 22>는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을 종류별로 구분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들은 총 238건이었다. 이 중에서 간담회(자문회의)가 11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가 58건(24.4%), 세미나가 31(13%), 기타가 16건(6.7%), 여론조사가 12건(5%), 포럼·심포지엄이 11건(4.6%)이었다.

<표 22>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2018년

정책 연구소	건수/비율	토론회 개최	간담회 (자문회의)	포럼·심포지엄	세미나	여론조사	기타	합계
민주 연구원	수(건)	24	71	8	3	-	12	118
	비율(%)	20.3	60.2	6.8	2.5	-	10.2	100
여의도 연구원	수(건)	10	26	-	13	-	2	51
	비율(%)	19.6	51	-	25.5	-	3.9	100
바른미래 연구원	수(건)	1	1	2	-	5	-	9
	비율(%)	11.1	11.1	22.2	-	55.6	-	100
정의정책 연구소	수(건)	12	5	1	4	-	-	22
	비율(%)	54.5	22.7	4.5	18.2	-	-	100
민주평화 연구원	수(건)	9	2	-	8	7	1	27
	비율(%)	33.3	7.4	-	29.6	25.9	3.7	100
민중정책 연구원	수(건)	2	5	-	3	-	1	11
	비율(%)	18.2	45.5	-	27.3	-	9.1	100
합계	수(건)	58	110	11	31	12	16	238
	비율(%)	24.4	46.2	4.6	13	5	6.7	100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정당정책연구소가 구분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에 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카테고리 미설정)와 강연회 등은 기타에 포함시킴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은 총 118건이었다. 이 중에서 간담회(자문회의)가 71건(60.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가 24건(20.3%), 기타 활동이 12건(10.2%), 포럼·심포지엄이 8건(6.8%), 세미나가 3건(2.5%)이었다.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다. 여의도연구원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들은 총 51건이었다. 이 중에서 간담회(자문회의)가 26건(51%)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세미나가 13건(25.5%), 토론회 개최가 10건(19.6%), 기타 활동이 2건(3.9%)이었다. 포럼·심포지엄과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다. 바른미래연구원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들은 총 9건이었다. 이 중에서 여론조사가 5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포럼·심포지엄이 2건(22.2%), 토론회 개최와 간담회(자문회의)가 각각 1건(11.1%)이었다. 세미나와 기타 활동은 하지 않았다. 정의정책연구소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들은 총 22건이었다. 이 중에서 토론회 개최가 12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간담회(자문회의)가 5건(22.7%), 세미나가 4건(18.2%), 포럼·심포지엄이 1건(4.5%)이었다. 여론조사와 기타 활동은 하지 않았다. 민주평화연구원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들은 총 27건이었다. 이 중에서 토론회 개최가 9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세미나가 8건(29.6%), 여론조사가 7건(25.9%), 간담회(자문회의)가 2건(7.4%), 기타 활동이 1건(3.7%)이었다. 포럼·심포지엄은 하지 않았다. 민중정책연구소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들은 총 11건이었다. 이 중에서 간담회(자문회의)가 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세미나가 3건(27.3%), 토론회 개최가 2건(18.2%), 기타 활동이 1건(9.1%)이었다. 포럼·심포지엄과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2018년에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민중정책연구소는 간담회(자문회의)의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소와 민주평화연구소는 토론회 개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바른미래연구소는 여론조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23>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들은 2013년에 400건, 2014년에 371건, 2015년에 384건, 2016년에 4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30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8년에 238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활동실적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론회 개최는 2013년에 106건(26.5%), 2014년에 31건(8.4%), 2015년에 84건(21.9%), 2016년에 11건(26.8%), 2017년에 90건(25%), 2018년에 58건(24.4%)으로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였다. 간담회(자문회의)도 2013년에 42건(10.5%), 2014년에 26건(7%), 2015년에 50건(13%), 2016년에 11건(26.8%), 2017년에 143건(39.7%), 2018년에 110건(46.2%)으로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였다. 포럼·심포지엄은 2013년에 71건(17.7%), 2014년에 22건(5.9%), 2015년에 27건(7%), 2016년에 9건(22%), 2017년에 14건(3.9%), 2018년에 11건(4.6%)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미나는 2013년에 32건(9%)에서 2014년에 62건(16.7%)으로 증가하

다가 2015년에 52건(13.5%), 2016년에 8건(19.5%)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32건(8.9%), 2018년에 31건(13%)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여론조사는 2013년에 135건(33.8%)에서 2014년에 226건(60.9%)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69건(44%), 2017년에 64건(17.8%), 2018년에 12건(5%)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여론 조사를 하지 않았다. 기타 활동은 2013년에 14건(3.5%)에서 2014년에 4건(1.2%), 2015년에 2건(0.6%), 2016년에 2건(4.9%)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17건(4.7%), 2018년에 16건(6.7%)으로 증가하였다.

<표 23>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2013년~2018년

구분	건수/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토론회	수(건)	106	31	84	11	90	58
	비율(%)	26.5	8.4	21.9	26.8	25	24.4
간담회 (자문회의)	수(건)	42	26	50	11	143	110
	비율(%)	10.5	7	13	26.8	39.7	46.2
포럼 심포지엄	수(건)	71	22	27	9	14	11
	비율(%)	17.7	5.9	7	22	3.9	4.6
세미나	수(건)	32	62	52	8	32	31
	비율(%)	8	16.7	13.5	19.5	8.9	13
여론조사	수(건)	135	226	169	-	64	12
	비율(%)	33.8	60.9	44	-	17.8	5
기타	수(건)	14	4	2	2	17	16
	비율(%)	3.5	1.2	0.6	4.9	4.7	6.7
합계	수(건)	400	371	384	41	360	238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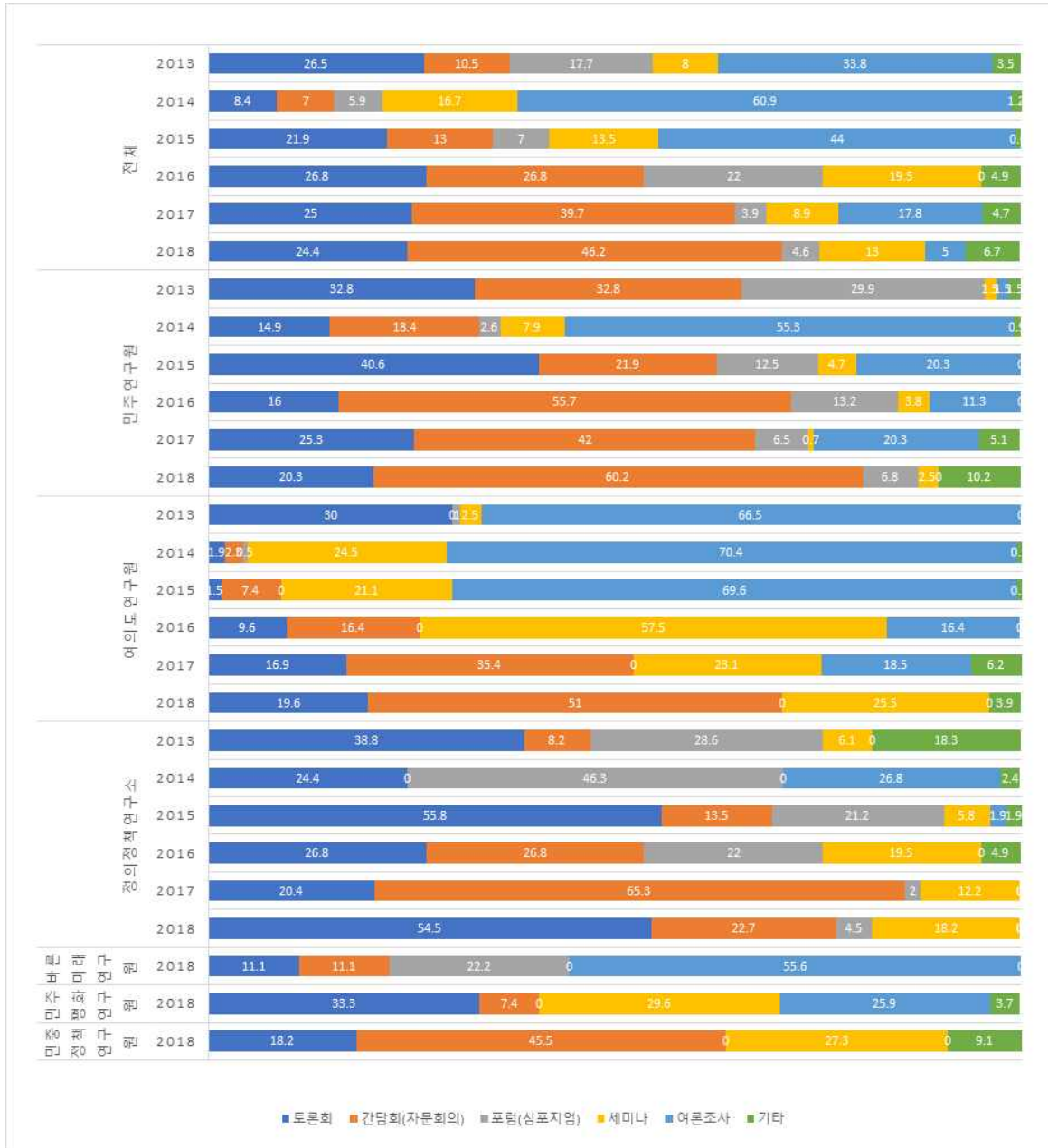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의 2017년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건수는 2016년보다 132건 증가하여 급증한 특징을 보였다. 반면 여론조사 실시 건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2016년 이후 2017년부터 급감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포럼·심포지엄 개최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17]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주연구원의 토론회 개최 비율은 2013년에 32.8%, 2014년에 14.9%, 2015년에 40.6%, 2016년에 16%, 2017년에 25.3%, 2018년에 20.3%로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였다.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비율은 2013년에

32.8%에서 2014년에 18.4%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1.9%, 2016년에 55.7%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2017년에 42%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60.2%로 증가하였다. 포럼·심포지엄 개최 비율은 2013년에 29.9%에서 2014년에 2.6%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2.5%, 2016년에 13.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6.5%, 2018년에 6.8%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17] 정당정책연구소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 참조: 기타에 토크콘서트 등(공청회, 기자회견, 학술회의, 강연회, 집담회) 포함시킴

세미나 개최 비율은 2013년에 1.5%에서 2014년에 7.9%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4.7%, 2016년에 3.8%, 2017년에 0.7%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2.5%로 증가하였다. 여론조사 실시 비율은 2013년에 1.5%에서 2014년에 55.3%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20.3%, 2016년에 11.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20.3%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0%로 감소하였다. 기타 활동 비율은 2013년에 1.5%, 2014년에 0.9%, 2015~2016년에 각각 0%에서 2017년에 5.1%, 2018년에 10.2%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의 토론회 개최 비율은 2013년에 30%에서 2014년에 1.9%, 2015년에 1.5%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9.6%, 2017년에 16.9%, 2018년에 19.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비율은 2013년에 0%, 2014년에 2.3%, 2015년에 7.4%, 2016년에 16.4%, 2017년에 35.4%, 2018년에 5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포럼·심포지엄 개최 비율은 2013년에 1%, 2014년에 0.5%, 2015년~2018년에 각각 0%로 실적 비율이 다른 활동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세미나 개최 비율은 2013년에 2.5%에서 2014년에 24.5%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21.1%로 감소한 후 2016년에 57.5%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23.1%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에 25.5%로 증가하였다. 여론조사 실시 비율은 2013년에 66.5%에서 2014년에 70.4%, 2015년에 69.6%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16.4%, 2017년에 13.5%, 2018년에 0%로 감소하였다. 기타 활동 비율은 2013년에 0%, 2014년~2015년에 각각 0.5%, 2016년에 0%에서 2017년에 6.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3.9%로 감소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의 토론회 개최 비율은 2013년에 38.8%에서 2014년에 24.4%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55.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6년에 26.8%, 2017년에 20.4%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54.5%로 증가하였다.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비율은 2013년에 8.2%에서 2014년에 0%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13.5%, 2016년에 26.8%, 2017년에 65.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22.7%로 다시 감소하였다. 포럼·심포지엄 개최 비율은 2013년에 28.6%에서 2014년에 46.3%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21.2%, 2016년에 22%, 2017년에 2%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4.5%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미나 개최 비율은 2013년에 6.1%에서 2014년에 0%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5.8%, 2016년에 19.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2.2%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18.2%로 증가하였다. 여론조사 실시 비율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26.8%로 증가한 후 2015년에 1.9%, 2016~2018년에 각각 0%로 감소하였다. 기타 활동 비율은 2013년에 18.3%에서 2014년에 2.4%, 2015년에 1.9%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4.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2018년에 각각 0%로 다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2015년을 제외하고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포럼·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부터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세미나 개최와 여론조사 실시 비중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정의정책연구소도 2018년을 제외하고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비중이 증가한 반면 포럼·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다른 활동들과 비교하여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 활동실적

<표 24>는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총 40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수 대상자별로 보면 당직자 대상 교육 연수 활동이 22건(5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의원·선거출마자가 8건(20%), 당원이 6건(15%), 시민이 2건(5%), 청년·대학생과 기타 대상자가 각각 1건(2.5%)으로 나타났다.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총 11건이었다. 이 중에서 의원·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이 6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당직자가 3건(27.3%), 청년·대학생과 기타가 각각 1건(9.1%)이었다. 당원과 기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없었다. 여의도연구원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총 4건이었다. 이 중에서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이 3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시민이 1건(25%)이었다. 의원·선거출마자, 당원, 청년/대학생, 기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없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총 3건으로 모두 당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총 13건이었다. 이 중에서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이 7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당원이 3건(23.1%), 의원·선거출마자가 2건(15.4%), 기타 대상자가 1건(7.7%)이었다. 청년·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없었다. 민중정책연구소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총 9건이었다. 이 중에서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이 6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당원이 3건(23.1%)이었다. 의원·선거출마자, 청년·대학생, 시민, 기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없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교육 연수 활동실적이 없었다.

<표 24>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대상별 활동실적: 2018년

정책 연구소	건수/ 비율	의원/ 선거출마자	당원	당직자	청년/ 대학생	시민	기타	합계
민주 연구원	수(건)	6	-	3	1	1	-	11
	비율(%)	54.5	-	27.3	9.1	9.1	-	100
여의도 연구원	수(건)	-	-	3	-	1	-	4
	비율(%)	-	-	75	-	25	-	100
바른미래 연구원	수(건)	-	-	3	-	-	-	3
	비율(%)	-	-	100	-	-	-	100
정의정책 연구소	수(건)	2	3	7	-	-	1	13
	비율(%)	15.4	23.1	53.8	-	-	7.7	100
민주평화 연구원	수(건)	-	-	-	-	-	-	-
	비율(%)	-	-	-	-	-	-	-
민중정책 연구원	수(건)	-	3	6	-	-	-	9
	비율(%)	-	33.3	66.7	-	-	-	100
합계	수(건)	8	6	22	1	2	1	40
	비율(%)	20	15	55	2.5	5	2.5	100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당직자에 연구소 자체 교육연수도 포함시킴(이하 동일)

정리하면 2018년에 민주연구원은 의원·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를 가장 많이 한 반면 민주평화연구원을 제외한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를 가장 많이 실시한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1건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다른 군소정당들보다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거대양당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를 개최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5>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교육 연수 활동실적은 2013년에 43건에서 2014년에 67건, 2015년에 6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26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52건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40건으로 감소하였다. 교육 연수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은 2013년에 15건(34.9%)에서 2014년에 8건(11.9%), 2015년에 9건(14.3%)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16건(61.5%), 2017년에 18건(34.6%), 2018년에 22건(55%)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은 2013년에 22건(51.2%)에서 2014년에 3건(4.5%), 2015년에 2건(3.2%), 2016년에 1건(3.8%)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12건(23.1%)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2018년에 6건(15%)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은 2014년에 5건(7.5%),

2015년에 1건(1.6%), 2017년에 3건(5.8%), 2018년에 1건(2.5%)으로 변동이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2013년과 2016년에는 교육 연수 활동이 없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은 2017년에 4건(7.7%), 2018년에 2건(5%)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의원·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은 2018년에 8건(20%)이 있었다. 기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은 2013년에 6건(13.9%)에서 2014년에 51건(76.1%), 2015년에 51건(80.9%)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9건(34.6%)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5건(28.8%)으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1건(2.5%)으로 감소하였다.

<표 25>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대상별 활동실적: 2013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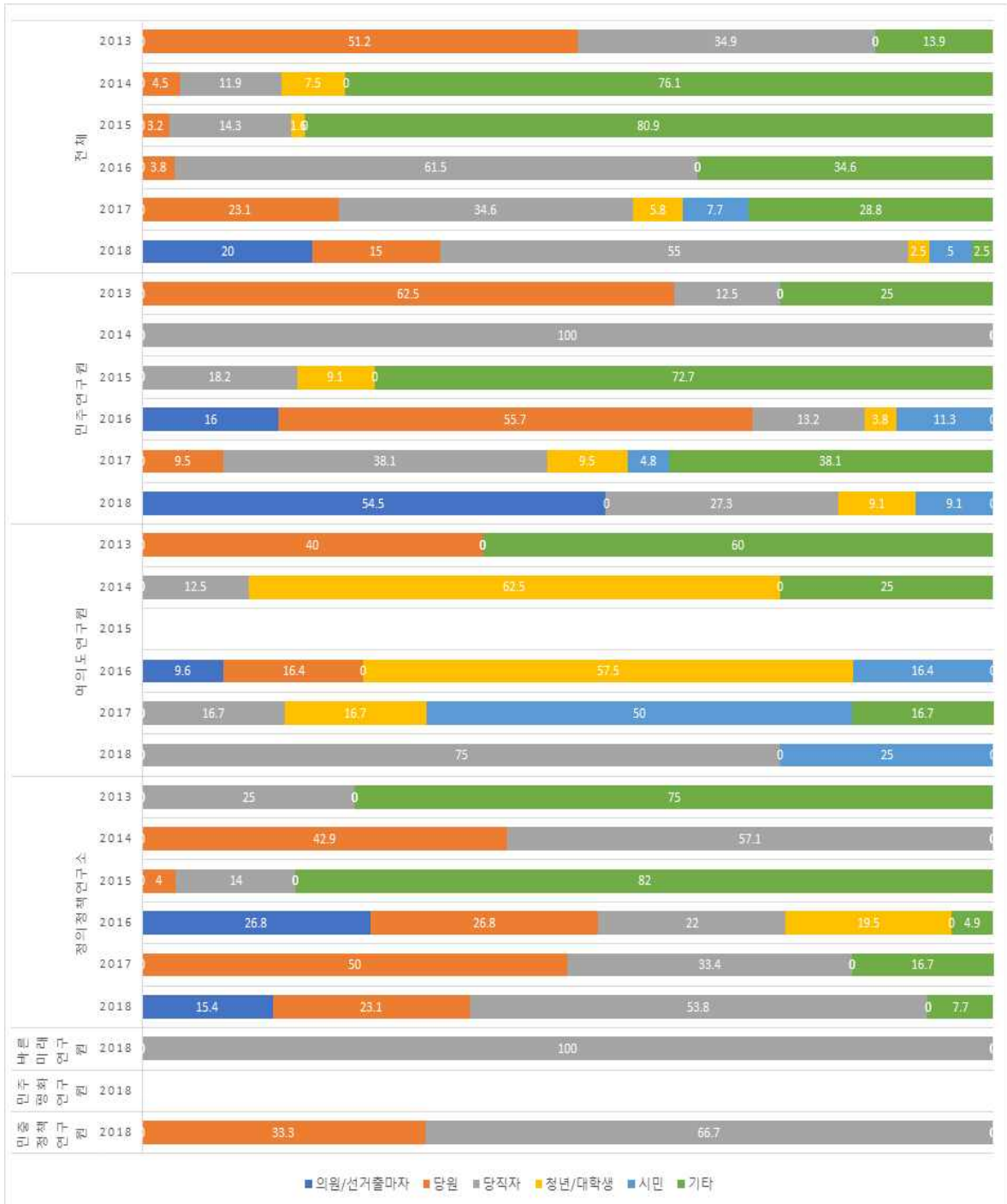
대상	건수/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직자	수(건)	15	8	9	16	18	22
	비율(%)	34.9	11.9	14.3	61.5	34.6	55
당원	수(건)	22	3	2	1	12	6
	비율(%)	51.2	4.5	3.2	3.8	23.1	15
청년/ 대학생	수(건)	-	5	1	-	3	1
	비율(%)	-	7.5	1.6	-	5.8	2.5
시민	수(건)	-	-	-	-	4	2
	비율(%)	-	-	-	-	7.7	5
의원/ 선거출마자	수(건)	-	-	-	-	-	8
	비율(%)	-	-	-	-	-	20
기타	수(건)	6	51	51	9	15	1
	비율(%)	13.9	76.1	80.9	34.6	28.8	2.5
합계	수(건)	43	67	63	26	52	4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당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를 주로 개최한 반면 청년·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횟수는 적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시민정치교육의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정책연구소의 경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책 연구 개발 역량 강화 못지않게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민주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정책연구소가 일정 수준의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볼 필

요가 있다.

[그림 18] 정당정책연구소별 교육 연수 대상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 참조: 1) 바른미래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민중정책연구소는 모두 2018년도에 설립되어서 2018년도 활동실적 비율만을 표기함
2) 여의도연구원은 2015년에, 민주평화연구원은 2018년에 교육 연수 활동실적이 없었음

[그림 18]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별로 교육 연수 대상 활동실적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주연구원이 의원·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2016년에 16%, 제7회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에 54.5%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62.5%에서 2014년~2015년에 각각 0%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55.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9.5%, 2018년에 0%로 다시 감소하였다.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12.5%에서 2014년에 100%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8.2%, 2016년에 13.2%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2017년에 다시 38.1%로 증가하다 2018년에 27.3%로 또 다시 감소하였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2014년에 각각 0%에서 2015년에 9.1%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3.8%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9.5%, 2018년에 9.1%로 다시 증가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2015년에 각각 0%에서 2016년에 11.3%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4.8%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다시 9.1%로 증가하였다. 기타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25%, 2014년에 0%, 2015년에 72.7%, 2016년에 0%, 2017년에 38.1%, 2018년에 0%로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이 의원·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2016년 9.6%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40%, 2016년에 16.4%를 제외하고는 모두 0%였다.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12.5%로 증가하다가 2015~2016년에 각각 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16.7%, 2018년에 75%로 증가하였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에 0%에서 2014년에 62.5%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57.5%로 다시 증가하다 2017년에 16.7%, 2018년에 0%로 감소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2015년에 각각 0%에서 2016년에 16.4%, 2017년에 50%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 25%로 감소하였다. 기타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60%, 2014년에 25%, 2015년~2016년에 각각 0%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16.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0%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정의정책연구소가 의원·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2016년에 26.8%와 제7회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에 15.4%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42.9%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26.8%, 2017년에 50%로 다시 증가하다가 2018년에 23.1%로 감소하였다.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25%에서 2014년에 57.1%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22%, 2017년에 33.4%, 2018년에 53.8%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6년 19.5%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모두 0%였다. 기타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 연수 활동실적 비율은 2013년에 75%에서 2014년에 0%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8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4.9%, 2017년에 16.7%, 2018년에 7.7%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주로 당원 또는 당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가장 많이 하였고, 특히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만 의원·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2014년, 2016년~2017년에 여의도연구원이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비교하여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달리 정의정책연구소는 2016년에만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는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6.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활동실적

<표 26>은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정책 홍보 수단들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총 458건이었다. 이 중에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가 251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가 150건(32.8%),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가 42건(9.1%), 언론·보도자료가 15건(3.3%)이었다.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총 193건이었다. 이 중에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가 181건(93.8%)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가 10건(5.2%), 언론·보도자료와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이 각각 1건(0.5%)을 기록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총 127건이었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가 70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가 40건(31.5%),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가 17건(13.4%)을 기록하였다. 언론·보도자료는 없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총 3

건이었다. 모두 언론·보도자료들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총 32건이었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가 30건(93.8%)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자료가 2건(6.3%)이었고,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와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은 없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총 14건이었다. 모두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들이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총 89건이었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가 79건(88.8%)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보도자료가 9건(10.1%),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가 1건(1.1%)이었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는 없었다.

<표 26>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수단과 활동실적: 2018년

정책 연구소	건수/비율	사이트 게재 (+이메일·SNS)	사이트 게재 (+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	언론·보도자료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 (보고서)	합계
민주 연구원	수(건)	181	10	1	1	193
	비율(%)	93.8	5.2	0.5	0.5	100
여의도 연구원	수(건)	70	17	0	40	127
	비율(%)	55.1	13.4	0	31.5	100
바른미래 연구원	수(건)	-	-	3	-	3
	비율(%)	-	-	100	-	100
정의정책 연구소	수(건)	-	30	2	-	32
	비율(%)	-	93.8	6.3	-	100
민주평화 연구원	수(건)	-	14	-	-	14
	비율(%)	-	100	-	-	100
민중정책 연구원	수(건)	-	79	9	1	89
	비율(%)	-	88.8	10.1	1.1	100
합계	수(건)	251	150	15	42	458
	비율(%)	54.8	32.8	3.3	9.1	1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정리하면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를 가장 많은 활용한 반면 정의정책연구소, 민주평화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은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바른미래연구원은 언론·보도자료만을 정책 홍보 수단을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27>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활용한 정책 홍보 수단들을 분류하여 그 활동실적을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 홍보 활동실적은 2013년에 233건, 2014년에 220건, 2015년에 253건, 2016년에 246건, 2017년에 286건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18년에 458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 홍보 수단별로 살펴보면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는 2013년에 229건(98.3%)에서 2014년에 160건(72.7%)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15건(85%)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132건(53.7%)으로 다시 감소하다 2017년에 172건(60.1%), 2018년에 251건(54.8%)으로 증가하였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는 2014년에 54건(24.5%)에서 2015년에 34건(13.4%)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92건(37.4%)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69건(24.1%)으로 다시 감소하다 2018년에 150건(32.8%)으로 증가하였다. 언론·보도자료는 2014년에 3건(1.4%), 2015년에 1건(0.4%)에서 2016년에 19건(7.7%)으로 증가하다 2017년에 15건(5.2%), 2018년에 15건(3.3%)을 기록하였다.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는 2013년에 1건(0.4%), 2014년에 3건(1.4%), 2015년~2016년에 각각 1건(0.4%), 2017년에 9건(3.1%)으로 변동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에는 42건(9.1%)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 정책 홍보 활동 수단은 2013년에 3건(1.3%), 2015년~2016년에 각각 2건(0.8%)으로 변동이 크지 않다가 2017년에 21건(7.3%)으로 증가하였다.

<표 27>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수단과 활동실적: 2013년~2018년

정책 홍보 수단	건수/ 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이트 게재 (+이메일·SNS)	수(건)	229	160	215	132	172	251
	비율(%)	98.3	72.7	85	53.7	60.1	54.8
사이트 게재 (+이메일·SNS) +언론·보도자료	수(건)	-	54	34	92	69	150
	비율(%)	-	24.5	13.4	37.4	24.1	32.8
언론· 보도자료	수(건)	-	3	1	19	15	15
	비율(%)	-	1.4	0.4	7.7	5.2	3.3
사이트 게재 +책자 발간 (보고서)	수(건)	1	3	1	1	9	42
	비율(%)	0.4	1.4	0.4	0.4	3.1	9.1
기타	수(건)	3	-	2	2	21	-
	비율(%)	1.3	-	0.8	0.8	7.3	-
합계	수(건)	233	220	253	246	286	458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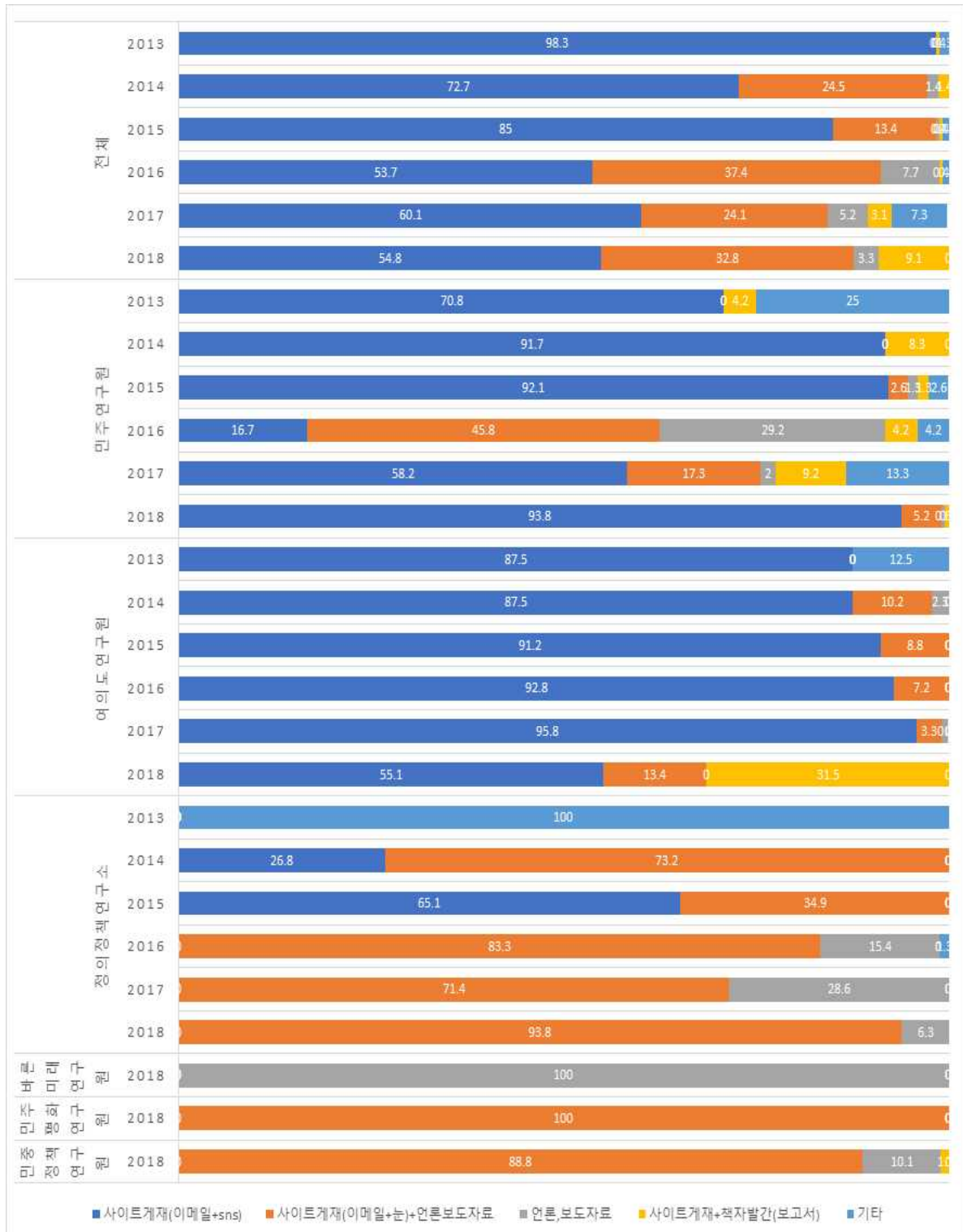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건수가 2017년을 제외하고 점점 많아지는 특징도 보였다. 반면 언론·보도자료와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언론·보도자료나 책자 발간(보고서) 등과 같은 오프라인 자료들보다는 이메일·SNS 등과 같은 온라인 수단들을 통하여 정책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이메일·SNS 등과 같은 온라인 수단들이 언론·보도자료, 책자 발간(보고서) 등과 같은 오프라인 자료들보다 비용을 절약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9]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정책 홍보 수단의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 홍보 수단별 비율을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은 사이트 게재(+이메일·SNS) 비율이 2013년에 70.8%에서 2014년에 91.7%, 2015년에 92.1%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16.7%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58.2%, 2018년에 93.8%로 다시 증가하였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 비율은 2013년~2014년에 각각 0%에서 2015년에 2.6%, 2016년에 45.8%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17.3%, 2018년에 5.2%로 감소하였다. 언론·보도자료 비율은 2013년~2014년에 각각 0%에서 2015년에 1.3%, 2016년에 29.2%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2%, 2018년에 0.5%로 감소하였다. 언론·보도자료 비율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책 홍보 수단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는 특징을 보였다.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 비율은 2013년에 4.2%에서 2014년에 8.3%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4.2%, 2017년에 9.2%로 다시 증가하다가 2018년에 0.5%로 감소하였다. 기타 수단 비율은 2013년에 25%에서 2014년에 0%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6%, 2016년에 4.2%, 2017년에 13.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0.5%로 다시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2016년을 제외하고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2018년을 제외하고 사이트 게재(+이메일·SNS)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2018년에 처음으로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을 활용한 특징을 보였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소는 2013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를 활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을 전혀 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공통적으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의 활용 여부는 정당정책연구소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정당정책연구소별 정책 홍보 수단 비율: 2013년~2018년



❖ 출처: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 참조: e뉴스레터 등은 기타에 포함시킴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은 사이트 게재(+이메일·SNS) 비율이 2013년~2014년에 각각 87.5%, 2015년에 91.2%, 2016년에 92.8%, 2017년에 95.8%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55.1%로 감소하였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 비율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10.2%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8.8%, 2016년에 7.2%, 2017년에 3.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13.4%로 다시 증가하였다. 언론·보도자료 비율은 2014년에 2.4%와 2017년에 0.8%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 비율은 2018년에 31.5%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기타 수단 비율도 2013년에 12.5%를 제외하고는 모두 0%였다.

한편 정의정책연구소는 사이트 게재(+이메일·SNS) 비율이 2014년에 26.8%, 2015년에 65.1%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여 2016년부터는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를 통한 정책 홍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 비율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73.2%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34.9%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83.3%로 다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3.3%로 급감하고, 2018년에 13.4%로 증가하여 변동이 큰 특징을 보였다. 언론·보도자료 비율은 2013년~2015년에 각각 0%에서 2016년에 15.4%, 2017년에 28.6%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 6.3%로 감소하였다.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 비율은 모두 0%를 기록하였다. 기타 수단 비율도 2013년에 100%, 2016년에 1.3%를 제외하고는 모두 0%였다.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를 가장 많이 활용한 가운데 2016년에는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와 언론·보도자료를 더 많이 활용한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 언론·보도자료,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 기타 수단은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이트 게재(+이메일·SNS)+언론·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 기타 수단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정의정책연구소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이트 게재+책자 발간(보고서)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의당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적은 상황에서 책자 발간(보고서)에 따른 인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정당정책연구소 자료 발간 활동실적

<표 28>은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은

총 286건이었다. 이 중에서 보고서가 104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이 73건(25.5%), 연구논문이 64건(22.4%), 기타 자료 발간이 41건(14.3%), 기관지 등 책자는 4건(1.4%)이었다.

<표 28> 정당정책연구소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2018년

정책 연구소	건수/비율	보고서	자료집 (토론회/세미나)	연구논문	기관지 등 책자	기타	합계
민주 연구원	수(건)	54	38	4	2	-	98
	비율(%)	55.1	38.8	4.1	2	-	100
여의도 연구원	수(건)	49	10	-	-	1	60
	비율(%)	81.7	16.7	-	-	1.7	100
바른미래 연구원	수(건)	1	2	-	-	-	3
	비율(%)	33.3	66.7	-	-	-	100
정의정책 연구소	수(건)	-	3	-	-	40	43
	비율(%)	-	7	-	-	93	100
민주평화 연구원	수(건)	-	17	-	1	-	18
	비율(%)	-	94.4	-	5.6	-	100
민중정책 연구원	수(건)	-	3	60	1	-	64
	비율(%)	-	4.7	93.8	1.6	-	100
합계	수(건)	104	73	64	4	41	286
	비율(%)	36.4	25.5	22.4	1.4	14.3	1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18년 정기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정당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은 총 98건이었다. 이 중에서 보고서가 54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이 38건(38.8%), 연구논문이 4건(4.1%), 기관지 등 책자는 2건(2%)이었다. 기타 자료 발간은 없었다. 여의도연구원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은 총 60건이었다. 이 중에서 보고서가 49건(81.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이 10건(16.7%), 기타 자료 발간이 1건(1.7%)이었다. 연구논문과 기관지 등 책자는 없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은 총 3건이었다. 그리고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이 2건(66.7%), 보고서가 1건(33.3%)이었다. 연구논문, 기관지 등 책자, 기타 자료 발간은 없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은 총 43건이었다. 이 중에서 기타 자료 발간이 40건(93%)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이 3건(7%)이었다. 보고서, 연구논문, 기관지 등 책자는 없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

실적은 총 18건이었다. 이 중에서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이 17건(94.4%)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관지 등 책자는 1건(5.6%)이 있었다. 보고서, 연구논문, 기타 자료 발간은 없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은 총 64건이었다. 이 중에서 연구논문이 60건(93.8%)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이 3건(4.7%), 기관지 등 책자가 1건(1.6%)이 있었다. 보고서와 기타 자료 발간은 없었다.

정리하면 2018년에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은 보고서를 가장 많이 발행한 반면 바른미래연구원과 민주평화연구원은 자료집(토론회/세미나)을 가장 많이 발행한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는 기타 자료 발간을, 민중정책연구원은 연구논문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거대 양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과 군소정당들의 정책연구소 사이에 중점적으로 발간하는 자료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9> 정당정책연구소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2013년~2018년

구분	건수/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고서	수(건)	9	58	29	94	108	104
	비율(%)	11.3	44.3	26.1	59.1	37.5	36.4
자료집 (세미나/토론회)	수(건)	37	47	48	49	50	73
	비율(%)	46.3	35.9	43.2	30.8	17.4	25.5
기관지등 책자	수(건)	1	4	6	6	75	64
	비율(%)	1.3	3.1	5.4	3.8	26	22.4
연구논문	수(건)	3	8	11	10	21	4
	비율(%)	3.8	6.1	9.9	6.3	7.3	1.4
기타	수(건)	30	14	17	-	34	41
	비율(%)	37.5	10.7	15.3	-	11.8	14.3
계	수(건)	80	131	111	159	288	286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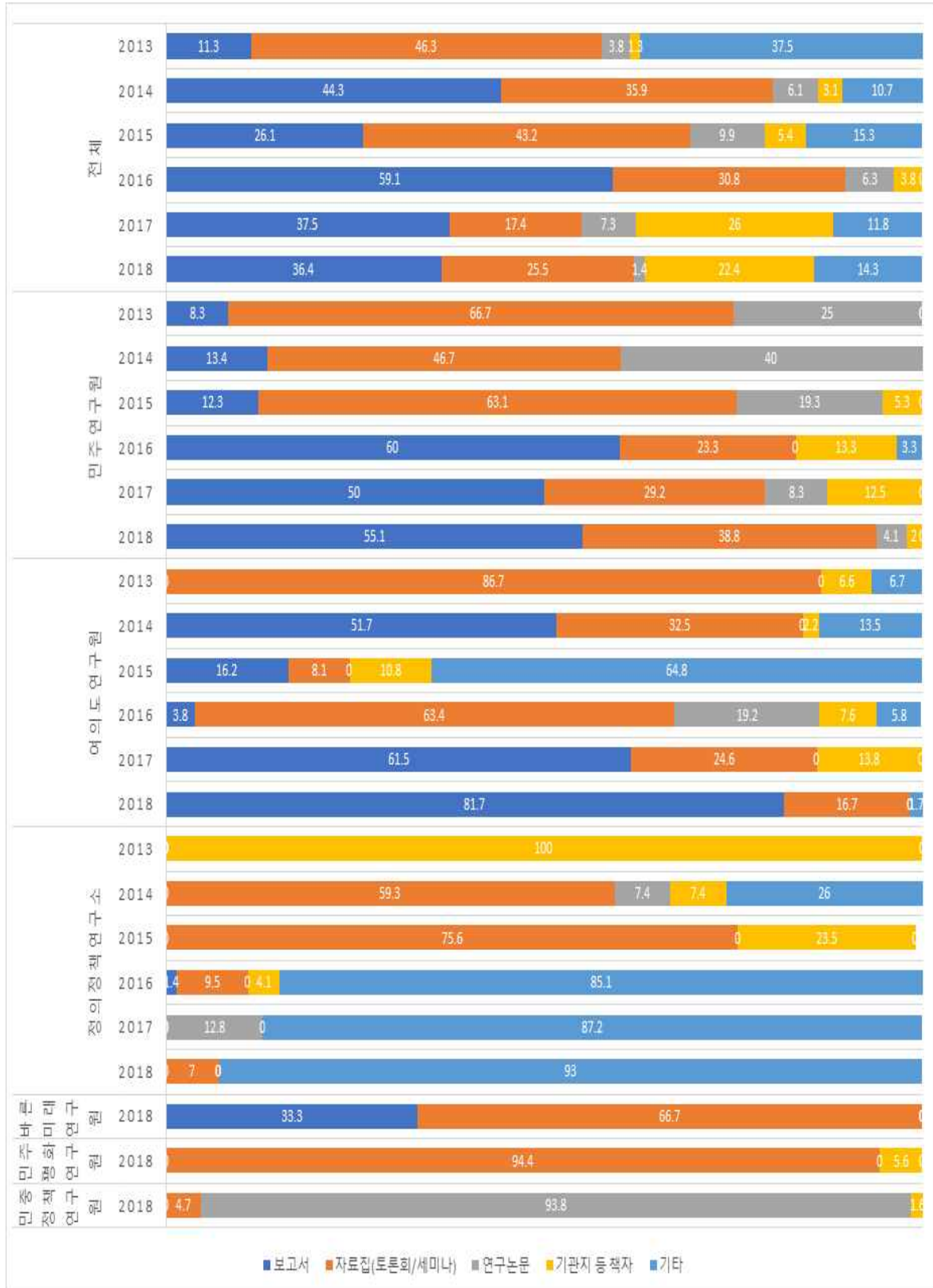
<표 29>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발행한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은 2013년에 80건에서 2014년에 131건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11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159건, 2017년에 288건, 2018년에 286건으로 증가하였다. 발간자료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고서는 2013년에 9건

(11.3%), 2014년에 58건(44.3%), 2015년에 29건(26.1%), 2016년에 94건(59.1%), 2017년에 108건(37.5%), 2018년에 104건(36.4%)으로 2015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료집(세미나/토론회)은 2013년에 37건(46.3%), 2014년에 47건(35.9%), 2015년에 48건(43.2%), 2016년에 49건(30.8%), 2017년에 50건(17.4%), 2018년에 73건(25.5%)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지 등 책자는 2013년에 1건(1.3%), 2014년에 4건(3.1%), 2015년에 6건(5.4%), 2016년에 6건(3.8%)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17년에 75건(26%)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64건(36.4%)으로 감소하였다. 연구논문은 2013년에 3건(3.8%), 2014년에 8건(6.1%), 2015년에 11건(9.9%), 2016년에 10건(6.3%), 2017년에 21건(7.3%)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에 4건(1.4%)으로 감소하였다. 기타 자료 발간은 2013년에 30건(37.5%)에서 2014년에 14건(10.7%), 2015년에 17건(15.3%)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34건(11.8%), 2018년에 41건(14.3%)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보고서(2015년 제외), 자료집(세미나/토론회), 기타 자료(2013년 제외) 발간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기관지 등 책자 발간 건수는 2017년에 2016년 대비 69건 더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기관지 등 책자 발간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국민들에게 활동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소를 홍보하는 주요 수단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기관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0]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정책연구소별로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비율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각 발간자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은 보고서가 2013년에 8.3%에서 2014년에 13.4%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2.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60%, 2017년에 50%, 2018년에 55.1%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자료집(세미나/토론회)은 2013년에 66.7%에서 2014년에 46.7%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63.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23.3%로 다시 감소하다 2017년에 29.2%, 2018년에 38.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논문은 2013년에 25%에서 2014년에 40%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9.3%, 2016년에 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8.3%로 다시 증가하다 2018년에 4.1%로 감소하였다. 기관지 등 책자는 2013년~2014년에 각각 0%에서 2015년에 5.3%, 2016년에 13.3%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12.5%, 2018년에 2%로 감소하였다. 기타 자료 발간은 2016년에 3.3%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그림 20] 정당정책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출처: 연도별 정당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은 보고서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51.7%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16.2%, 2016년에 3.8%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61.5%, 2018년에 81.7%로 다시 증가하였다. 자료집(세미나/토론회)은 2013년에 86.7%에서 2014년에 32.5%, 2015년에 8.1%로 감소하다가 2016년에 63.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에 24.6%, 2018년에 16.7%로 다시 감소하였다. 연구논문은 2016년에 19.2%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기관지 등 책자는 2013년에 6.6%, 2014년에 2.2%, 2015년에 10.8%, 2016년에 7.6%, 2017년에 13.8%, 2018년에 0%로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였다. 기타 자료 발간은 2013년에 6.7%, 2014년에 13.5%, 2015년에 64.8%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5.8%, 2017년에 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1.7%로 증가하여 2016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정의정책연구소는 보고서가 2016년에 1.4%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자료집(세미나/토론회)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59.3%, 2015년에 75.6%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9.5%, 2017년에 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에 7%로 증가하였다. 연구논문은 2014년에 7.4%와 2017년에 12.8%를 제외하고는 모두 0%를 기록하였다. 기관지 등 책자는 2013년에 100%에서 2014년에 7.4%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23.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4.1%, 2017년~2018년에 각각 0%로 다시 감소하였다. 기타 자료 발간은 2013년에 0%에서 2014년에 26%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에 85.1%, 2017년에 87.2%, 2018년에 93%로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민주연구원은 2015년도 이전까지는 자료집(세미나/토론회)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도 이후부터는 보고서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연구논문을 거의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정책연구소는 2014년~2015년에 자료집(세미나/토론회) 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도 이후부터는 기타 발간자료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보고서도 2014년을 제외하면 거의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연구논문 작성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자료집(세미나/토론회) 제작에 치중함으로써 정책 의견 수렴 활동과 비교하여 정책 연구 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다른 간행물 실적들과 비교하여 연구논문 실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을 정당이 아닌 정당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면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연구논문 실적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제4장. 주요 해외 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 현황과 정책적 함의

I. 해외 국가 정당정책연구소 개관

앞서 정당정책연구소의 의의,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주요 해외 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 3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2019년 발간한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보고서 중에서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⁸⁾ 참조하여 주요 해외 국가 정당정책연구소 사례를 선택하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정당정책연구소 지표는 독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일찍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의 정당정책연구소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최근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연구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Konrad Adenauer Foundation (KAS),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등 독일 정책연구소와 재단들이 최상위권 순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벨기에 등의 정책연구소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정당정책연구소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지표에 포함된 39개 정당정책연구소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프리덤하우스가 제공하는 국가별 민주주의 지표를 고려하여 2018년 기준 민주주의체제로 분류된 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만을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민주국가 하에서 정당정책연구소가 정당정치, 정책선거, 책임정치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표 30>의 정당정책연구소 사례에서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터키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우선적으로 사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8) James G. McGann.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2019). TTCSP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s. 16. pp. 197-198. <https://repository.upenn.edu/think_tanks/16> (검색일: 2019/06/30).

<표 30> 해외 국가 주요 정당정책연구소 명단과 순위

순위	연구소	국가
1	Konrad Adenauer Foundation (KAS)	독일
2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독일
3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독일
4	Fabian Society	영국
5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FEPS)	벨기에
6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미국
7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미국
8	Heinrich Boll Foundation (HBS)	독일
9	Hanns Seidel Foundation (HSS)	독일
10	European Ideas Network (EIN)	벨기에
11	Demos	영국
12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WMCES), FKA Centre for European Studies	벨기에
13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미국
14	Party School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중국
15	Fundacion Jaime Guzman (FJG)	칠레
16	New Democrat Network (NDN)	미국
17	Foundation for EU Democracy	벨기에
18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KA Evert Vermeer Foundation	네덜란드
19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 (FAES)	스페인
20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Fondapol)	프랑스
21	Green European Foundation (GEF)	벨기에
22	Rosa Luxemburg Foundation (RLS)	독일
23	Wiardi Beckman Foundation (WBS)	네덜란드
24	Terra Nova	프랑스
25	Fondazione Italianeuropei	이탈리아
26	European Peoples Party	벨기에
27	Institute of Strategic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INSAP)	말레이시아
28	Fundacao Armando Alvares Penteado (FAAP)	브라질
29	SEDAR Institute	말레이시아
30	Institute of European Democrats (IED)	벨기에
31	Bertil Ohlinstitutet	스웨덴
32	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	인도
33	Fondation Jean-Jaurès	프랑스
34	Foundation fo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SETA)	터키
35	Fundação Perseu Abramo (FPA)	브라질
36	Jinnah Institute	파키스탄
37	India Foundation	인도
38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인도
39	Russkiy Mir Foundation	러시아

민주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들 중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지표에서 2개 이상의 정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상위 순위에 있는 두 개 정당정책연구소를 사례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1개의 정당정책연구소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그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모든 사례를 포함시켰다.

다만 해당 국가들의 언어가 다양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접근이 어렵거나 기초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순위 정당정책연구소를 사례 분석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정책연구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해외 정당정책연구소 사례 분석 기준을 토대로 연구진은 독일, 영국, 벨기에,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인도의 15개 정당정책연구소를 사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선별된 정당정책연구소들에 대하여 개요, 연계 정당과의 관계, 목표와 비전, 조직 구성, 주요 사업과 활동, 재정 확보, 회계 및 감사 보고의 항목에 주목하면서 비교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I. 해외 국가 정당정책연구소 사례 분석

1.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KAS)

1) 개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한 연구소이며, 동시에 리스트에 포함된 독일 정당정책연구소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AS는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과 연계된 정치재단이다. 특히 독일 연방공화국 초대 수상(1949~1963)이며, 기독교민주당의 창당 멤버였던 콘라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1876~1967)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다.

KAS는 1955년 12월 20일 “기독교민주주의교육협회(der Gesellschaft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Bildungsarbeit e.V.)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4년 10월 13일에 “콘라드 아덴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기독교민주당과의 관계

Hermann Ehlers, Robert Tillmanns, Heinrich Krone 등 기독교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독교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체계적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설립을 위하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전신인 “기독교민주주의교육협회(der Gesellschaft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Bildungsarbeit e.V.)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발전 과정에서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민주당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동시에 재단은 “주요 관심사, 법적 근거, 재정” 측면에서 기독교민주당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첫째,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 2 BvE 5/83)에 따라 정치재단들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 역시 독립적, 자율적,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역시 기독교민주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정치재단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조건으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계 정당과의 일정 수준 거리 유지가 정치재단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조건이 된다.

셋째, 정치재단들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재단들이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정당이나 정치집단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민주당과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3) 목표와 비전⁹⁾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국가와 세계적 수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평화, 자유, 정의의 증진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 민주주의의 강화
- 유럽 통합 증진에 기여
- 범 대서양 관계 확대

9) Konrad Adenauer Stiftung. “Who We Are and What We Provide. <https://www.kas.de/documents/252038/3346186/Imagefolder+-+English.pdf/eea523a2-6284-568b-975e-dae57fd6e172?version=1.1&t=1544688220843> (검색일: 2019/06/30).

- 개발 협력의 증대

4) 조직 구성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Bonn 근교의 Sankt Augustin와 Berlin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직원의 규모는 총 556명 수준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재단 학술원(Akademie der Stiftung), 영재교육문화부(Hauptabteilung Begabtenförderung und Kultur), 유럽국제협력부(Hauptabteilung Europäische und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정치컨설팅부(Hauptabteilung Politik und Beratung), 정치교육부(Hauptabteilung Politische Bildung), 기독교민주주의정치 문서 보관서(Archiv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Politik) 등의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학술원은 정치와 사회 관련 이슈 분석 심포지엄, 회의, 미팅, 전시회 등 대중 교육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하는 것을 주로 담당한다. 영재교육문화부는 재단의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영재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럽국제협력부는 국제협력부서로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한다. 한편 정치컨설팅부는 국내, 기업, 경제 정책 분야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교육부는 독일 내에 18개 교육장과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정치 관련 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민주주의정치문서보관서는 재단의 가치의 기독교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기록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주요 사업¹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교육을 담당한다. 재단은 시민들의 정치적 발언과 민주주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조직한다.

둘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연구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특히 기독교 민주주의 운동의 발전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록한다.

셋째, 정치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한다. 재단은 국내, 사회, 경제, 전자화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 개발을 선도한다.

넷째, 유럽 통합을 지원하고, 국제 이해 증진과 개발 협력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한다.

10) Konrad Adenauer Stiftung. "Satzung in der Fassung vom 6. Juli 2018." <<https://www.kas.de/satzung>> (검색일: 2019/06/30).

다.

다섯째, 국제협력사업으로 민주주의 확산과 법치 확산 프로그램,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민주 인사들에 대한 물질적, 도덕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능 있는 젊은 인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장학사업, 다양한 미팅·회의·패널 토론 등의 행사 개최,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활동 결과물 출판하고, 출판물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6) 활동실적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괄목한 만한 활동실적을 자랑한다. 우선 독일 국내에서 18개 시민교육장과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독일 국내에서 매년 2,500여회 이상의 회의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 약 145,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또한 독일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년 7,700여회의 회의와 행사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데나워 재단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장학생은 3,397명이며, 장학프로그램의 동문도 14,120명에 이른다.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창립 초창기부터 해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해외 협력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1962년 최초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국제연대기구(des Instituts für Internationale Solidarität der Konrad-Adenauer-Stiftung: IIS) 설립하였으며, 1978년 국제협력국(des Büros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BIZ) 설립하였다. 이후 1984년 IIS와 BIZ를 통합하여 국제협력기구(Institu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107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숫자만 해도 737명에 이른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이들 해외 사무소를 중심으로 120개국 이상에서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7) 재정 확보¹¹⁾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공적 자금으로 대부분의 재원 확보한다.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2019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예상 약 2억 유로이다. 이중 연방지원금이 94.2%, 지방정부 지원금이 1.5%, 그리고 기타

11) Konrad Adenauer Stiftung. “Finanzierung.” <<https://www.kas.de/finanzierung>> (검색일: 2019/06/30).

지원금이 2.9%로 전체 예산의 98.6%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표 31> KAS 예상 수입 내역: 2019년

항목	금액 (1000 €)	비율	
지원금/보조금	연방지원금	190,654	94.2%
	지방정부 지원금	3,111	1.5%
	기타 지원금	5,788	2.9%
	합계	199,553	98.6%
기부	412	0.2%	
등록비	1,571	0.8%	
기타 수입	793	0.4%	
합계	202,329	100.0%	

출처: Konrad-Adenauer-Stiftung. *Jahresbericht 2018*. (June 6, 2019), p. 41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https://www.kas.de/einzeltitel/-/content/deutschland-das-naechste-kapitel-jahresbericht-2018>> (검색일: 2019/06/30).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체 공적 자금의 78%를 차지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확보된 재정은 국제협력사업, 독일 학생 지원 프로젝트, 해외 학생 지원 프로젝트, 중요 문서 기록 분비 프로젝트 등에 사용된다. 공적 자금의 두 번째 형태는 기관자금(혹은 세계보조금 Globalzuschüsse)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체 자금의 약 21.7%가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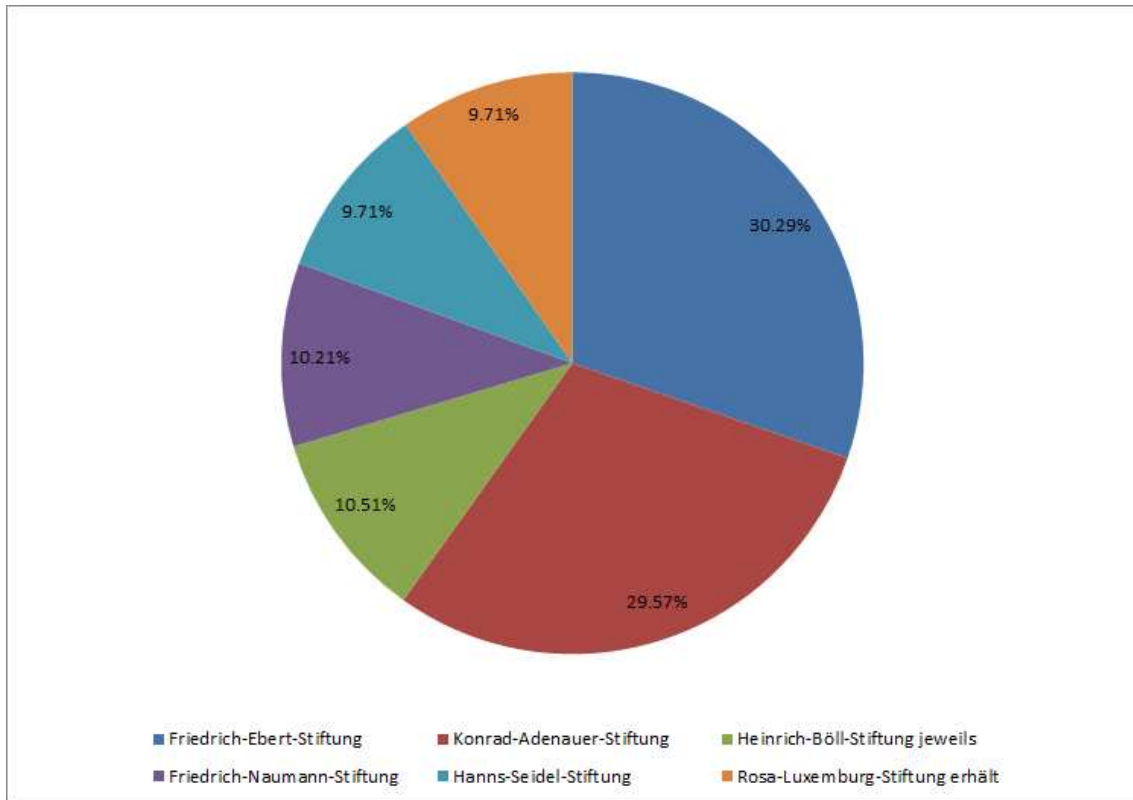
독일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포함한 정치재단에 지원되는 공적 자금의 지원과 분배는 독일연방하원예산위원회(Haushaltsausschuss des Deutschen Bundestags fest) 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공적 자금의 지원과 분배는 연방예산규칙(Bundes- bzw. Landeshaushaltsordnung) 제22항, 제44항, 기타 보조 행정규정을 따른다.

독일에서는 재단에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지원 조건은 1968년 7월 14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 2 BvE 5/83)에 따른다. 이 판결에 따르면, 우선 정치재단의 활동이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재단이 법률적, 실효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각 정치재단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정당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독일 기관자금(세계 보조금)의 정치재단별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Friedrich-Ebert-Stiftung(30.29%)과 Konrad-Adenauer-Stiftung (29.57%)이 가장

많은 기관자금을 배정받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Heinrich-Böll-Stiftung jeweils (10.51%), Friedrich-Naumann-Stiftung (10.21%), Hanns-Seidel-Stiftung (9.71%), Rosa-Luxemburg-Stiftung erhält (9.71%) 등 순으로 기관 자금을 배정받고 있다.

[그림 21] 기관자금(세계 보조금)의 정치재단별 배분 현황



8) 회계 및 감사 보고¹²⁾

독일의 정치재단들은 엄격한 회계 및 감사 보고를 시행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결산보고서와 연례 보고서를 새로운 회계연도 1/4분기 이내에 경영이사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작성된 연차결산보고서는 새로운 회계연도 상반기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정치재단의 내규에 의한 자체 감사 이외에도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엄격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부 감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① 공적 자금을 기부한 정부 기관, 특히 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12) Konrad Adenauer Stiftung. “Satzung in der Fassung vom 6. Juli 2018.” <https://www.kas.de/satzung> (검색일: 2019/06/30).

Innern/Bundesverwaltungsamt)와 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②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③ 지방정부 감사원(Landesrechnungshöfe), ④ 국세청(Finanzamt), ⑤ 기부한 정부기관에 의하여 고용된 공인회계사 등이다. 공적 자금을 기부한 정부 기관, 연방감사원, 지방정부 감사원이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정치재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정치재단의 자금 사용이 세금 규정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감사한다. 특히 비과세 대상인 정치재단이 자신들의 자금을 자선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정당이나 정치집단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엄격하게 진행된 감사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특히 독일의 정치재단은 ‘정치재단의 국가자금에 대한 공동 선언(Gemeinsame Erklärung zur staatlichen Finanzie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부록 2] 참조)을 발표하였으며,¹³⁾ 이에 따라 정치재단들은 자신들의 활동 내역과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중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 264 Handelsgesetzbuch에 따라 감사를 마친 결산재무제표, 특히 자산 보유 현황과 수입지출내역서는 관보나 정치재단의 연례보고서¹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차기 년도의 예상 수입지출내역서를 공개한다. 재단은 연례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13) Konrad-Adenauer-Stiftung, Friedrich-Ebert-Stiftung, Friedrich-Naumann-Stiftung, Hanns-Seidel-Stiftung, Heinrich-Böll-Stiftung 1998년 공동선언에 합의하였으며, Rosa-Luxemburg-Stiftung은 2003년에 가입하였다.

14) Konrad-Adenauer-Stiftung. *Jahresbericht 2018*. (June 6, 2019) <<https://www.kas.de/einzeltitel/-/content/deutschland-das-naechste-kapitel-jahresbericht-2018>> (검색일: 2019/06/30).

Capital Account

Annual Accounts as of 31 December 2017

Assets	31 December 2017	31 December 2016
	€	Thousand €
A. Fixed assets		
Intangible assets	183,434.00	322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26,174,910.67	23,482
Financial assets	11,676,013.63	12,004
B. Special assets	6,657,018.94	6,595
C. Current assets		
Inventories	44,500.23	56
Receivables and other current assets	2,406,362.74	3,302
Cash at banks and on hand	16,522,150.23	12,918
D. Prepaid expenses	70,187.37	230
Balance sum	63,734,577.81	58,909
Liabilities	31.12.2017	31.12.2016
	€	Thousand €
A. Own funds	5,330,209.08	5,285
B. Reserves	1,756,896.57	1,491
C. Earmarked funds	1,949,793.21	1,919
D. Subsidies for asset financing	37,280,546.88	35,541
E. Other liabilities	11,845,414.10	10,371
F. Deferred income	5,571,717.97	4,302
Balance sum	63,734,577.81	58,909

Our annual accounts were audited and certified by BDO AG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The Konrad-Adenauer-Stiftung e. V. publishes its balance sheet, a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s, as well as the complete certificate provided by the auditor in both our annual financial statement and in the Federal Gazette, which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www.ebundesanzeiger.de).

[그림 23] KA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Income Statement/ Expenditure Account

Annual Accounts as of 31 December 2017

Grants and subsidies	31 December 2017 €	31 December 2016 Thousand €
Federal government grants	164,916,988.02	159,148
State and municipal grants	3,004,599.25	2,780
Other grants	4,552,791.66	4,533
	172,474,378.93	166,461
Income from funds	268,792.35	274
Donations	768,142.46	982
Membership fees	1,902,979.04	2,004
Other income	1,468,378.60	1,384
Project expenses		
International cooperation	93,386,312.24	88,685
Student and graduate scholarships	24,588,719.04	23,550
Congresses, meetings, and seminars	5,998,639.05	6,235
Exhibitions and publications	1,215,348.65	1,423
Research expenses	586,973.88	344
Other project expenses	820,357.90	1,260
	126,596,350.76	121,497
Fund expenses	234,991.11	212
Personnel expenses	35,244,545.27	34,046
Administrative expenses	12,513,912.25	11,957
Expenses for investment and other financing	792,769.50	1,752
Grants to other foundations	963,000.00	963
Other expenses	252,182.65	241
Depreciation on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3,209.00	14
Expense/revenue surplus	271,710.84	425
Withdrawals from reserves	525,866.98	490
Allocations to reserves	776,744.77	896
Net income	20,833.05	19

On 17 February 1993, the commission of independent experts appointed by the German Federal President published its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mmissions' findings, we hereby publish the following details for the 2016 fiscal year as a supplement to the preceding annual financial statement.

Size of personnel compared to previous year

Status	31 December 2017	31 December 2016
Personnel in Germany	549	547
Personnel abroad	107	100
Total	656	647
Trainees	9	11

The following illustrates the size and nature of the foundation's management, which consists of members of the German Bundestag, state parliaments, as well as federal or state government, party executives at the federal or state leve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The Board of the Konrad-Adenauer-Stiftung e. V. with a total of 23 members* (22 members, 1 Honorary Chair):

- 1 Federal Chancellor
- 1 President of the German Bundestag
- 6 Members of the German Bundestag
- 5 Members of the federal party executive
- 13 without any of the above mentioned executive functions

* Some members perform more than one executive function.

[그림 24] KAS 연례보고서 예상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Overview

Expected Income and Expenses

Income	2019 (Target)* Thousand €	2018 (Credit) Thousand €
Grants and subsidies		
Federal government	190,654	171,817
State governments	3,111	3,018
Other	5,788	5,290
	199,553	180,125
Funds/Donations	412	300
Registration fees	1,571	1,487
Other revenues	793	1,164
Total income	202,329	183,076
Expenses		
	2019 (Target)* Thousand €	2018 (Credit) Thousand €
Project expenditures		
Student and graduate scholarships	26,074	25,160
Congresses and seminars	6,544	5,519
International cooperation	104,966	94,439
Publications/exhibitions	2,437	1,348
Research expenses	936	471
Support of art and culture	442	351
Other project expenses	920	623
	142,319	127,911
Personnel expenditures (within Germany)	40,025	39,026
Administrative expenditures		
Business needs	3,069	2,773
Building expenditures	4,713	4,708
Other administrative expenditures	3,509	2,512
Sales merchandise	6	1
	11,297	9,994
Other expenditures	5,215	1,825
Expenditures on investments	3,473	4,320
Total expenses	202,329	183,076

* Budget for 2019. Last amended: 29 October 2018 (target)

2. 독일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

1) 개요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한 연구소이며, 동시에 리스트에 포함된 독일 정당정책연구소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FES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진 정치재단이다. 독일의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과 연계된 정치재단이다. 독일사회민주당 출신으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Fridrich Ebert의 유언에 따라 1925년 설립되었다.

2) 목표와 비전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재단이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인 기본적 가치들이 자유, 정의, 연대를 추구한다.

비영리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현재의 정치적 도전들에 대한 다원적인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에베르트 재단은 다음의 목표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 민주 교육 촉진
- 국제 협력 촉진
- 민주주의 지역의 사회적 발전

3) 독일사회민주당과의 관계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은 에베르트 재단의 설립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에베르트 재단은 사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프레드릭 에베르트의 유언에 따라 당시 독일사회민주당의 총수였던 Konard Ludwig이 1925년 설립하였다. 당시 독일사회민주당, 그리고

당과 연계된 노동조합이 기금을 조성하여 에베르트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독일사회민주당에 의하여 설립된 에베르트 재단은 이후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창립 초기 재단의 중요한 관심사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중요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능 있고 능력을 가진 젊은 노동자 계급들이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을 섰다. 이 과정에서 독일사회민주당은 에베르트 재단의 장학사업의 수혜자를 추천하면서 재단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933년 나치당에 의하여 활동이 중단되었던 에베르트 재단이 재설립된 것 역시 독일사회민주당의 힘이었다.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Sozialistischen Deutschen Studentenbundes: SDS)이 주도하여 에베르트 재단의 재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47년 독일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독일사회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에베르트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에베르트 재단의 대표들은 Heinz Kühn(1983-1987 역임), Holger Börner(1987-2003), Anke Fuchs(2003-2010 역임) 등 모두 독일사회민주당 출신들이 역임하였다.

한편 에베르트 재단의 사회민주당기록보관소(Archivs der sozialen Demokratie: AdsD)와 도서관 등은 독일사회민주당 집행부, 독일사회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노동조합 등의 기록과 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면서 사회민주주의 가치의 전파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에베르트 재단은 남유럽에서의 사회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1970년대 에베르트 재단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민주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포르투갈 사회주의자 정당’이 1973년 독일 Bad Münstereifel에 위치한 에베르트 교육기관에서 설립되었다. 또한 에베르트 재단은 스페인에서 노동조합 UGT 설립과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설립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에베르트 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서 독일사회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독일사회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재단 재정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독일사회민주당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 2 BvE 5/83)에 따라 에베르트 재단 역시 독일사회민주당과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에베르트 재단은 1954년 자선기관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자선 활동이 아닌 정당이나 정

치집단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에베르트 재단은 독일사회민주당과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조직 구성

에베르트 재단은 Bonn과 Berlin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직원의 규모는 약 670명 수준이다. 재단은 총회, 집행이사회, 신탁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이사회는 회장, 두 명의 부의장, 집행이사회 위원 등으로 최대 11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총회에서 선출된다.

에베르트 재단은 독일 Stuttgart, Potsdam, Hamburg, Munich, Wiesbaden, Schwerin, Hannover 등 7개 주(Landes) 사무소와, 7개의 지역 사무소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에 100개 이상의 해외 대표부를 운영 중에 있다.

5) 주요 활동

에베르트 재단은 궁극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촉진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에베르트 재단은 다음의 활동에 주력한다.

첫째,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교육 사업에 주력한다. 특히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정책적 자문을 한다. 경제, 사회, 교육 정책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중요한 전략을 개발한다. 그리고 독일, 유럽,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 논의를 형성한다.

셋째,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 평화 협력과 인권 정책의 지원,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촉진, 법의 지배와 자유로운 노조 활동, 강력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상호 이해와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제 세미나와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재능 있는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을 한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자녀나 이민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교육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다섯째, 사회민주주의의 보존 사업을 추진한다. 기록보관서와 도서관을 통하

여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역사적 뿌리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지원한다.

6) 활동실적

에베르트 재단은 괄목한 만한 활동실적을 자랑한다. 우선 2018년 기준 Bonn과 Berlin, 그리고 주와 지역사무소 등에 약 60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에베르트 재단의 핵심 임무는 정치 교육과 컨설팅이다. 재단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현재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돕는다. 재단은 독일에서 2018년에 토론 포럼, 심포지엄, 전시 등 2,750회 이상의 교육 행사를 조직하였다. 약 140,000여명 이상이 재단이 주체한 교육 행사에 참여하였다. 에베르트 재단은 또한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0개의 출판물을 발간하였다. 이들 출판물들은 분석과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와 이슈브리핑, 핸드북, 교육 교재와 행사 문서 등이 포함된다.

에베르트 재단은 적극적인 해외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제적 정책연구소로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에베르트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해외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107명의 해외 직원들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촉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베르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에 동조하는 국내외 젊은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 에베르트 재단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의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 2018년 기준 2,876명의 학생과 박사 과정 학생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해외 장학생은 전체 장학생의 10%에 해당하는 286명이었다.

7) 재정 확보

에베르트 재단 역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나 다른 독일 정치재단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공적 자금으로 대부분의 재원 확보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르트 재단은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치재단에 배분하는 기관자금(세계 보조금) 중 30.29%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것은 독일의 정치재단 중에서 가장 많다.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2019년 에베르트 재단의 예산 수입은 €184,031,633이다. 이 중 연방지원금이 96.7%, 지방정부 지원금이 1.6%, 그리고 기타 지원금이 0.7%로 전체 예산의 99%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표 32> Friedrich Ebert Stiftung 예상 수입 내역: 2019년

항목		금액 (1,000 €)	비율
지원금/보조금	연방지원금	177,913,253	96.7%
	지방정부 지원금	3,030,000	1.6%
	기타 지원금	1,242,380	0.7%
	합계	199,553	99.0%
기부		500,000	0.3%
등록비		678,000	0.4%
기타 수입		668,000	0.4%
합계		184,031,633	100.0%

출처: Friedrich Ebert Stiftung. *Jahresbericht 2018/Perspektiven 2019*. p. 71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http://library.fes.de/pdf-files/fes/03208/jb-2018.pdf> (검색일: 2019/08/13)

8) 회계 및 감사 보고

에베르트 재단의 경영이사회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연차결산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영이사회에서 작성된 연차결산보고서는 반드시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감사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임되고 임명된다.

감사를 마친 연차결산보고서는 승인과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사 결과의 승인 주체는 총회이다. 감사를 마친 연차결산보고서와 연례보고서는 총회에 제출되며, 총회에서 연차결산보고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총회에서 승인된 연례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에베르트 재단도 정치재단의 국가자금에 대한 공동 선언(Gemeinsame Erklärung zur staatlichen Finanzie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부록 2] 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 내역과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중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 264

Handelsgesetzbuch에 따라 감사를 마친 결산재무제표, 특히 대차대조표와 수입지출내역서는 관보나 재단의 연례보고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에베르트 재단은 이들 자료에 더하여 예상 수입지출내역서도 공개하고 있다.

[그림 25] FE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I: 2018년

Jahresabschluss

BILANZ ZUM 31. DEZEMBER 2017

AKTIVA

Angaben in Euro

	1.1.2017	Zugänge/ Umbuchungen	Abschrei- bungen/ Abgänge/ Umbuchungen	31.12.2017	31.12.2016
A. Anlagevermögen					
I.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630.239,00	702.923,32	273.057,24	1.060.105,08	630.239,00
II. Sachanlagen					
1. Grundstücke und Bauten	74.448.390,45	655,95	2.422.115,95	72.026.930,45	74.448.390,45
2.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4.896.923,10	1.401.846,91	912.628,91	5.386.141,10	4.896.923,10
3. Geleistete Anzahlungen und Anlagen im Bau	203.161,29	2.849.576,52	0,00	3.052.737,81	203.161,29
	79.548.474,84	4.252.079,38	3.334.744,86	80.465.809,36	79.548.474,84
II. Finanzanlagen	38.658.669,64	455.160,09	0,00	39.113.829,73	38.658.669,64
	118.837.383,48	5.410.162,79	3.607.802,10	120.639.744,17	118.837.383,48
B. Zweckgebundenes Vermögen				8.561.514,42	8.523.706,10
C. Umlaufvermögen					
I. Forderungen und sonstige Vermögensgegenstände				1.953.634,89	1.311.942,59
II. Kassenbestand und Guthaben bei Kreditinstituten				6.221.772,00	8.131.851,46
				8.175.406,89	9.443.794,05
D. Rechnungsabgrenzungsposten				126.119,77	15.052,25
				137.502.785,25	136.819.935,88

66

Die Bezeichnung der Davon-Vermerke bei der zweckgebundenen Rücklage erfolgte im Berichtsjahr mit den neuen gesetzlichen Normen der Abgabenordnung. Anpassungen der Vorjahresbeträge ergaben sich nicht.

[그림 26] FE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II : 2018년

PASSIVA						Angaben in Euro
	1.1.2017	Einstellungen/ Zugänge	Entnahmen/ Aufösungen	31.12.2017	31.12.2016	
A. Rücklage						
Zweckgebundene Rücklage	60.906.149,22	3.945.736,94	5.405.203,94	59.446.682,22	60.906.149,22	
davon Rücklage gemäß § 62 Abs. 1 Nr. 1 AO EUR 8.289.196,15 (l. Vj. EUR 11.090.372,12)						
davon Rücklage gemäß § 62 Abs. 1 Nr. 3 AO EUR 37.584.404,43 (l. Vj. EUR 33.840.256,90)						
davon Rücklage gemäß § 62 Abs. 3 AO EUR 13.573.079,64 (l. Vj. EUR 13.371.490,23)						
B. Sonderposten aus Zuwendungen für Anlagevermögen						
I.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630.239,00	619.732,74	189.866,66	1.060.105,08	630.239,00	
II. Grundstücke und Bauten	51.092.315,07	655,95	1.899.815,49	49.193.155,53	51.092.315,07	
III.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3.863.752,34	1.270.154,14	705.364,64	4.428.541,84	3.863.752,34	
IV. Geleistete Anzahlungen und Anlagen im Bau	203.161,29	2.849.576,52	0,00	3.052.737,81	203.161,29	
	55.789.467,70	4.740.119,35	2.795.046,79	57.734.540,26	55.789.467,70	
C. Sonderposten zum zweckgebundenen Vermögen				8.561.514,42	8.523.706,10	
D. Pensionsrückstellungen				2.393.484,00	2.464.828,00	
E. Verbindlichkeiten						
I. Verbindlichkeiten aus Lieferungen und Leistungen				3.236.901,21	2.374.751,84	
II. Sonstige Verbindlichkeiten				819.451,62	969.542,53	
				4.056.352,83	3.344.294,37	
F. Rechnungsabgrenzungsposten				5.310.211,52	5.791.490,49	
				137.502.785,25	136.819.935,88	

[그림 27] FE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Einnahmen- und Ausgabenrechnung

1. JANUAR BIS 31. DEZEMBER 2017

Angaben in Euro

	2017		2016	
1. Projektgebundene Zuwendungen der				
a) Bundesministerien	170.892.301,25		163.258.030,30	
b) Länder und anderer Körperschaften	2.965.875,53		2.891.711,33	
c) Sonstigen Zuwendungsgeber	1.495.449,73	175.353.626,51	1.654.827,32	167.804.568,95
2. Spenden				
a) Allgemeine Satzungszwecke	245.697,05		273.121,38	
b) Wissenschaftliche Zwecke	100.000,00		100.428,69	
c) Solidaritätsfonds der Studienstiftung	322.335,09	668.032,14	282.975,16	656.525,23
3. Erträge aus der Auflösung des Sonderpostens aus Zuwendungen für Anlagevermögen		3.007.820,14		2.914.808,17
4. Teilnahmegebühren		700.113,69		700.925,50
5. Sonstige Erträge		912.223,06		1.074.642,89
		180.641.815,54		173.151.470,74
6. Aufwendungen aus der satzungsmäßigen Tätigkeit				
a) Stipendien an deutsche und ausländische Studierende	27.719.846,19		25.503.710,28	
b) Staatsbürgerliche und gesellschaftspolitische Bildungsarbeit	22.945.381,35		25.392.586,53	
c)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Völkerverständigung und Partnerschaft*	100.814.091,29		95.990.649,93	
d) Forschungsprojekte	7.150.390,05		7.175.305,07	
e) Förderung von Kunst und Kultur	354.058,94	158.983.767,82	8.892,35	154.071.144,16
7. Abschreibungen		3.606.987,10		3.403.067,48
8. Zuführung zum Sonderposten aus Zuwendungen für Anlagevermögen		4.952.892,70		2.041.964,72
9. Sonstige Betriebs- und Verwaltungsaufwendungen		15.223.888,96		15.275.079,66
10. Mindereinnahme aus laufendem Betrieb		-2.125.721,04		-1.639.785,28
11. Finanzergebnis		674.658,43		381.118,05
12. Ergebnis der gewöhnlichen Vereinstätigkeit		-1.451.062,61		-1.258.667,23
13. Außerordentliche Aufwendungen (= außerordentliches Ergebnis)		8.404,39		1.535,31
14. Mindereinnahmen		-1.459.467,00		-1.260.202,54
15. Entnahme aus zweckgebundener Rücklage		1.459.467,00		1.260.202,54
16. Jahresergebnis		0,00		0,00

* zu den Entwicklungsländern

[그림 28] FES 연례보고서 예상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Gesamtübersicht aller im Haushalt 2019 zu erwartenden Einnahmen und Ausgaben

STAND: 31. JANUAR 2019

Angaben in Euro

I. Einnahmen	
1. Zuwendungen und Zuschüsse	
<i>Zuwendungen der Bundesministerien</i>	177.913.253
<i>Zuwendungen der Länder und anderer Gebietskörperschaften</i>	3.030.000
<i>Sonstige Zuwendungsgeber</i>	1.242.380
2. Spenden	500.000
3. Teilnehmergebühren	678.000
4. Sonstige Einnahmen	668.000
II. Ausgaben	
1. Aufwendungen aus der satzungsmäßigen Tätigkeit/Projektausgaben	
<i>Förderung von Studierenden und Gradulerten</i>	28.384.831
<i>Staatsbürgerliche und gesellschaftspolitische Bildungsarbeit (Tagungen und Seminare)</i>	23.976.587
<i>Internationale Zusammenarbeit</i>	108.323.867
<i>Forschungsprojekte</i>	6.817.242
<i>Förderung von Kunst und Kultur; sonstige Projektausgaben</i>	98.000
2. Personalaufwand für Inlandsmitarbeiter_innen* (nachrichtlich)	37.882.718
3. Sächliche Verwaltungsaufgaben	
<i>Sonstige Betriebs- und Verwaltungskosten</i>	14.917.445
4. Sonstige Betriebsaufwendungen	
5. Übrige Ausgaben	
6. Ausgaben für Investitionen	1.513.660
III. Voraussichtliches Jahresergebnis	0

* Der Personalaufwand für Inlandsmitarbeiter_innen ist bereits in den Positionen 1 (Aufwendungen aus der satzungsmäßigen Tätigkeit/Projektausgaben) und 3 (Sächliche Verwaltungsaufgaben) enthalten.

Der Personalaufwand für Inlandsmitarbeiter_innen beträgt insgesamt:	37.882.718 €
Darin enthalten sind für Löhne und Gehälter:	29.220.936 €
Die sozialen Abgaben betragen:	8.661.781 €

3. 영국 Fabian Society

1) 개요

영국의 Fabian Society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전체 4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트에 포함된 영국 정책연구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Fabian Society는 영국 노동당(Labour Party)과 연계된 좌파 정책 연구소이다. 점진적인, (개혁에) 신중한' 등의 뜻을 가진 페이비언(Fabian)이라는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점진적인 민주 사회주의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정책연구소이다. 1884년 1월 4일 런던에서 설립된 이래로 좌파적 공공정책과 정치 아이디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 노동당과의 관계

페이비언 협회는 노동당 조직기구인 사회주의자 협회(socialist society)의 일원으로 노동당과 연계되어 있다. 사실 페이비언 협회는 노동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페이비언 협회는 1890년 노동당 전신인 노동대표위원회(Labour Representation Committee)와 1906년 노동당 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동당의 강령, 국유화 정책, 사회 보장 정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후 페이비언 협회 회원들은 노동당 출신으로 의회 진출하였다. 특히 1945년 선거에서 229명의 페이비언 협회 회원들이 노동당 출신으로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당 출신 첫 총리인 James R. Macdonald, 2000년대 총리를 역임한 Tony Blair와 Gordon Brown 등이 다수의 노동당 출신 총리 배출하였다. 특히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신노동당(New Labour, 1990년대 중반~2010년 Tony Blair와 Gordon Brown 총리 시절 노동당)의 많은 정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2000년대 증세와 의료보험 지출 확대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페이비언 협회가 노동당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편집, 조직, 재정적으로(editorially, organisationally and financially)' 노동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3) 목표와 비전

페이비언 협회는 다음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주의자 조직이다.

- 권력, 부, 기회의 평등 강화
-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과 공공서비스 가치
- 책임감 있고, 관용적이며, 활동적인 민주주의
- 시민권, 자유, 인권
- 지속가능한 개발
- 다자적 국제 협력

4) 조직 구성

페이비언 협회는 방대한 회원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기준 페이비언 협회의 회원은 7,295명이다.¹⁵⁾ 페이비언 협회의 운영과 관리는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집행위원회는 평회원 선출위원 10명, 지역조직 추천 인사 중 선출된 3명, 청년조직, 여성조직, 지방정부조직(스코틀랜드, 웨일즈) 대표, 직원대표 1명,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명예회계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선거는 2년마다 실시하며, 청년조직과 직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매년 실시한다.

페이비언 협회는 또한 4개의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청년 조직인 Young Fabian Group이 있다. 청년 조직은 1960년 설립에 설립되었으며, 31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여성 조직인 Fabian Women's Network와 50개의 잉글랜드 내 지역협회를 가지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는 지방정부 조직인 Scottish and Welsh Fabian groups이 활동하고 있다.

15) Fabian Society. *the Annual Report of the Fabian Society 2018*. p. 4, <<https://fabians.org.uk/wp-content/uploads/2018/11/Annual-report-2018-WEB-FINAL-2.pdf>> (검색일: 2019/06/30).

5)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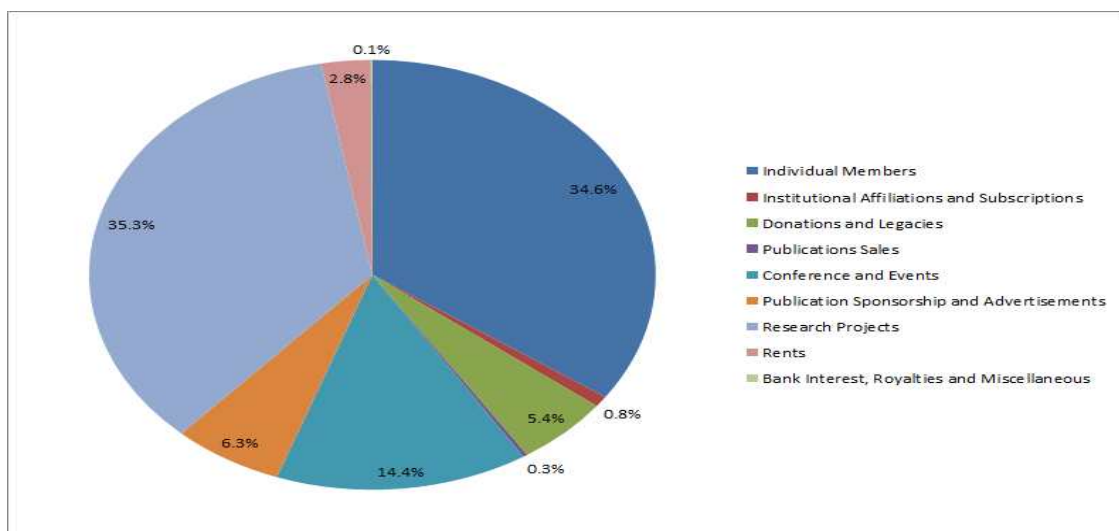
페이비언 협회의 활동은 다른 정책연구소들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insight), 분석, 의견(opinion)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출판한다. 또한 연구 활동과 주요 정책 조사를 수행한다. 회의, 강의, 원탁 회의 등의 행사도 개최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회원 토론과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페이비언 협회는 그 역사만큼 다양한 해외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페이비언 협회는 영어권 사회 민주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는 비슷한 형태의 페이비언 협회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호주(Australian Fabian Society), 캐나다(Douglas-Coldwell Foundation), 이탈리아(Sicilian Fabian Society), 뉴질랜드(NZ Fabian Society) 등에도 영국과 비슷한 형태의 페이비언 협회가 활동한다.

6) 재정 확보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독일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페이비언 협회는 공공자금의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29] Fabian Society 수입 내역 및 구성비: 2018년



출처: Fabian Society. *the Annual Report of the Fabian Society 2018*. p. 19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그림 29]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페이비언 협회는 회비, 기관회원, 기부, 출판물 판매, 회의 및 행사 후원, 출판 후원 및 광고, 연구용역, 임대료, 이자 등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전체 수입 중에서 연구용역(35.3%)와 회비(34.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페이비언 협회는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모금 규정(Funding Code of Practice, [부록 3] 참조)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모금한다. 페이비언 협회는 노동당 연계 협회이기 때문에 자선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페이비언 협회는 자선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페이비언 협회는 재정 확보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을 만들어 수행하고 있다. 우선 수입 내역을 연례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000 이상의 모금 내역에 대해서는 그 상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페이비언 협회는 정책연구소임과 동시에 다수의 노동당원이 참여한 조합(members association)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당에 의하여 채택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금은 정치기부로 통제되며, £7,500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7) 회계 및 감사 보고

페이비언 협회는 회계연도(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연차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와 관련하여 페이비언 협회가 갖는 특이점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이외에 외부기관인 ‘Who Funds You’와 ‘Transparify’로부터 별도의 재정 투명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마친 감사 결과는 페이비언 협회의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수입지출내역서([그림 30] 참조)와 대차대조표([그림 31] 참조)를 포함하는 연차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의 보고는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개최되는 연례총회에서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승인된 연례보고서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림 30] Fabian Society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2018년

THE FABIAN SOCIETY
INCOME AND EXPENDITURE ACCOUNT
FOR THE YEAR ENDED 30TH JUNE 2018

	2018 £	2017 £
INCOME		
Individual Members	261,766	232,276
Institutional Affiliations and Subscriptions	6,220	5,325
Donations and Legacies	40,451	12,934
Publications Sales	1,965	2,472
Conference and Events	109,037	154,786
Publication Sponsorship and Advertisements	47,610	93,569
Research Projects	267,000	232,565
Rents	21,303	17,913
Bank Interest, Royalties and Miscellaneous	633	568
Total Income	£755,985	£752,408
EXPENDITURE		
Research Projects	44,596	59,155
Staff Costs	421,487	420,346
Printing and Distribution	81,675	94,456
Conference and Events	62,672	54,817
Promotion	7,255	5,627
Affiliation Fees	6,158	5,086
Postage, Phone and Fax	8,752	10,758
Depreciation	21,540	17,881
Travel	332	1,470
Other	6,145	6,910
Stationery and Copying	7,614	9,179
Legal and Professional	9,263	4,946
Irrecoverable VAI	-	1,223
Premises Costs	59,058	52,038
Bad debts	3,804	1,882
Information Systems	13,909	7,190
Total Expenditure	£754,260	£752,964
Surplus/(Deficit) Before Tax and Transfers	1,725	(556)
Transfers from Reserves	-	-
Surplus/(Deficit) before Taxation	1,725	(556)
Corporation Tax	-	-
Surplus/(Deficit) for the year	£1,725	£(556)

[그림 31] Fabian Society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7년~2018년

THE FABIAN SOCIETY
BALANCE SHEET AS AT 30TH JUNE 2018

	2018		2017	
	£	£	£	£
FIXED ASSETS	1,265,020		1,226,090	
CURRENT ASSETS				
Stock	5,798		6,448	
Debtors and Prepayments	175,824		160,234	
Bank and Cash	-		-	
	<u>181,622</u>		<u>166,682</u>	
CREDITORS-AMOUNTS FALLING DUE WITHIN ONE YEAR				
Creditors and Accruals	(166,129)		(113,984)	
Net Current Assets	15,493		52,698	
NET ASSETS	<u>1,280,513</u>		<u>1,278,788</u>	
General Fund	1,274,238		1,272,513	
Restricted Fund	6,275		6,275	
TOTAL FUNDS	<u>1,280,513</u>		<u>1,278,788</u>	

These financial standards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A "Small Entities" of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02 "Th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applicable in the UK and Republic of Ireland."

4. 영국 Demos

1) 개요

영국의 Demos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전체 11위에 위치하고 있다. 리스트에 포함된 영국 정당정책연구소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Demos는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등록된 독립적 교육 자선기관이다. Demos는 1993년 설립되었다. Demos는 설립 당시 영국의 투표 참여 하락과 주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못하는 영국 정치기관의 무능력을 정치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Demos는 기본적으로 비당파적(non-partisan)이고 범정당적(cross-party)인 정책연구소로 목표로 하고 있다.

2) 정당과의 관계

Demos는 설립 초기 영국의 노동당(Labour Party)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1997년대 토니 블레어(Tony Blair) 행정부 당시 Demos 설립자 중 한 명인 Geoff Mulgan가 정부에 합류하면서 Demos는 ‘신노동당(New Labour)’ 비전 설립의 중심에서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지도부의 교체 이후 Demos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Demos는 이 시기 이후 점진적으로 어느 정당과도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파적이고 범정당적인 독립적인 정책연구소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목표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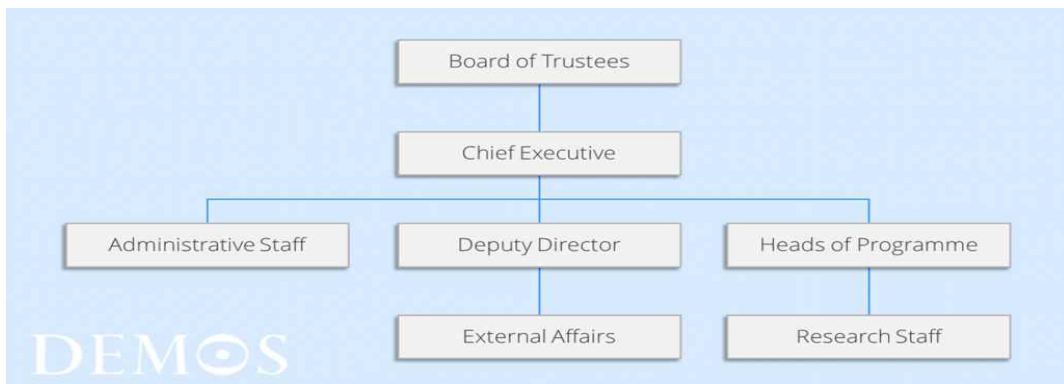
Demos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자선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치, 경제, 환경, 공공 정책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교육을 장려
- 위에 언급한 교육 분야에서 공익적 연구를 촉진하고, 유용한 성과를 출판

4) 조직 구성

Demos의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Demos의 조직은 [그림 29]와 같다. Demos의 이사회(a board of Trustees)는 총 6인으로 구성되며, Demos의 경영과 중요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특히 이사회는 조직을 위한 전략 수립과 감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현재 Chef Executive를 포함하여 Demos에는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32] Demos 조직도



5) 활동

Demos는 다른 정책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 행사 조직, 출판 등의 활동을 한다. 우선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Demos는 민주주의, 복지, 교육, 미래 기술, 경제와 지역 성장, 미래 등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Demos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연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 시민 권한 강화(Empowered Citizens)
- 권력과 제도(Power and Institutions)
- 포용적 공동체(Inclusive Communities)
- 공유 번영(Shared Prosperity)
- 사회미디어분석센터(CASM: the Center for the Analysis of Social Media):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빅데이터 연구

또한 Demos는 정치인, 정책 결정자, 유명 작가와 학자, 경제계 거물 인사와 전문가 등을 초빙하는 행사를 조직한다. 그리고 Demos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무료 공개 출판(open access publisher)함으로써 시민들 누구나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Demos는 분기별로 *Demos Quarterly*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6) 재정 확보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Demos는 앞서 언급된 Fabian Society처럼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Demos는 개인이나 자선기금,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비정파적이고 범정당적 정책연구소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당의 기금은 받지 않는다.

<표 33> Demos 수입 금액과 구성비: 2017년 (단위: £)

항목	비제한기금 ¹⁶⁾	제한기금 ¹⁷⁾	합계	비율
기부	32		32	0.0%
대여 수입	38,727		38,727	5.2%
투자 이익(은행이자)	67		67	0.0%
프로젝트	331,652	55,021	386,673	52.4%
행사/세미나	55,067		55,067	7.5%
출판	1,878		1,878	0.3%
연구 후원기금		150,631	150,631	20.4%
기타 수익	105,125		105,125	14.2%
합계	532,548	205,652	738,200	100.0%

❖ 출처: Demos. *Demos 2017 Annual Report and Accounts*. pp. 11-20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표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Demos는 기부, 대여 수입, 투자 이익, 프로젝트 펀딩, 행사/세미나 펀딩, 출판 수입, 연구 후원기금, 기타 수입으로 재원을

16) 비제한기금이란 기금 사용처에 대한 제한 없이 이사회의 권한 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17) 제한기금이란 기부자 혹은 기금의 조성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처가 제한된 기금이다.

마련한다.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Demos의 2017년 수입은 £738,199이다.¹⁸⁾ 전체 수입 중에서 프로젝트 펀딩(52.4%)과 연구 후원기금(20.4%)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7) 회계 및 감사 보고

자선기관인 Demos는 자선기관에 해당하는 회계 및 감사 보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Demos의 이사회는 회계 연도의 연차결산보고서와 이사회 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이사회는 자신들이 준비한 보고서와 연차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요청하거나 혹은 감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외부의 독립적 조사관(independent)에게 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외부의 독립조사관은 기관의 회계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차결산보고서에 보고한다.

약 30쪽(2017년 연차보고서의 경우) 정도에 해당하는 Demos의 연차보고서는 연구서의 활동 내역과 재정 상황을 자세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는 Demos의 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 독립조사관 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Statement of Financial Activities, [그림 33] 참조)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그림 34] 참조), 현금 흐름 현황(Statement of Cash Flow, [그림 35] 참조), 수입지출내역서 상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emos는 Fabian Society와 마찬가지로 자선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평가하는 ‘Who Funds You’와 ‘Transparify’의 평가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재정 건정성을 평가받는다. 연차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18) 한편 Demos의 2016년의 수입은 £1,183,425로 2017년과 비교하여 크게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Demos가 2017년과 달리 2016년에 자선단체와 재단, 상업 조직, 문화교육 조직, 정부 단체, 그리고 영국 외부기구 등으로부터 £537,304의 프로젝트와 연구기금을 모금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3] Demo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

DEMO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STATEMENT OF FINANCIAL ACTIVITIES
(incorporating income and expenditure account)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7

	Note	Unrestricted funds 2017 £	Restricted funds 2017 £	Total funds 2017 £	Total funds 2016 £
INCOMING RESOURCES					
Incoming resources from generated funds:					
Voluntary income	2	32	-	32	11,032
Activities for generating funds	3	38,727	-	38,727	32,432
Investment income - bank interest		67	-	67	452
Incoming resources from charitable activities	4	388,596	205,652	594,248	1,074,843
Other incoming resources	6	105,125	-	105,125	64,665
TOTAL INCOMING RESOURCES		532,547	205,652	738,199	1,183,425
RESOURCES EXPENDED					
Charitable activities	7	630,501	205,652	836,153	1,055,765
Governance costs	10	33,130	-	33,130	24,146
Other resources expended	8	14,126	-	14,126	23,848
TOTAL RESOURCES EXPENDED		677,757	205,652	883,409	1,103,760
MOVEMENT IN TOTAL FUNDS FOR THE YEAR - NET INCOME/(EXPENDITURE)					
FOR THE YEAR		(145,210)	-	(145,210)	79,665
Total funds at 1 January 2017		(56,142)	-	(56,142)	(135,807)
TOTAL FUNDS AT 31 DECEMBER 2017		(201,352)	-	(201,352)	(56,142)

The notes on pages 14 to 27 form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그림 34] Demo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7년

DEMO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NUMBER: 02977740

BALANCE SHEET
AS AT 31 DECEMBER 2017

	Note	£	2017 £	£	2016 £
FIXED ASSETS					
Tangible assets	14		15,235		23,569.07
CURRENT ASSETS					
Debtors	16	121,178		150,745	
Cash at bank and in hand		240		35,883	
		<u>121,418</u>		<u>186,628</u>	
CREDITORS: amounts falling due within one year	17	(338,006)		(266,339)	
NET CURRENT LIABILITIES			(216,587)		(79,711)
NET LIABILITIES			(201,352)		(56,142)
CHARITY FUNDS					
Restricted funds	18		-		-
Unrestricted funds	18		(201,352)		(56,142)
TOTAL DEFICIT			(201,352)		(56,142)

The financial statements were approved by the Trustees on 28/09/2018 and signed on their behalf, by:

Julie Mellor, Chair

Julie Mellor

The notes on pages 14 to 28 form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그림 35] Demos 연례보고서 현금 흐름 현황 보고 양식: 2017년

DEMO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STATEMENT OF CASH FLOW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7**

	2017 £	2016 £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34,127)	22,966
Interest paid	(1,791)	(1,510)
	<hr/>	<hr/>
Net cash in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35,917)	21,456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		
Interest received	67	452
Proceeds from sale of tangible fixed assets	208	-
Purchase of tangible fixed assets	-	(2,303)
	<hr/>	<hr/>
NET CASH PROVIDED BY / (USED BY) INVESTING ACTIVITIES	275	(1,851)
Change in cash and cash equivalents in the year	(35,642)	19,605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the beginning the year	35,883	16,277
	<hr/>	<hr/>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THE END OF THE YEAR	240	35,883
	<hr/> <hr/>	<hr/> <hr/>
Reconciliation of net incoming / (outgoing) resources from operating activities		
Net movement of resources in year	(145,210)	79,665
Interest received	(67)	(452)
Finance costs	1,791	1,510
Depreciation	8,334	8,334
Profit on sale of fixed assets	(208)	-
(Increase) / decrease in debtors	29,567	144,432
(Decrease) / increase in creditors	71,667	(210,523)
	<hr/>	<hr/>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34,127)	22,966
	<hr/> <hr/>	<hr/> <hr/>

5. 벨기에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FEPS)

1) 개요

벨기에의 FEPS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전체 5위에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트에 포함된 벨기에 정책연구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FEPS는 진보적인 정책연구소로서 유럽사회주의당(The Party of European Socialists: PES)과 연계된 정당정책연구소이다. FEPS는 자신들을 유럽 내에서 유일한 진보적인 정책연구소라고 자임하고 있다. 실제로 FEPS의 주요한 목적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유럽 프로젝트의 연계 시도하는 것이다.

2) 유럽사회주의당과의 관계

FEPS는 유럽사회주의당과 “밀접하게, 그러나 독립적인(close to, but independent from)”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FEPS는 유럽사회주의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왔다. FEPS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유럽사회주의당이였다.

FEPS 정회원은 기본적으로 유럽사회주의당과 당원뿐만 아니라 유럽사회주의당과 밀접한 정치재단이나 정책연구소의 회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으로 유럽사회주의당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기관들은 FEPS의 정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유럽사회주의당은 FEPS 내의 유럽사회주의당 정회원을 대표한다.

FEPS는 이처럼 유럽사회주의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FEPS는 유럽사회주의당의 하부기구가 아니라 자체적인 어젠다를 가진 독립적인 기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목표와 비전¹⁹⁾

FEPS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선 FEPS는 유럽연합(EU)의 설립 원칙, 즉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인간적 존엄성, 인권과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적 유용성(Intellectual Utility)을 추구한다. FEPS는 또한 진보 정책연구소로서 EU와 유럽 내에서 진보적 사상의 발전과 사회주의당(Socialists), 사회민주주의당(Social Democrats), 노동당(Labour), 진보민주당(Progressive Democrats)의 사상(ideas)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연구소로서 FEPS는 정치, 사회, 법, 경제 분야, 특히 유럽 및 국제 영역에서의 이들 분야와 관련된 연구, 정보, 교육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FEPS가 국가적 수준의 정책연구소가 아니라 유럽 차원의 정책연구소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책연구소인 Foundation Max van der Stoel(FMS)와 같은 국가적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4) 조직 구성

FEPS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지역 연구소를 지향하면서 그 본부를 Brussels에 두고 있다. FEPS는 총회, the Bureau라 불리는 행정부서, 연구 활동을 관장하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Board)의 3개 조직을 가지고 있다.

FEPS의 회원은 정회원과 자문회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권한이 다르다. 우선 정회원은 총회 참석, 발언권, 투표권이 부여된다. 반면 자문회원은 총회 참석과 발언권은 가지지만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5) 활동²⁰⁾

정책연구소로서 FEPS는 연구 활동, 행사 기획, 출판, 교육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19) The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Statutes of the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Article 4.2 and 4.5, <https://www.feps-europe.eu/attachments/content/feps%20statuts%202017_00147547%20final%20en.pdf> (검색일: 2019/06/30).

20) The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Statutes of the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Article 4.4.

첫째,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 주제와 관련한 연구 활동을 담당한다.

둘째, 사회적 토론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다.

셋째, FEPS의 목적과 비전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출판물을 제작하고 배부한다.

넷째, 사회민주주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6) 재정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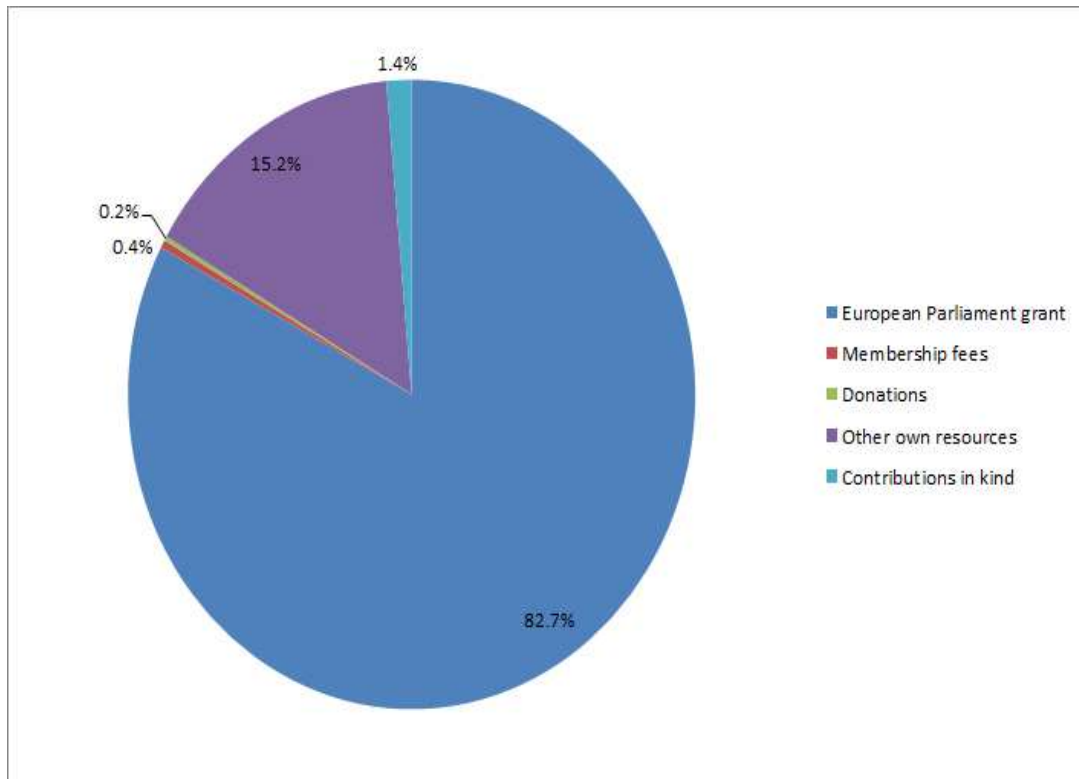
FEPS가 밝힌 재단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EU의 보조금
- 정회원 회비
- 다른 기관회원이나 개인들의 회비
- 기부
- 기타 수입

이상의 다양한 재정 수입원에도 불구하고 [그림 36]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 의회 지원금이 FEPS 1년 전체 예산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정 원천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이런 점에서 FEPS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로 공익적 성격이 강조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과 영국의 정책연구소와의 차이도 주목해볼 만하다. 사적 차원에서 재단의 재정을 확보하는 영국의 Fabian Society와 달리 독일의 연구재단들과 벨기에의 FEPS는 재정 수입으로 공적 자금을 의존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FEPS는 벨기에 정부의 공적 지원보다는 유럽 차원에서의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36] FEPS 수입 내역과 구성비: 2017년



출처: FEPS. *Annual Activity Report 2017*. p. 109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7) 회계 및 감사 보고²¹⁾

정책연구소로서 FEPS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까지 연차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맡도록 되어 있다. 연차결산보고서의 작성은 the Brueau가 담당한다. FEPS의 회계책임자가 FEPS의 회계와 관리를 검증하고, the Brueau를 대신하여 연례보고서에 발표한다.²²⁾

FEPS는 연차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감사주체를 살펴보면, the Brueau가 벨기에감사협회(the Belgian Institute of Auditors) 회원 중 한 명 이상의 위원을 임명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한다. 임명된 감사자는 FEPS의 재정 상태, 연차결산보고서, 연차보고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법, 내규, EU 규제에 부합하는지를 주로 검증한다.

21) The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Statutes of the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Article 22 and 23.

22) FEPS. *Annual Activity Report 2017*.
 <<https://www.feps-europe.eu/attachments/content/point%203-1%20-%20feps%20bm%2029062018%20-%202017%20activity%20report.pdf>> (검색일: 2019/06/30).

감사자의 감사를 마친 연차결산보고서는 승인과 공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사 결과의 승인 주체는 총회이다. 지출수입내역서를 포함한 연차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의 보고는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어 총회에 제출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승인된 연례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림 37] FEPS 연례보고서 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

BUDGET

EXPENDITURE		
Eligible expenditure	Budget 2017	Actual
A.1: Personnel costs	1.550.000,00	1.425.692,31
1. Salaries	1.450.000,00	1.201.945,17
2. Contributions	65.000,00	201.844,43
3. Professional training	12.000,00	1.399,10
4. Staff mission expenses	3.000,00	0,00
5. Other personnel costs	20.000,00	20.503,61
A.2: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costs	320.000,00	307.626,37
1. Rent, charges and maintenance costs	195.000,00	213.290,10
2. Cost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quipment	30.000,00	27.946,95
3. Depreciation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58.000,00	20.718,91
4. Stationery and office supplies	10.000,00	16.392,16
5.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charges	20.000,00	25.907,84
6. Printing, translation and reproduction costs	2.000,00	0,00
7. Other infrastructure costs	5.000,00	3.370,41
A.3: Administrative expenditure	1.466.765,00	1.382.967,83
1. Documentation costs (newspapers, press agencies, databases)	7.500,00	14.035,57
2. Costs of studies and research	1.436.765,00	1.330.537,98
3. Legal costs	10.000,00	25.501,73
4. Accounting and audit costs	10.000,00	12.892,55
5. Support to affiliated organisations and subsidies to third parties	0,00	0,00
6. Miscellaneous administrative costs	2.500,00	0,00
A.4: Meetings and representation costs	1.550.000,00	1.383.621,73
1. Costs of meetings of the Foundation	1.503.000,00	1.291.586,88
2. Participation in seminars and conferences	40.000,00	88.903,86
3. Representation costs	2.000,00	1.809,76
4. Cost of invitations	2.000,00	1.321,23
5. Other meeting-related costs	3.000,00	0,00
A.5: Information and publication costs	300.000,00	393.354,20
1. Publication costs	270.000,00	335.972,77
2. Creation and operation of Internet sites	7.500,00	1.520,82
3. Publicity costs	7.500,00	23.190,00
4. Communications equipment	7.500,00	32.670,61
5. Seminars and exhibitions	2.500,00	0,00
6. Election campaigns		
7. Other information-related costs	5.000,00	0,00
A.6: Expenditure relating to contributions in kind	150.000,00	72.777,94
A.7: Allocation to "Provision to cover eligible expenditure to be incurred in the first quarter of N+1"		
A. TOTAL ELIGIBLE EXPENDITURE	5.336.765,00	4.966.040,38
B.1: Non-eligible expenditure	0,00	71.854,88
1. Allocations to other provisions		
2. Financial charges		30.821,10
3. Exchange losses		
4. Doubtful claims on third parties		30.756,65
5. Others (to be specified). Re-invoicing of costs		
6. Expenditure from previous years		10.277,13
B. TOTAL NON-ELIGIBLE EXPENDITURE	0,00	71.854,88
C. TOTAL EXPENDITURE	5.336.765,00	5.037.895,26
H.1 Allocation of own resources to the specific reserve account	0,00	98.992,88
H. Profit/loss for verifying compliance with the no-profit rule (G-H.1)	0,00	0,00

[그림 38] FEPS 연례보고서 수입내역서 양식: 2017년

REVENUE		
	Budget 2017	Actual
D.1 Dissolution of "Provision to cover eligible costs to be incurred in the first quarter of N"1		
D.2 European Parliament grant	4.536.250,00	4.221.134,32
D.3 Membership fees	35.000,00	21.000,00
3.1 from member parties		
3.2. from individual members	35.000,00	21.000,00
D.4 Donations	0,00	12.000,00
4.1 above 500 EUR		12.000,00
4.2 below 500 EUR		
D.5 Other own resources (to cover eligible expenditure) (to be listed)	615.515,00	775.435,93
Support from members of FEPS towards activities	615.515,00	775.435,93
D.6 Contributions in kind	150.000,00	72.777,94
Support from members of FEPS towards activities	150.000,00	72.777,94
D. REVENUE (to cover eligible expenditure)	5.336.765,00	5.102.348,19
E.1 Additional other own resources (to cover non-eligible expenditure) (to be listed)	0,00	34.539,95
Other revenue		34.539,95
Re-invoicing of costs		
E. REVENUE (TO COVER NON-ELIGIBLE EXPENDITURE)	0,00	34.539,95
F. TOTAL REVENUE	5.336.765,00	5.136.888,14
G. PROFIT/LOSS (F-C)	0,00	98.992,88

6. 미국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1) 개요

미국의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는 1983년에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4개 핵심 기관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또한 그 해에 NDI와 더불어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IRI), 미국국제노동연대센터(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국제민간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가 출범하였다.

NDI는 1983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 기관과 관행을 지원해오고 있는 비영리(nonprofit), 비정당(nonpartisan), 비정부(nongovernmental) 조직이다. NDI와 156개 국가 및 지역의 현지 파트너는 정치 및 시민 단체를 설립 및 강화하고 선거를 보호하며 정부의 시민 참여, 개방성 및 책임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민주당과의 관계

NDI는 민주당(Democratic Party)과 느슨하게 연계(loose affiliation)되어 있는 비영리, 비정당, 비정부 조직이다. NDI의 이사회, 직원 등 대다수가 민주당에서 온다. 하지만 NDI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미국 내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NDI는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지지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3) 목표와 비전

NDI는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열망에 화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NDI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개인과 그룹을 모아 아이디어, 지식,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거버넌스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NDI의 지역 파트너는 자국의 필요에 맞게 국제 민주주의 개발 모범 사례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NDI의 다국적 접근 방식은 단일 민주주의 모델이 없

지만 특정 핵심 원칙이 모든 민주주의에 의하여 공유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NDI의 작업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된 원칙을 지지한다. 또한 시민, 정치기관, 선출직 공무원 간의 제도화된 소통 채널 개발을 촉진하고,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4) 조직 구성

1983년에 설립된 이래 NDI는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NDI는 현재 전 세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0개 이상의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5) 주요 사업

NDI와 지역 파트너는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선거를 보호하며, 시민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정부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NDI는 개인과 그룹을 모아 개별 국가의 요구에 맞게 아이디어, 지식, 경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1) 시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

민주주의 활동을 하려면 자신의 이익을 표명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활동적인 시민도 필요하다. NDI는 수년 간 15,000개 이상의 시민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 시민·유권자 교육을 포함한 NDI의 시민 프로그램은 투표 노력, 조직 및 옹호 문제, 예산 감독과 정부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과 선출된 공무원 간의 연계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NDI는 동유럽의 로마,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과 같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룹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NDI는 전통적으로 정부 의사 결정에 접근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목소

리를 제공하고 있다.

2) 민주주의와 기술(Democracy and Technology)

인터넷, 휴대 전화, 소셜 미디어는 시민들이 점점 혁신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NDI는 민주적 개발의 핵심 요소로 기술을 사용하는 선구자이다. NDI는 시민들이 정부가 보다 책임감 있고 시민 주도적 사회 및 정치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동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민주적인 지배(Democratic Governance)

NDI는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공공 부문 기관의 개발이 미션의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공공 부문 기관이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민주적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민주주의 기관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시민의 기대를 진화시키는 데 있어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 사무소, 지방 정부, 훌륭한 거버넌스 지지자들과 협력하여 NDI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투명성, 표현, 다원주의, 책임의 민주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효과적인 21세기 공공 부문 기관 및 프로세스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선거(Elections)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NDI의 접근은 민주적 진보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선거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NDI 프로그램은 국제 표준과 시민 참여 동원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과 정치 과정의 완전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NDI의 선거 관련 활동은 각국의 광범위한 정치 과정에 맞춰 민주적 거버넌스를 달성하고 정치적 폭력의 가능성을 완화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인과 선거인 후보로서 시민 행동을 장려한다. NDI는 국제 선거 관찰에 2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며, 90개가 넘는 국가와 영

토에 다수의 여성과 청소년이 포함된 선거 모니터링 기관의 선거 청렴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5) 성(性), 여성, 민주주의(Gender, Women and Democracy)

여성은 여아 교육, 모계 보건, 노동력 참여, 그리고 정치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 수는 11%에서 22%로 두 배로 늘었다. 전 세계 목사 중 17%가 여성이며, 2015년에는 18명의 여성이 주(州) 또는 정부 수장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정치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은 정치적 참여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애와 마주하고 있다. NDI는 개인, 기관, 사회 문화 수준에서 성 평등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6) 정당(Political Parties)

정당은 민주주의의 필수 기관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경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배 구조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정당에 합류하고 돈을 기부하고 지도자에게 투표함으로써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또한 정당에의 시민 참여는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지도자 선발에 참여하는 등 독특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NDI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위한 의미 있는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활기차고 책임감 있고 포괄적인 다자간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 선거관리기관 등의 건설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6) 활동실적

지난 35년 동안 NDI는 156개 국가 및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16,000개 시민단체, 925개의 정당과 기관, 10,000명의 의원들, 1,300개의 여성 단체들의 활동을 후원해 왔다. 또한 지역 파트너들이 35개 국가에서 400명 이상의 정치 후보자 토론회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300개의 시민들로

구성된 선거 감시 단체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7) 재정 확보


NDI 프로그램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미국 국제개발처(US International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기타 국제 개발 기관 및 민간 기부를 포함하여 160개 이상의 조직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또한 NDI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하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NDI의 사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자선 기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8) 회계 및 감사 보고

[그림 36]은 NDI의 2016년 소득세(income tax) 신고 자료로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상기한 것처럼 NDI의 재정의 대부분은 기관 지원(grants)과 기부(contributions)에 의존하고 있다. NDI의 2016년 총 예산은 110,550,148달러였는데, 그 중 99.9%(110,498,457달러)가 정부 지원과 기부에 의한 것이었다. 정부 지원은 107,525,108달러로 NDI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부액은 2,973,349달러에 달하였다. 나머지 1% 미만의 재정은 투자 소득(investment income, 17,271달러)과 여타 소득(other revenue, 34,420달러)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예산 중 인건비나 사무실 경비 등 경상비 지출(56,097,087달러, 약 51%)이 예산 사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당해 연도 예산의 약 15%인 16,859,524달러가 해외 기관, 정부, 개인들의 지원(grants and other assistance to foreign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and foreign individuals)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예산은 기타 경비(other expenses, 41,575,689달러)로 처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행(travel) 경비로 14,142,819달러(13%), 컨퍼런스나 회의 등(conferences, conventions, and meetings)을 개최하는 데 예산의 약 3%(3,514,556달러)가 지출되었다.

[그림 39] NDI 세금 보고 자료: 2016년

Form 990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Under section 501(c), 527, or 4947(a)(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except private foundations) ▶ Do not enter Social Security numbers on this form as it may be made public. ▶ Information about Form 990 and its instructions is at www.irs.gov/form990 .		OMB No. 1545-0047 2016 Open to Public Inspection																																																							
A For the 2016 calendar year, or tax year beginning <u>10/01, 2016</u> , and ending <u>09/30, 2017</u>																																																											
B Check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Address change, <input type="checkbox"/> Name change, <input type="checkbox"/> Initial return, <input type="checkbox"/> Rerecorded, <input type="checkbox"/> Amended return, <input type="checkbox"/> Application pending	C Name of organization <u>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u>		D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u>52-1338892</u>																																																								
	Doing Business As		E Telephone number <u>(202) 728-5500</u>																																																								
	Number and street (or P.O. box if mail is not delivered to street address) Room/suite <u>455 MASSACHUSETTS AVE NW, 8TH FLOOR</u>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country, and ZIP or foreign postal code <u>WASHINGTON, DC 20001</u>		G Gross receipts \$ <u>110,895,259.</u>																																																								
	F Name and address of principal officer: <u>KENNETH D. WOLLACK</u> <u>SAME AS C ABOVE</u>		(M) Is this a group return for subordinate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N) Are all subordinates related?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f "No," attach a list. (see instructions)																																																								
I Tax-exempt status: <input checked="" type="checkbox"/> 501(c)(3), <input type="checkbox"/> 501(c) () (insert no.), <input type="checkbox"/> 4947(a)(1) or <input type="checkbox"/> 527		(M) Group exemption number ▶																																																									
J Website: ▶ <u>WWW.NDI.ORG</u>																																																											
K Form of organiz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rporation, <input type="checkbox"/> Trust, <input type="checkbox"/> Association, <input type="checkbox"/> Other ▶			L Year of formation: <u>1983</u>																																																								
M State of legal domicile: <u>DC</u>																																																											
Part I Summary																																																											
1 Briefly describe the organization's mission or most significant activities: <u>SUPPORT AND STRENGTHEN DEMOCRATIC INSTITUTIONS WORLDWIDE.</u>																																																											
2 Check this box <input type="checkbox"/> if the organization discontinued its operations or disposed of more than 25% of its net assets.																																																											
3 Number of voting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Part VI, line 1a) <u>3</u> <u>31.</u>																																																											
4 Number of independent voting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Part VI, line 1b) <u>4</u> <u>31.</u>																																																											
5 Total number of individuals employed in calendar year 2016 (Part V, line 2a) <u>5</u> <u>416.</u>																																																											
6 Total number of volunteers (estimate if necessary) <u>6</u> <u>221.</u>																																																											
7a Total unrelated business revenue from Part VIII, column (C), line 12 <u>7a</u> <u>0.</u>																																																											
7b Net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 from Form 990-T, line 34 <u>7b</u> <u>0.</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th> <th style="text-align: center;">Prior Year</th> <th style="text-align: center;">Current Year</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Revenue</td> <td>8 Contributions and grants (Part VIII, line 1h) <u>120,831,556.</u></td> <td style="text-align: right;"><u>120,831,556.</u></td> <td style="text-align: right;"><u>110,498,457.</u></td> </tr> <tr> <td>9 Program service revenue (Part VIII, line 2g) <u>0.</u></td> <td style="text-align: right;"><u>0.</u></td> <td style="text-align: right;"><u>0.</u></td> </tr> <tr> <td>10 Investment income (Part VIII, column (A), lines 3, 4, and 7d) <u>10,704.</u></td> <td style="text-align: right;"><u>10,704.</u></td> <td style="text-align: right;"><u>17,271.</u></td> </tr> <tr> <td>11 Other revenue (Part VIII, column (A), lines 5, 6d, 8c, 9c, 10c, and 11e) <u>-285,532.</u></td> <td style="text-align: right;"><u>-285,532.</u></td> <td style="text-align: right;"><u>34,420.</u></td> </tr> <tr> <td>12 Total revenue - add lines 8 through 11 (must equal Part VIII, column (A), line 12) <u>120,556,728.</u></td> <td style="text-align: right;"><u>120,556,728.</u></td> <td style="text-align: right;"><u>110,550,148.</u></td> </tr>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Expenses</td> <td>13 Grants and similar amounts paid (Part IX, column (A), lines 1-3) <u>22,260,250.</u></td> <td style="text-align: right;"><u>22,260,250.</u></td> <td style="text-align: right;"><u>16,859,524.</u></td> </tr> <tr> <td>14 Benefits paid to or for members (Part IX, column (A), line 4) <u>0.</u></td> <td style="text-align: right;"><u>0.</u></td> <td style="text-align: right;"><u>0.</u></td> </tr> <tr> <td>15 Salaries, other compensation, employee benefits (Part IX, column (A), lines 5-10) <u>56,097,087.</u></td> <td style="text-align: right;"><u>56,097,087.</u></td> <td style="text-align: right;"><u>53,966,069.</u></td> </tr> <tr> <td>16a Professional fundraising fees (Part IX, column (A), line 11e) <u>58,331.</u></td> <td style="text-align: right;"><u>58,331.</u></td> <td style="text-align: right;"><u>42,521.</u></td> </tr> <tr> <td>b Total fundraising expenses (Part IX, column (D), line 25) <u>529,587.</u></td> <td style="text-align: right;"><u>529,587.</u></td> <td style="text-align: right;"><u>529,587.</u></td> </tr> <tr> <td>17 Other expenses (Part IX, column (A), lines 11a-11d, 11f-24e) <u>41,575,689.</u></td> <td style="text-align: right;"><u>41,575,689.</u></td> <td style="text-align: right;"><u>39,235,025.</u></td> </tr> <tr> <td>18 Total expenses. Add lines 13-17 (must equal Part IX, column (A), line 25) <u>119,991,357.</u></td> <td style="text-align: right;"><u>119,991,357.</u></td> <td style="text-align: right;"><u>110,103,159.</u></td> </tr> <tr> <td>19 Revenue less expenses. Subtract line 18 from line 12 <u>565,371.</u></td> <td style="text-align: right;"><u>565,371.</u></td> <td style="text-align: right;"><u>446,989.</u></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Net Assets or Fund Balances</td> <td>20 Total assets (Part X, line 16) <u>27,607,666.</u></td> <td style="text-align: right;"><u>27,607,666.</u></td> <td style="text-align: right;"><u>23,452,571.</u></td> </tr> <tr> <td>21 Total liabilities (Part X, line 20) <u>24,447,666.</u></td> <td style="text-align: right;"><u>24,447,666.</u></td> <td style="text-align: right;"><u>19,716,922.</u></td> </tr> <tr> <td>22 Net assets or fund balances. Subtract line 21 from line 20 <u>3,160,000.</u></td> <td style="text-align: right;"><u>3,160,000.</u></td> <td style="text-align: right;"><u>3,735,649.</u></td> </tr> </tbody> </table>							Prior Year	Current Year	Revenue	8 Contributions and grants (Part VIII, line 1h) <u>120,831,556.</u>	<u>120,831,556.</u>	<u>110,498,457.</u>	9 Program service revenue (Part VIII, line 2g) <u>0.</u>	<u>0.</u>	<u>0.</u>	10 Investment income (Part VIII, column (A), lines 3, 4, and 7d) <u>10,704.</u>	<u>10,704.</u>	<u>17,271.</u>	11 Other revenue (Part VIII, column (A), lines 5, 6d, 8c, 9c, 10c, and 11e) <u>-285,532.</u>	<u>-285,532.</u>	<u>34,420.</u>	12 Total revenue - add lines 8 through 11 (must equal Part VIII, column (A), line 12) <u>120,556,728.</u>	<u>120,556,728.</u>	<u>110,550,148.</u>	Expenses	13 Grants and similar amounts paid (Part IX, column (A), lines 1-3) <u>22,260,250.</u>	<u>22,260,250.</u>	<u>16,859,524.</u>	14 Benefits paid to or for members (Part IX, column (A), line 4) <u>0.</u>	<u>0.</u>	<u>0.</u>	15 Salaries, other compensation, employee benefits (Part IX, column (A), lines 5-10) <u>56,097,087.</u>	<u>56,097,087.</u>	<u>53,966,069.</u>	16a Professional fundraising fees (Part IX, column (A), line 11e) <u>58,331.</u>	<u>58,331.</u>	<u>42,521.</u>	b Total fundraising expenses (Part IX, column (D), line 25) <u>529,587.</u>	<u>529,587.</u>	<u>529,587.</u>	17 Other expenses (Part IX, column (A), lines 11a-11d, 11f-24e) <u>41,575,689.</u>	<u>41,575,689.</u>	<u>39,235,025.</u>	18 Total expenses. Add lines 13-17 (must equal Part IX, column (A), line 25) <u>119,991,357.</u>	<u>119,991,357.</u>	<u>110,103,159.</u>	19 Revenue less expenses. Subtract line 18 from line 12 <u>565,371.</u>	<u>565,371.</u>	<u>446,989.</u>	Net Assets or Fund Balances	20 Total assets (Part X, line 16) <u>27,607,666.</u>	<u>27,607,666.</u>	<u>23,452,571.</u>	21 Total liabilities (Part X, line 20) <u>24,447,666.</u>	<u>24,447,666.</u>	<u>19,716,922.</u>	22 Net assets or fund balances. Subtract line 21 from line 20 <u>3,160,000.</u>	<u>3,160,000.</u>	<u>3,735,649.</u>
		Prior Year	Current Year																																																								
Revenue	8 Contributions and grants (Part VIII, line 1h) <u>120,831,556.</u>	<u>120,831,556.</u>	<u>110,498,457.</u>																																																								
	9 Program service revenue (Part VIII, line 2g) <u>0.</u>	<u>0.</u>	<u>0.</u>																																																								
	10 Investment income (Part VIII, column (A), lines 3, 4, and 7d) <u>10,704.</u>	<u>10,704.</u>	<u>17,271.</u>																																																								
	11 Other revenue (Part VIII, column (A), lines 5, 6d, 8c, 9c, 10c, and 11e) <u>-285,532.</u>	<u>-285,532.</u>	<u>34,420.</u>																																																								
	12 Total revenue - add lines 8 through 11 (must equal Part VIII, column (A), line 12) <u>120,556,728.</u>	<u>120,556,728.</u>	<u>110,550,148.</u>																																																								
Expenses	13 Grants and similar amounts paid (Part IX, column (A), lines 1-3) <u>22,260,250.</u>	<u>22,260,250.</u>	<u>16,859,524.</u>																																																								
	14 Benefits paid to or for members (Part IX, column (A), line 4) <u>0.</u>	<u>0.</u>	<u>0.</u>																																																								
	15 Salaries, other compensation, employee benefits (Part IX, column (A), lines 5-10) <u>56,097,087.</u>	<u>56,097,087.</u>	<u>53,966,069.</u>																																																								
	16a Professional fundraising fees (Part IX, column (A), line 11e) <u>58,331.</u>	<u>58,331.</u>	<u>42,521.</u>																																																								
	b Total fundraising expenses (Part IX, column (D), line 25) <u>529,587.</u>	<u>529,587.</u>	<u>529,587.</u>																																																								
	17 Other expenses (Part IX, column (A), lines 11a-11d, 11f-24e) <u>41,575,689.</u>	<u>41,575,689.</u>	<u>39,235,025.</u>																																																								
	18 Total expenses. Add lines 13-17 (must equal Part IX, column (A), line 25) <u>119,991,357.</u>	<u>119,991,357.</u>	<u>110,103,159.</u>																																																								
19 Revenue less expenses. Subtract line 18 from line 12 <u>565,371.</u>	<u>565,371.</u>	<u>446,989.</u>																																																									
Net Assets or Fund Balances	20 Total assets (Part X, line 16) <u>27,607,666.</u>	<u>27,607,666.</u>	<u>23,452,571.</u>																																																								
	21 Total liabilities (Part X, line 20) <u>24,447,666.</u>	<u>24,447,666.</u>	<u>19,716,922.</u>																																																								
	22 Net assets or fund balances. Subtract line 21 from line 20 <u>3,160,000.</u>	<u>3,160,000.</u>	<u>3,735,649.</u>																																																								
Part II Signature Block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is return, including accompanying schedules and state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Declaration of preparer (other than officer) is based on all information of which preparer has any knowledge.																																																											
Sign Here	Signature of officer <u>SHARI BRYAN</u>		Date <u>08/13/2018</u>																																																								
	Type or print name and title <u>VICE PRESIDENT</u>																																																										
Paid Preparer Use Only	Print/type preparer's name <u>MARC BERGER</u>	Preparer's signature 	Date <u>8/14/18</u>	Check <input type="checkbox"/> if self-employed PTIN <u>P01871563</u>																																																							
	Firm's name ▶ <u>EDO USA, LLP</u>		Firm's EIN ▶ <u>13-5381590</u>																																																								
	Firm's address ▶ <u>8401 GREENSBORO DRIVE, #800 MCLEAN, VA 22102</u>		Phone no. <u>703-893-0600</u>																																																								
May the IRS discuss this return with the preparer shown above? (see instructions)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For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see the separate instructions.				Form 990 (2016)																																																							

7. 미국 국제공화당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1) 개요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국제공화당연구소, IRI)는 1983년에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4개 핵심 기관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또한 그 해에 IRI와 더불어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NDI), 미국국제노동연대센터(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국제민간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가 출범하였다. IRI는 1983년에 설립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비정당·비정부 조직이다.

2) 공화당과의 관계

IRI의 이사회, 직원, 컨설턴트의 대다수가 공화당(Republican Party)에서 온다. 하지만 그 운영과 활동 등은 공화당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비당파 조직이라 할 수 있다. IRI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미국 내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3) 목표와 비전

IRI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1983년 4월에 설립되었다. IRI는 사람들을 그들의 정부와 연결시키고,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반응하도록 안내하며,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결여된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한 곳에서는 더 효과적이 되도록 돕고, 민주주의가 번창하는 모범 사례가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조직 구성

1983년에 설립된 이래 IRI는 100개국 이상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여

성민주주의네트워크(Women's Democracy Network), 아랍여성리더십연구소(Arab Women's Leadership Institute)와 함께 85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5) 주요 사업

IRI는 해외 정치 조직으로 운영되어 선호 정당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IRI는 30년 이상 다당제(multi-party political system), 민주적 거버넌스 관행(democratic governance practices), 여성의 권한 부여(women's empowerment), 시민 사회 개발(civil society development), 청소년 리더십(youth leadership), 선거과정 강화 및 여론조사(strengthening electoral processes and public opinion research) 등의 주제에 관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을 지원해 오고 있다.

설립 초기 IRI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제도와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초점을 확대하였다. IRI는 100여 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85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6) 활동실적

IRI는 국제 민주주의 개발 조직으로서 1983년 설립된 이래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당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활동(link political parties and people)과 관련하여, IRI는 동티모르의 독립이 2002년에 회복된 이후 국회의원과 정당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였다. 또한 튀니지에서 2011년 1월 혁명으로 수십 년 간의 일당 통치가 끝나게 되자 정당이 시민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민주적 전이(transition)를 도왔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활동(build citizen-centered governments)과 관련하여, IRI는 부패를 막기 위하여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의 지방 자치 단체가 원 스톱 상점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시민들에게 한 곳에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패 취약성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bring citizens together)과 관련하여, IRI는 2014년 이후 몽골의 정부와 시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 트랙 접근 방식을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노력을 지지해 오고 있다. IRI는 울란바토르 시장과 협력하여 공무원과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시민 중심의 정보 캠페인을 만드는 투명한 울란바토르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IRI의 기술 지원을 통하여 해당 그룹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남녀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활동(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과 관련하여, IRI는 여성민주주의네트워크(Women's Democracy Network)와 아랍여성리더십협회(Arab Women's Leadership Institute)를 통하여 여성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민주주의네트워크는 60개국 이상에서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다.

선거 관련 활동(ensure elections count)과 관련하여, IRI는 감비아에서 2016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이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였다. IRI는 감비아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폭력 유권자 교육 및 동원 프로그램도 설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 기술, 지식을 제공하였다.

7) 재정 확보

IRI 자금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미국 국제개발처(US International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여러 유럽의 재단, 원조 기관, 서방 국가들, 유엔(United Nations)으로부터도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IRI 자금의 1% 미만이 민간 기부에서 비롯되며, IRI는 공화당이나 다른 미국 정당 관련 단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8) 회계 및 감사 보고

IRI의 회계 및 감사 보고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다.

8. 벨기에 European Ideas Network(EIN)

1) 개요

벨기에의 European Ideas Network(EIN)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전체 10위에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트에 포함된 벨기에 정책연구소 중 두 번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EIN은 중도 우파 정책연구소로 유럽 의회에서 가장 큰 정치 집단 중 하나인 European People's Party group(EPP Group)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EIN은 EU 국가들이 직면한 중요 도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범 유럽 정책연구소로 활동하고 있다.

2) 유럽사회주의당과의 관계

EIN은 European People's Party(EPP)의 회원 정당 출신 유럽의회의원(the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MEP)으로 구성된 EPP group의 후원을 받는 정책연구소이다. EPP는 유럽의 보수 정당과 자유-보수(liberal-conservative) 정당을 회원으로 만들어진 범 유럽 정당이다. 보수 혹은 자유-보수 정책을 추구하는 EPP group의 지원을 받는 EIN은 기본적으로 중도 우파적 유럽 정책을 추구한다.

EIN은 조직, 운영, 재정적 측면에서 EPP group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EPP group의 대표가 EIN 대표와 직원을 임명하고 배정한다. 또한 현재 EPP group의 부대표인 Paulo Rangel이 EIN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EIN의 일상적 활동은 관장하는 Network Center 역시 Brussels에 위치한 EPP group 사무국에 위치하고 있다.

EIN의 6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EPP group 코디네이터와 지속적 연계하며, EIN의 일들이 EPP group MEP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즉 EIN은 EPP group MEP의 정책적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목표와 비전²³⁾

EIN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 유럽이 직면한 사회, 경제, 대외 정책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를 촉진하고 가장 좋은 정책을 교환
- 정책 결정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비전과 경험을 확대하여 보다 넓고 지구적 맥락에서 중요 이슈를 접근
- 유럽적 토대에서 활동하여 국가적 수준에 접근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사고를 만들고 교환
- 유럽 지역 내에서 중도 우파 정치의 집단지성 역량 강화, 정책 결정의 질 향상 추구
- 유럽 지역 내 중도 우파 정책연구소와 정책연구소들이 정책 개발에 보다 긴밀하게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 정당정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집단으로의 확장, 특히 젊은 세대를 정치적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도록 장려
- 유럽 지역을 포괄하는 회의와 세미나를 조직

4) 조직 구성

EIN은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범 유럽 정책연구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본부는 유럽의회가 있는 Brussels에 위치하고 있다. EIN은 약 3,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EU 지역 내의 정책결정자와 오피니언 리더로서 유럽의회 의원, 정치가, 경영인, 학자, 정책연구소, 기자, 시민운동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IN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6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있다. EIN의 6개 실무그룹은 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의 조직, 정책 브리핑의 생산, 그리고 EIN Summer University의 준비 등을 담당한다.

- 유럽의 미래

23) European Ideas Network. "What is the EIN?" <http://www.europeanideasnetwork.com/what-ein> (검색일: 2019/08/15).

- 이민
- 인구 변동
- 범 대서양 관계
- 인간 존엄성과 생명 윤리
-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SME)

5) 활동

EIN은 유럽 지역의 중도 우파 정책연구소와 정치재단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264개의 중도 우파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다. EIN은 또한 새로운 사고의 교환을 위하여 매년 9월 EIN Summer University를 개최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유럽 전역과 세계에서 MEPs, 장관, 기자, 학자, 전문가 등 약 450명 이상 참여한다.

정책연구소로서 FEPS는 연구 활동, 행사 기획, 출판, 교육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첫째,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 주제와 관련한 연구 활동을 담당한다.

둘째, 사회적 토론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다.

셋째, FEPS의 목적과 비전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출판물을 제작하고 배부한다.

넷째, 사회민주주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6) 재정 확보와 회계 감사

대부분의 정책연구소와 정치재단들이 내규를 통하여 회계 감사와 보고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고 있는 반면 EIN은 별도의 내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례보고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 회계 감사 등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EIN은 재정 내용과 회계 감사에 대하여 별도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9. 미국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1) 개요 및 민주당과의 관계

미국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는 비영리 공공 정책 연구소로 1989년 민주당 리더십 위원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DLC)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PPI는 ‘뉴 민주당원’(new Democrats)의 지적 기반으로 출발하여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아이디어 공장(idea mill)”으로 명성을 얻었다. 미국 언론은 해당 기관을 ‘중도 민주당 기관’(centrist Democratic institu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목표와 비전

PPI는 정책 혁신과 정치 개혁을 위한 촉매제로서 이념적·당파적 교착 상태를 넘어서기 위한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PI의 임무는 21세기 미국을 위한 새로운 진보 정치를 정의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PPI의 연구, 정책, 관점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지배 철학과 공공 혁신을 위한 의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PPI의 활동은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상호 책임(mutual responsibility), 시민과 공동체의 자치(self-governing citizens and communities)라는 세 가지 이상을 추구한다.

3) 조직 구성

PPI에는 전직 고위 정부 관료들이 선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와 정치적 행동을 연결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파트너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PPI는 미국 연방의회의 뉴 민주당원들, 도지사들, 시장들, 도시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부상하는 진보 정치 지도자들,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 분석가, 정책연구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4) 주요 사업

PPI는 정치, 세금, 교육, 외교 정책, 국방, 경제, 정부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5) 활동실적

PPI의 활동실적은 홈페이지상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다.

6) 재정 확보

민주당으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지 혹은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7) 회계 및 감사 보고

PPI의 회계 및 감사 보고와 관련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홈페이지상에서 찾을 수 없다.

10. 미국 뉴민주당네트워크(New Democrat Network, NDN)

1) 개요 및 민주당과의 관계

New Democrat Network(뉴 민주당 네트워크, NDN)는 선도적인 자유주의 정책연구소로서 중도 민주당 후보를 장려한다. NDN은 두 개의 하부 조직인 NDN 정치기금(Political Fund)과 NDN 정치행동위원회(NDN Political Action Committee)와 연계하여 기능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NDN은 마이클 듀카커스(Michael Dukakis)와 빌 클린턴(Bill Clinton) 후보 선거 운동 캠프와 민주당 국가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에서 일 하였던 사이먼 로젠버그(Simon Rosenberg)가 민주당 리더십 위원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와 결별한 후 1996년에 설립하였다.

2) 목표와 비전

NDN은 인구 구성, 미디어 및 기술, 경제 및 지정학의 막대한 변화에 의하여 야기된 “새로운 정치”가 미국과 전 세계에 등장하였다고 인식한다. NDN은 이러한 변화를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3) 조직 구성

NDN은 워싱턴 DC,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다.

4) 주요 사업

NDN의 주요 연구 분야에는 세계화 및 거시 경제 정책, 청정에너지, 이민 및 국경 문제, 라틴 아메리카, 미국 인구 변화 및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NDN은 2020년 선거를 앞두고 New Politics Institute(NPI)와 히스패닉 프로젝트(Hispanic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히스패닉 프로젝트는 스페인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에서 20개가 넘는 광고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NDN은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와 직접 대화하고, 히스패닉 유권자와 진보적 원인 사이의 유대 관계로 간주되는 가치와 이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거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에 히스패닉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5) 활동실적

NDN은 민주당 리더십 위원회(DLC)보다 활동에 있어 기술적으로 현대적이고 풀뿌리 참여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NDN은 현재 DLC에 도전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6) 재정 확보

기부금에 의한 운영은 확인되나 민주당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7) 회계 및 감사 보고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다.

11. 네덜란드 Foundation Max van der Stoel(FMS)²⁴⁾

1) 개요

네덜란드의 Foundation Max van der Stoel(FMS)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전체 18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네덜란드 정책연구소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FMS의 공식명칭은 STICHTING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OR DEMOCRACY, DEVELOPMENT AND DIALOGUE이다. 네덜란드의 외무장관, 유엔 대사, 유럽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Max van der Stoel(1924~2011)를 기리며 설립되었다. 2013년 6월 21일 국제사회의 민주화에 역점을 두었던 Alfred Mozer Stichting과 지속적 개발 협력 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Evert Vermeer Stichting의 합병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FMS는 네덜란드 노동당 (Partij van de Arbeid: PvdA)과 연계된 정치재단으로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2) 노동당과의 관계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FMS는 PvdA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재단의 목적 자체에서 PvdA의 원칙과 사회 민주주의의 국제적 활동의 지원이라는 것을 재단 내규에 명시하고 있다.²⁵⁾ 특히 FMS는 사회민주주의 운동, 정당, 인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정과 존중하는 사회, 민주주의 원칙 따라 설립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활동적 측면을 살펴보면, FMS는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24)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네덜란드 정당정책연구소는 FMS와 Wiardi Beckman Foundation(WBS, 23위)이다. 그러나 WBS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네덜란드어로 된 홈페이지에서도 연구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연례보고서와 연차결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FMS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WBS에 대한 사례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5)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MS statutes English." article 2.1. <<https://www.foundationmaxvanderstoel.nl/organisatie/beleidsdocumenten>> (검색일: 2019/06/30).

개발에 대한 자문을 PvdA에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개발이나 국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지원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PvdA 내에서 활성화한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FMS는 다음과 같이 PvdA와 연계 활동을 추구한다.²⁶⁾

첫째, PvdA 내에 자문기능을 조직한다.

둘째, PvdA 지부와 회원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단체와 운동 그룹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상호 교환을 촉진하며, 회의와 토론을 조직한다.

셋째, PvdA 행정조직이 다른 정당, 운동단체,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한편 FMS는 재단의 인사 및 행정과 관련해서도 PvdA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²⁷⁾ 우선 재단의 이사회 의장은 재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PvdA 지도부가 임명한다. 반대로 PvdA의 국제사무국은 이사회의 이사가 역임한다. FMS의 내규 조항 수정, 해체 이후 자산 관리 등에 대해서 반드시 PvdA 행정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목표와 비전

FMS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정치를 더 평등하게 만든다(Maak mensen sterker en de politiek eerlijker)” 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²⁸⁾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FMS는 사회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FMS는 Alfred Mozer Stichting와 Evert Vermeer Stichting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하였다. 따라서 FMS는 전신이었던 Alfred Mozer Stichting와 Evert Vermeer Stichting이 추구하였던 민주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계승하고 있다.

FMS는 EU 인접국의 민주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네덜란드와 EU의 공정한 정책, 네덜란드에서 이들 이슈에 대한 공공 토론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개발, 대화의 세 부분에서의 국제적 연대 실현을 목

26)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MS statutes English.” article 2.2.

27)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MS statutes English.” article 3.2.

28)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MS jaarrekening 2017.” p. 2. <https://www.foundationmaxvanderstoel.nl/uploads/tekstblok/6153_jaarrekening_definitief_2017_was_getekend.pdf> (검색일: 2019/06/30).

적으로 한다.

첫째,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민주적 권리가 보호되는 세상(a world in which the democratic rights of all people are safeguarded)을 추구한다.

둘째,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발전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진 세상(a world where everyone has equal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을 추구한다.

셋째, 대화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상호 의존의 토대 위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사회(an informed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form an opinion based on mutual reliance)를 추구한다.

4) 조직 구성

FMS의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다. FMS의 운영과 관리, 주요한 정책 결정은 이사회(Board)가 담당한다. 이사회는 최소 5명에서 11명 사이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2019년 현재는 대표 1명, 부대표 1명, 회계 책임 1명, 이상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부에는 FMS의 활동을 담당할 직원들이 상존한다. 현재에는 6명의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와 행정을 총괄하는 디렉터 1명 등 7명의 직원이 있다.

5) 주요 활동

FMS의 주요 활동은 재단의 목표인 민주주의, 개발, 대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직접 활동과 다자적 기구를 통한 활동으로 구분된다. 양자적 수준의 직접적인 활동은 훈련과 교육을 통한 국제적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첫째,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의 민주 인사에 대하여 지원한다.

둘째,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정당 발전의 지원한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① 발칸 지역의 청년 정치인 교육, ② 동유럽 민주인사 지원, ③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 신생 사회민주주

의 정당 교육 등이 있다.

한편 FMS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자적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정당과 재단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연대를 위한 유럽 포럼(the European Forum for Democracy and Solidarity)”의 사무국으로 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보면, FMS는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내에서 개발도상국과 네덜란드/유럽연합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촉구하기 위한 로비 활동에 주목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중운동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로 대화와 관련하여, FMS는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내에서 개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미팅과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 행사로 ‘Africaday’가 있다. 이 행사는 150명의 초청 강연, 60여개의 협력 기관, 1500명 등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다.

FMS는 이와 같은 활동 이외에도 광범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FMS는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FEPS)의 회원이며, 정치재단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Political Foundations)에도 가입하였다. 그리고 개발 협력을 위한 무역협회인 Partos의 회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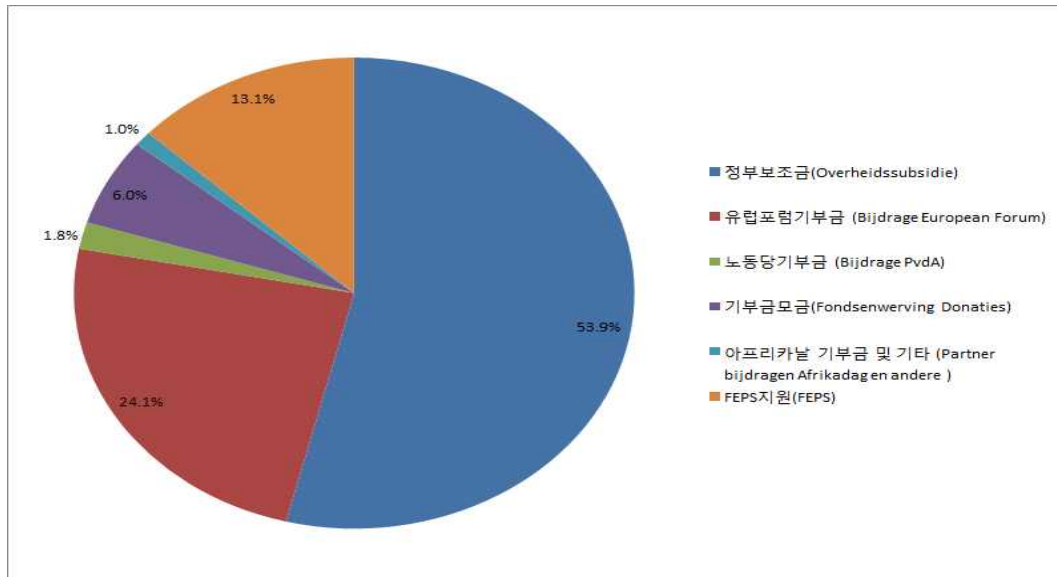
6) 재정 확보

FMS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MS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보조금(Overheidssubsidie)
- 유럽포럼 기부금(Bijdrage European Forum)
- 노동당 기부금(Bijdrage PvdA)
- 기부금 모금(Fondsenwerving Donaties)
- 아프리카날 파트너 기부금 및 기타(Partner bijdragen Afrikadag en andere)
- 정당 교육을 포함한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지원금 (FEPS inz. trainingen political parties)
- 기타 수입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재정 수입원에도 불구하고 [그림 40]에서 보는 것처럼 FMS의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53.9%), 유럽포럼 기부금(24.1%), FEPS와 같은 기타 재단 지원금(13.1%) 등에서 확보하고 있다.

[그림 40] FMS 수입 내역 및 구성비: 2017년



출처: FMS. *FMS jaarrekening 2017*, p. 11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7) 회계 및 감사 보고

FMS는 공익기관(Algemeen Nut Beogende Instelling: ANBI)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 보고는 the RJ Guideline 640 Non-profit organizations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끝나면 대차대조표와 자산 관련 회계 자료를 제출한다. 감사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 공인회계사는 이사회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연차결산 보고서를 감사한다. 감사의 승인에 있어 FMS는 다른 정책연구소나 재단과 달리 연차결산보고서를 이사회가 승인한다. 감사를 마친 연차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된다. 대차대조표([그림 41] 참조), 수입지출내역서([그림 42] 참조), 그리고 다른 정책연구소와 달리 각 세부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그림 43] 참조)을 포함한 연차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연차결산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림 41] FMS 연차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BALANS PER 31 DECEMBER 2017

(na resultaatbestemming)

ACTIVA

	<u>2017</u>		<u>2016</u>
	€		€
Viottende activa			
Overheidssubsidie (1)	-		130.547
Overige vorderingen en vooruitbetaald (2)	167.967		233.601
Partij van de Arbeid rekening-courant (3)	202.720		3.238
Liquide middelen (4)	<u>23.435</u>		<u>72.045</u>
		394.122	439.431
Totaal activa		<u>394.122</u>	<u>439.431</u>

PASSIVA

	<u>2017</u>		<u>2016</u>
	€		€
Eigen vermogen			
Continuïteitsreserve (5)	171.306		188.366
De Bom Vrouwenfonds	<u>163.170</u>		<u>220.000</u>
		334.476	408.366
Schulden			
Partij van de Arbeid rekening-courant (6)	-		
Nog te betalen en vooruitontvangen (7)	43.280		8.499
Reservering vakantiedagen en verlofuren	5.535		5.519
Reservering vakantiegeld	<u>10.831</u>		<u>17.047</u>
		59.646	31.065
Totaal passiva		<u>394.122</u>	<u>439.431</u>

[그림 42] FMS 연차결산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STAAT VAN BATEN EN LASTEN 2017

	Begroting 2017	Resultaat 2017	Resultaat 2016
	€	€	€
Baten			
Overheidssubsidie (8)	536.757	551.913	653.393
Bijdrage European Forum (9)	240.000	191.566	266.024
Bijdrage PvdA	18.300	18.300	18.300
Fondsenwerving Donaties	60.000	65.736	76.135
Stichting De Borm	-	-	270.000
Partner bijdragen Afrikadag en andere (10)	10.000	-	88.469
FEPS inz. trainingen political parties (11)	130.493	144.747	78.871
FEPS inz. conferentie Oekraïne (12)	-	20.041	-
Bijdrage VVD inz. training Armenie (13)	-	5.068	-
Subsidie EC met Partos en W&D	-	-	88.267
Rente opbrengsten	-	-	119
Overige baten	-	938	316
Referendum EU-Ukrain	-	-	26.230
	995.550	998.309	1.566.124
Lasten			
Organisatiekosten			
Salariissen, sociale- en pensioenlasten (14)	357.000	368.714	374.355
Overige organisatiekosten (15)	91.800	119.231	127.290
Fondsenwerving	10.000	9.915	9.140
	458.800	497.860	510.785
Projecten			
Projecten/conferenties FMS subsidiabel (16)	220.000	254.873	339.661
Internationale Projecten European Forum (17)	140.000	95.498	134.498
Projecten De Borm (18)	30.000	30.443	21.773
Denktank	10.000	-	1.430
Projecten in Nederland	30.000	11.459	21.125
Fair Politics activiteiten	4.000	8.734	17.342
Fair Politics project met Partos en W&D	-	-	46.626
Afrikadag	-	3.237	67.216
FEPS political parties (19)	176.830	144.747	78.871
FEPS inz. training Oekraïne (20)	-	25.347	18.340
	610.830	574.339	746.882
Totaal	1.069.630	1.072.199	1.257.667
Resultaat vóór bestemming	-74.080	-73.890	308.457
Onttrekking bestemmingsfonds	-50.000	-56.830	-
Toevoeging bestemmingsfonds	-	-	220.000
Onttrekking uit algemene reserve	-25.000	-17.060	-
Toevoeging aan algemene reserve	-	-	88.457
Totaal bestemd	920	-73.890	220.000

[그림 43] FMS 연차결산보고서 항목 상세 설명 양식



TOELICHTING JAARREKENING

Balans

	2017	2016
	€	€
Overheidssubsidie (1)		
WFPP	-	71.800
NRFP-MATRA	-	30.673
NRFP-MATRA SHIRAKA	-	28.074
	<u>-</u>	<u>130.547</u>

De FMS ontvangt krachtens de Wet Financiering Politieke Partijen (WFPP) en het Nederlands Fonds voor Regionale Partnerschappen (NRFP) van het ministerie van Binnenlandse Zaken jaarlijks subsidie.

Deze wordt middels een voorlopige beschikking en slechts voor 80%, gelijk met van de aan de partij verbonden wetenschappelijke bureau en jongerenorganisatie, overgemaakt aan de politieke vereniging die de ontvangen bedragen ter beschikking dient te stellen aan de genoemde organisaties. In het 4e kwartaal van het daaropvolgende jaar ontvangt de politieke vereniging de definitieve beschikking over het voorafgaande jaar en wordt het resterende deel van de subsidie (20%) die de politieke vereniging ontvangt, volledig ter beschikking gesteld aan de organisaties

Vanwege de neerwaartse bijstelling van de subsidie voor 2017, dit naar aanleiding van de verkiezingsuitslag, is er geen sprake meer van een vordering maar van een schuld. Zie (6). De subsidies tot en met 2016 zijn definitief vastgesteld.

	2017	2016
	€	€
Overige vorderingen en vooruitbetaald (2)		
<i>Projecten European Forum</i>		
Labour	48.299	73.938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112.288	78.871
	<u>160.587</u>	<u>152.809</u>
<i>Partner bijdragen publieksactiviteiten</i>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FEPS)	-	46.534
Corlido Procurement Services (Shell)	-	5.000
SPOE	-	6.000
	<u>-</u>	<u>57.534</u>
<i>Projecten met zusterpartijen in Europa</i>		
Macedonië	305	-
Bosnië-Herzegovina	65	-
Oekraïne	-	241
Servie	2.626	611
Moldavië	-	4.205
Totaal Projecten	<u>2.996</u>	<u>5.057</u>

12. 스페인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FAES)

1) 개요

스페인의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FAES: 분석과 사회연구를 위한 재단)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전체 19위에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트에 포함된 유일한 스페인 정책연구소이다.

FAES는 스페인의 Partido Popular(PP: 인민의 당)과 연계당 정책연구소이다. 따라서 FAES는 보수주의 정책과 자유주의 정책을 연계한 자유-보수주의 계열의 정책연구소이다.

1989년에 설립되어 2019년 현재 30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 PP와 연계된 5개의 별도 재단들인 Fundación Cánovas del Castillo, Popular Iberoamericana, Popular Iberoamericana de Análisis y Estudios Sociales, Popular Iberoamericana de Estudios Europeos y el Instituto de Formación Política가 합쳐져 현재의 FAES가 되었다.

2) 목표와 비전

FAES는 정책 결정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제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주의 개혁 센터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FAES는 정치, 지식, 경제적 자유에 기반한 사고를 형성, 촉진, 확산시키고자 한다. 특히 FAES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자유시장, 그리고 서구적 인본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3) 조직 구성

FAES는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FAES의 조직 관리는 이사회에서 담당한다. 이사회는 재단의 활동 계획, 예산 등을 총괄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는 7개의 행정부서가 있다.

한편 FAES는 4개의 특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스페인의 자유-보수주의 전통을 연구 확산: Instituto Cánovas del Castillo
- 민주주의 전환 이후 스페인 정치사를 연구: Instituto Manuel Fraga
- 스페인-중남미 관계 개발과 강화: Instituto Popular Iberoamericano
- 카탈로나(Catalunya)의 이익을 위한 세미나 조직: Institut Catalunya Futur

4) 활동

FAES는 자신들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사 조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판,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한다. FAES는 유럽의 다른 정치재단처럼 세미나, 컨퍼런스의 행사를 조직하여 지식의 교류와 확산에 기여한다. 또한 여름 학교,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인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17개국에서 온 8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FAES의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이 외에도 FAES는 분석보고서, Cuadernos de Pensamiento Política 잡지, 전략보고서, FAES paper와 책 등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FAES는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재단, 정책연구소 등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²⁹⁾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등 8개국과 EU 등에서 16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으며, 7개 미국 기관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기관과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

5) 재정 확보

FAES는 사적 비영리 재단을 추구한다. FAES는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① 개인이나 기업 등의 사적 기부, ② 영업과 서비스 공급, ③ 공적 자금 지원 등에 의존한다.

<표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FAES의 2017년 총 재정 수입은 €1,338,648으로 독일 등의 정치재단과 비교해서 매우 작다. 2017년 FAES의 총 수입 중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사적 기부(Aportaciones privadas)는 전체 예산의 88.4%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일의 정치재단이나 유럽의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벨기에의 정치재단 등 공적 자

29) FAES. "Redes FAES." 참조. <https://fundacionfaes.org/es/presentacion> (검색일: 2019/08/13).

금으로 운영되는 재단과는 차이를 보인다.

<표 34> FAES 수입 내역: 2017년

항목	금액	비율
영업과 서비스 공급(Ventas y prestaciones de servicios de las actividades propias)	135,202.48	10.1%
공적자금 지원(Subvenciones del sector público)	20,000.00	1.5%
사적 기부(Aportaciones privadas)	1,183,445.72	88.4%
합계	1,338,648.20	100.0%

출처: FAES. “Los presupuestos de nuestra entidad.”에서 발췌. <https://fundacionfaes.org/uploaded/Ppto%202017%20Ley%20Transparencia%20-%20web.pdf> (검색일: 2019/08/13)

FAES는 사적 통로를 통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Fabian Society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Fabian Society가 연구용역(35.3%)와 회비(34.6%) 등을 재단의 자체적 활동이나 회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FAES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사적 기부를 통하여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6) 회계 및 감사 보고

사무국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끝나면 연차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연차결산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수입지출 내역서, 연간활동 계획 달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재단 이사회는 사무국에서 작성한 연차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재단이 승인한 연차결산보고서는 승인 이후 10일 이내에 Protectorado de Fundaciones라 감독기관에 검사와 자금의 후속 예치를 위하여 Protectorado de Fundaciones 부르는 기관에 제출한다. FAES의 회계는 법에 따라 독립적인 회사에 의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FAES는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DE GESTIÓN*[부록 4] 참조) 명명된 일종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규정을 작성하여 재단의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좋은 거버넌스 규정에 따르면 재단은 자신들의 회계보고서를 외부 기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수입지출명세서와 기타 정보를

투명하게 작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³⁰⁾ 실제로 FAES의 연차결산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수입지출명세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세 내용을 약 32페이지(2016년 연차결산보고서 기준)에 걸쳐서 매우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³¹⁾

30) FAES.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DE GESTIÓN.” p. 3.
<https://fundacionfaes.org/uploaded/BUEN%20GOBIERNO%20FINAL.pdf> (검색일: 2019/08/13).

31) FAES. “CUENTAS ANUALES 2016 MEMORIA ABREVIADA.”
https://fundacionfaes.org/uploaded/MEMORIA%202016-%20LEY%20TRANSPARENCIA_1.pdf (검색일: 2019/8/13).

13. 프랑스 폰다폴(Fondapol: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1) 개요

프랑스의 폰다폴(Fondapol: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에서 20위에 랭크되어 있다. 폰다폴(Fondapol)은 2004년에 설립되었고, 유럽 통합과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책연구소이다. 폰다폴은 인구 노령화, 세계화,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2) 정당과의 관계

폰다폴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정당정책연구소 평가보고서에 정당과 연계된 정책연구소로 분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폰다폴은 홈페이지상에서 정당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폰다폴의 목표와 비전, 조직 구성, 주요 사업, 활동실적 등을 살펴봤을 때도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폰다폴은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로 볼 수 있다.

3) 목표와 비전

폰다폴의 목표는 다원주의 사상, 자유시장 경제, 유럽적 시각에서 전문지식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단은 경제 성장, 환경, 가치, 디지털 기술을 우선 순위에 두고 연구를 한다.

먼저 경제성장 분야는 경제 세계화로 인하여 프랑스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환경 보호 분야는 프랑스와 유럽 정치에서 부각되는 주요 이슈라고 보고, 녹색 성장과 함께 탈탄소 경제(post-carbon economy)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진다. 가치 분야는 세계화와 인구 노령화에 대응해서 프랑스식 사회 모델(French social model)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분야는 디지털 기술이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기면서 디지털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4) 조직 구성

폰다폴의 조직은 관리위원회, 과학평가위원회,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위원회는 재단의 행정과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과학평가위원회는 재단의 연구 활동을 조율하고 연구 분야를 정하며 연구 활동을 평가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단 활동의 법률적 근거와 회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관리위원회를 보조한다. 윤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윤리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용하면서 관리위원회를 보조한다.

각각의 위원회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관리위원회 위원과 과학평가위원회 위원은 각각 14명, 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각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총 7명으로, 이사 1명, 행정과 재정 관리자 1명, 선임연구원 1명, 프로젝트 관리자 4명이다.

5) 주요 사업

폰다폴은 홈페이지에서 ‘Data.fondapol’ 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국내외의 여러 설문조사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설문조사 자료들은 23개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26개국 약 2만 2천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것이다.³²⁾

설문 내용은 제도에 대한 신뢰, 권위주의의 출현, 정부와 미디어에 대한 신뢰, 경찰과 군에 대한 인식, 이민·낙태·난민·이슬람에 대한 여론 등에 관한 이슈들이다. 폰다폴은 민주주의 체제의 미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자료들을 분석해서 연구 결과들을 단행본(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폰다폴은 ‘Trop Libre’ 라는 블로그를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뉴스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정치·경제·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폰다폴은 ‘Anthropotechnie’ 라는 블로그를 통하여 인권 신장, 세포 복제, 유전자 기술 및 조작에 의하여 제기된 이슈들을 다룬다. 이 블로그는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특징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문화적 운동(transhumanism)에 대한 논의 활

32) 2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6) 활동실적

폰다폴은 홈페이지상에 2010년~2017년까지의 연례 활동보고서를 게시해 놓았다. 연례 활동보고서는 재단이 발행하거나 경제 성장, 환경, 가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출판물, 회의나 세미나 개최, 블로그 활동, 제휴 기관들과의 활동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재정 확보

폰다폴은 독립적이고 정당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 폰다폴의 재정은 개인과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폰다폴은 개인과 기업 후원자들을 연례총회에 초청하고 위원회 위원들과도 만나게 해서 연구 결과물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하지만 폰다폴의 재정에 관한 세부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8) 회계 및 감사 보고

폰다폴의 회계와 감사보고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14. 이탈리아 Fondazione Italianieuropei

1) 개요

이탈리아의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 정책연구소 평가(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에서 25위에 랭크되어 있다.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1998년 2월 6일 이탈리아 문화 개혁주의자들이 로마에 있는 산 미켈레 연구소(San Michele institute)에서 세미나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이 세미나의 취지는 이탈리아를 위하여 유럽 공통의 의식 형성을 목표로 새로운 문화 재단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었다.

당시 현직에 있었던 조르시오 나폴리타노(Jiorgio Napolitano) 대통령과 카를로 아제리오 치암피(Carlo Azeglio Ciampi) 전 대통령이 참여하여 연구소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한 것이 Fondazione Italianieuropei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공공 활동, 세미나, 훈련, 연구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설계된 자율성을 가진 정책연구소이다.

2) 이탈리아연합(L'Unione)과의 관계

이탈리아연합(L'Unione)은 진보-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중도 좌파정당으로 제11대 조르시오 나폴리타노(Jiorgio Napolitano)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프랑스의 폰다폴(Fondapol)과 마찬가지로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목표와 비전, 조직 구성, 주요 사업, 활동실적 측면에서 정당과 연계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조르시오 나폴리타노(Jiorgio Napolitano) 대통령이 연구소의 설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운영적 측면에서는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이탈리아연합(L'Unione)과 이념적 측면에서는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목표와 비전

Fondazione Italianieuropei의 목표는 유럽의 정치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

하고 정치, 경영, 행정, 문화와 같은 다양한 공공 영역들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21세기에 출현하는 난관들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기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이탈리아 개혁주의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이 공존하고, 이 전통들의 융합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협치 솔루션을 제시하는 공론장이다.

4) 조직 구성

Fondazione Italianieuropei은 회장,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자문단, 사무국장, 직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인적 구성을 보면, 회장 1명, 과학위원회 위원 20명, 자문단 34명, 사무국장 1명, 직원 5명이다.

5) 주요 사업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토론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 담론을 조성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국내외의 특정한 이슈들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한다. 그리고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국가들의 정책연구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럽과 국제정치 의제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들은 Centre for American Progress, the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the Century Foundation, the German Marshall Fund, the Policy Network, the Centre for European Reform, A Gauche en Europe, the Friedrich Ebert Stiftung, the Fundacion Chile 21, the Fondation Jean-Jaurès, Alternativas 등이 있다.

6) 활동실적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잡지를 발행하고 단행본(책)을 출판한다. Fondazione Italianieuropei이 출판하는 잡지명은 'Italianieuropei' 이고, 2001년에는 연 1회, 2002년~현재까지는 연 5회 발행되고 있다. 이 잡지의 경우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두고 있다.

단행본(책)은 총 37권이 출간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세미나를 총 136회 개최하였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25회의 워크숍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Fondazione Italianieuropei는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온라인 코너를 만들어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7) 재정 확보

Fondazione Italianieuropei의 재정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8) 회계 및 감사 보고

Fondazione Italianieuropei의 회계와 감사 보고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15. 스웨덴 베르틸 올린 연구소(Bertil Ohlin Institute)

1) 개요

스웨덴의 베르틸 올린 연구소(Bertil Ohlin Institute)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에서 31위에 랭크되어 있다. 베르틸 올린 연구소는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자유주의 사상의 전통에 입각하여 공공정책의 주요 영역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소의 명칭은 1944년부터 1967년까지 스웨덴의 자유당(Folkpartiet) 전(前) 대표이자 197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베르틸 올린(Bertil Ohlin)에서 따온 것이다.

베르틸 올린 연구소의 설립은 앤 위블(Anne Wibble)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앤 위블(Anne Wibble)은 베르틸 올린(Bertil Ohlin)의 딸이자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스웨덴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을 역임하였다. 1993년 앤 위블은 아버지인 베르틸 올린을 기리기 위하여 ‘베르틸 올린 기금(Bertil Ohlin Memorial Fund)’을 만들었다. 3만 스웨덴 크로나화(SEK)의 연구소 기금이 모금되었고, 연구소는 스톡홀름 경제대학교(Stockholm School of Economics)의 베르틸 올린 연구실(Bertil Ohlin Room)에서 시작되었다.

2) 자유당(Folkpartiet)과의 관계

폰다폴(Fondapol)과 마찬가지로 베르틸 올린 연구소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정당정책연구소 평가보고서에 정당과 연계된 정책연구소로 분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베르틸 올린 연구소는 홈페이지상에서 재정과 조직에 있어 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소의 목표와 비전, 조직 구성, 주요 사업, 활동실적 측면에서 정당과 연계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연구소의 명칭을 스웨덴의 자유당(Folkpartiet) 전 대표인 베르틸 올린(Bertil Ohlin)에서 가져 왔고 자유당과 이념성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보고서가 정당과 연계된 정책연구소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3) 목표와 비전

베르틸 올린 연구소의 목표는 자유주의 정책연구소로서 자유주의적 여론 형성과 자유주의 사상의 부활에 기여하는 것이다.

4) 조직 구성

베르틸 올린 연구소는 재정적·조직적 측면에서 정당과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사회는 언론인과 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사는 회장을 포함해서 총 8명이다.

5) 주요 사업

베르틸 올린 연구소는 유럽 자유주의 포럼(European Liberal Forum)의 회원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책연구소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베르틸 올린 연구소는 해외 명문 대학들과 제휴하여 과학적 접근법들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들을 수행한다.

베르틸 올린 연구소는 세미나, 올린(Ohlin) 강연, 논문 경시대회 개최를 한다. 첫째, 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봄에 열리는 ‘앤 위블(Anne Wibble) 세미나’가 대표적이다.

둘째, 올린(Ohlin) 강연은 스웨덴의 주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치 이슈들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스벤-에릭 라르손(Sven-Erik Larsson)이 처음으로 ‘정치가로서의 베르틸 올린(Bertil Ohli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가을마다 강연이 열린다. 그리고 앤 위블이 2000년에 사망한 이후에는 앤 위블 기금(Anne Wibbles Memorial Fund)이 조성되었고, 이 기금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선정해서 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위블(Wibble) 강연도 개최되었는데, 애니카 안부르그(Annika Åhnberg)가 처음으로 ‘Likar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봄에 강연이 열린다.

셋째, 논문 경시대회는 학부와 대학원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주제는 국제화, 민주주의, 국제정치경제 등 사회과

학 분야이다. 수상작을 선정해서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6) 활동실적

베르틸 올린 연구소는 총 4권의 단행본(책)을 출판하였고 9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7) 재정 확보

베르틸 올린 연구소의 재정은 여러 재단들의 프로젝트 지원금, 개인과 기업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연구소의 재정은 주로 자유주의 언론사들의 재단 기부금으로 충당되는데, ‘Press Organization’ 과 미디어 그룹인 ‘New Gefle Dagblad Foundation’ 이 고액 후원자들이다. 그리고 지역 일간지인 ‘Uppsala Nya Tidnings’ 재단이 가장 오랫동안 기부금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세부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8) 회계 및 감사 보고

베르틸 올린 연구소의 회계와 감사보고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16. 인도 샤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연구재단

(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 SPMRF)

1) 개요

인도의 샤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연구재단(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 SPMRF)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에서 32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 순위에 포함된 3곳의 인도 정당정책연구소들 중에서는 1위이다.

SPMRF은 인도의 발전과 내부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논의하는 포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SPMRF은 샤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박사(Dr. Syama Prasad Mookerjee)와 판딧 딘다얄 우파다야이(Pandit Deendayal Upadhyay)의 민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인도의 국익 추구를 강조한다.

샤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박사(Dr. Syama Prasad Mookerjee)는 힌두 민족주의자(Hindu nationalist)로 할랄 네루 (Jawaharlal Nehru) 총리 내각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인도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다. 그리고 판딧 딘다얄 우파다야이(Pandit Deendayal Upadhyay)은 인도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의 모태인 인도인민연합(Bharatiya Jana Sang) 회장이다.

2)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과의 관계

SPMRF은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민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정당정책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SPMRF 단장 비서, 회계부장, 이사가 모두 인민당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다. 그리고 SPMRF은 ‘모디의 비전(PM MODI’ S VISION)’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모디 총리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 목표와 비전

SPMRF의 설립 취지는 인도를 결속력이 강한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SPMRF의 목표는 인도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난

제들이 발생하게 된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분석 및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 그리고 SPMRF은 민족주의 사상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출판, 토론,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인도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SPMRF은 전문가, 실무자, 학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인도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4) 조직 구성

SPMRF은 단장 1명, 비서 1명, 회계부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과 연구팀 14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SPMRF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인도 인민당과 연계된 정책연구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PMRF의 비서인 아룬 싱(Arun Singh)은 인도 인민당의 사무총장(National General Secretary)이고, 회계부장인 시암 자주(Sh. Shyam Jaju), 이사인 프라하트 자(Sh. Prabhat Jha)와 비나이 사하스라부드데(Dr. Vinay Sahasrabuddhe)는 인도 인민당의 부대표(National Vice President)이다. 회장과 감사는 홈페이지 상에 인도 인민당과 관련된 별도의 직위(또는 직책)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SPMRF의 연구팀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팀장 1명, 특별연구원 2명, 선임연구원 4명, 부연구원 2명, 연구원 4명, 행정보조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SPMRF은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하원 의원이 2명이고, 언론인 1명, 인도 인민당 당직자 1명, 교수 3명, 전 유엔 주재 인도 대사 1명, 전 인도 외무부장관 1명, 전 인도 내각 비서실장 1명, 뉴델리 정책연구센터 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주요 사업

SPMRF은 인도 인민당의 모태인 인도인민연합(Bharatiya Jana Sang)의 설립자이자 정치가인 샨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박사(Dr. Syama Prasad Mookerjee)의 유산과 업적에 대해 연구하고 대중들에게 홍보한다. 특히, SPMRF은 샨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여 ‘하나의 인도(One India)’와 ‘위대한 인도(Great India)’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인도의 젊은 세대들을 독려하려고 한다.

6) 활동실적

SPMRF은 홈페이지에 ‘모디의 비전(PM MODI’ S VISION)’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인도 모디(Narendra Damodardas Modi) 총리의 비전을 설명하는 글을 비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SPMRF가 발간하는 여러 출판물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주로 모디 총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출판물들은 다섯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할 수 있다. 단행본(책)은 주로 ‘새로운 인도(New India)’ 비전에 관한 모디 총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정책을 설명하거나 모디 총리의 어록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논설, 기사, 보고서, ‘The Nationalist’ 라는 월간 전자저널(e-journal)을 발행하고 있다.

7) 재정 확보

SPMRF의 재정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8) 회계 및 감사 보고

SPMRF의 회계와 감사보고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17. 인도재단(India Foundation)

1) 개요

인도재단(India Foundation)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에서 37위에 랭크되어 있다. 평가 순위에 포함된 3곳의 인도 정당정책연구소들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정책연구소이다.

인도재단은 인도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인도 인민당과 모디 총리 내각 출신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독립적’ 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인도 인민당과의 관계

SPMRF과 마찬가지로 인도재단도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 인민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정당정책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SPMRF는 재단의 주요 운영진들인 단장 비서, 회계부장, 이사가 인민당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다. 반면 인도재단은 상원의원 이외에 내각의 재정부 장관과 국가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운영진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재단은 인도 인민당뿐만 아니라 모디 총리 내각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목표와 비전

인도재단의 목표는 독립성, 객관성, 학문적 엄격성을 원칙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내외의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인도재단의 비전은 총리의 싱크탱크가 되는 것이다.

4) 조직 구성

인도재단은 신탁이사회(Board of Trustees), 운영위원회, 자문단, 이사회, 4개의 센터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인도재단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사회는 5명, 운영위원회는 8명, 자문단은 4명, 이사회는 4명이다. 여기서 운영위

원회의 특징을 보면, SPMRF의 이사를 맡고 있는 비나이 사하스라부드데(Dr. Vinay Sahasrabuddhe)가 인도재단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겸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SPMRF과 유사한 점은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에 정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현직 재정부장관인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Himanta Biswa Sarma), 인도 인민당의 전 사무총장(National General Secretary)인 람 마다브(Ram Madhav), 잠무카슈미르 주 상원의원인 하셉 드리브(Haseeb Drabu)가 인도의 정치권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명의 이사 중에는 여성 정치인이자 국가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랄리타 쿠말 망갈람(Lalitha Kumaramangalam)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도재단 내부의 연구센터들은 총 4개로 안보전략센터(CENTRE FOR SECURITY AND STRATEGY), 종교와 사회연구 센터(CENTRE FOR STUDY OF RELIGION AND SOCIETY), 헌법과 법률연구 센터(CENTRE FOR CONSTITUTIONAL AND LEGAL STUDIES), 연성권력센터(CENTER FOR SOFT POWER)이다.

첫째, 안보전략센터는 국가 안보, 국제관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다. 전직 안보 전문가들과 외교관들,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안보전략센터에 참여한다.

둘째, 종교와 사회연구 센터는 사회적·종교적 이슈들을 연구하고, 명망 있는 학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종교와 사회연구 센터는 정부와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셋째, 헌법과 법률연구 센터는 인도의 정책과 관련된 헌법적·법률적 이슈들을 다룬다. 헌법과 법률연구 센터의 목적은 인도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헌법과 법률적 틀을 연구하고, 인도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도 고유의 제도들을 분석하다. 헌법과 법률연구 센터는 저명한 법률가들로 구성된다.

넷째, 연성권력센터는 인도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여성권을 연구한다. 연성권력센터는 민족주의적인 문화적 흐름을 강조하면서 실무자, 학자, 정책 입안자들이 참여하고 영화, 요리, 음악, 음식과 같은 다양한 인도 문화의 요소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고용 촉진을 추구한다. 연성권력센터는 인도에서 연성권력을 연구하는 첫 번째 센터이자 문화산업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종교 관광의 활성화도 추구한다.

인도재단의 연구원은 총 8명이다. 이 중에서 선임연구원이 5명이고, 연구원이 3명이다.

5) 주요 사업

인도재단의 사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도의 대외 정책(India’s Foreign Policy)’이라는 명칭으로 워크숍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인도재단은 외교부와 제휴하여 인도의 대외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2018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 동안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인도의 대외정책에 관심이 있는 60명의 연구자, 실무자 등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의 목적은 인도의 대외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다.

워크숍은 다섯 가지의 주제들을 다룬다. 인도 대외정책의 소개와 핵심 원칙(Introduction and Key Principles), 인도와 주변국가들(India and Neighbourhood), 인도와 다자주의(India and Multilateralism),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관계(India’s Relation with Strategic Partners), 인도 대외 정책의 핵심 의제(Key Agendas in India’s Foreign Policy)로 구성된다.³³⁾ 워크숍의 효과는 수강생들에게 인도 외교의 의제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재단은 2019년에도 외교부와 제휴하여 ‘Kautilya fellows programme’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 동안 인도 대외정책의 전략적 양자 관계와 이슈, 인도의 공공 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인도의 대외정책,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인도의 공공정책을 다루었다.

6) 활동실적

인도재단은 활동실적을 기사와 논평, 인도재단 저널(India Foundation Journal), ‘Aakrosh’ 저널, 이슈 브리프, 단행본(책)으로 구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들 중에서 인도재단 저널(India Foundation Journal)은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길 전쟁(Kargil War) 이후부터 20년 동안 인도의 안보 준비태세를 주제로 삼고 있고, 2013년 7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Aakrosh’ 저널은 아시아 지역의 테러리즘과 국내 갈등(Asian Journal on Terrorism and Internal Conflicts)을 주로 다루고 있고, 4개월 간격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단행본(책)은 총 3권이 있는데, 모두 테러

33) 인도의 대외정책(India’s Foreign Policy) 워크숍의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부록 5]를 참조.

리즘에 대한 내용들이다. 한편 보고서는 인도재단이 주최하거나 다른 기관들과 함께 개최한 회의나 세미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7) 재정 확보

인도재단의 재정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8) 회계 및 감사 보고

인도재단의 회계와 감사보고에 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제5장.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I. 자원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당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자원적 차원의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정당정책연구소의 자원적 차원의 제도는 정당정책연구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자원적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과의 연계 속에서 정당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정당의 조직도상에서 정당정책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위치하지 못하고,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산하에 모호하게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정당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위원회의 부속기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현재 정당이 정부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정당정책연구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조직도상에서 정당정책연구소의 위상은 모호하고 취약한 측면이 존재한다.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의 사례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고민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정당정책연구소를 정당과 연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경우 정당의 관여와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같이 정치재단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 오히려 특정 정당과의 연계보다는 독립적인 차원에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적 가치를 고민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정치재단들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여타 민주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들 중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당정책

연구소도 해외 사례들을 고려하여 정당과의 직접적 연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과 연계된 소속 현역의원이 정당정책연구소의 원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당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권한 보장도 필요하다. 이 경우 정당 소속 현역의원들이 정당정책연구소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조진만 2014).

둘째, 정당정책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의 충원을 확대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당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의 충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당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의 충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당정책연구소의 현황을 분석한 부분에서 나타났듯이 정당정책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의 수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 연구인력의 상당수가 단기 계약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점과 연봉 및 처우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 제고도 필요하다. 미국의 정당정책연구소와 독일의 정당재단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잘 기능하는 실질적인 요인은 재정적 독립의 문제에 있다(임재주 2012).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은 정당이 정부로부터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로 충당되고, 이 외의 별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정당정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100분의 30의 금액을 정당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미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향후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정책연구소가 정당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경상보조금을 지원받게 한다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은 상당 수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정책연구소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방

안은 여당의 정당정책연구소에 후원금이 집중됨에 따라 정치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다만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매칭펀드로 제공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후원회가 설립될 수 있다면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을 참고하여 법인과 단체의 기부는 금지하고,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하는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당정책연구소의 자원을 효율적·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계 및 감사 보고 관련 제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독일의 정치재단의 경우 ‘정치재단의 국가자금에 대한 공동 선언’ (Gemeinsame Erklärung zur staatlichen Finanzie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활동 내역과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중에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FAES도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DE GESTIÓN*으로 명명된 일종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의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감사의 경우에도 독일의 정치재단은 내규를 통하여 자체 감사 이외에도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엄격한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페이지언 협회의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이외에도 외부기관인 ‘Who Funds You’와 ‘Transparify’로부터 별도의 재정 투명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에서도 감사를 마친 결산재무제표나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경우 회계 및 감사 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정책연구소 정기 회계보고 안내’ 문건을 보면 정당정책연구소는 재산명세서, 수입/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부/지출부,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과 같은 서류들도 구비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계 및 감사 보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정당정책연구소는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³⁴⁾ 이러한 점들은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의 사례를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II. 성과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상당한 국고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떠한 성격의 성과물들을 내는가는 자원적 차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실태와 해외 정당정책연구소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은 필요하다.

먼저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에 대한 활동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연구 개발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모두 중장기 연구 개발 활동보다 단기 연구 개발 활동에 치우쳐 있는 특징을 보였다. 실제로 정당정책연구소들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 개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기 연구 개발이 중장기 연구 개발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실적을 쌓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정책적 기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당의 비전과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과제들 중 중장기 과제의 수행 비율을 최소한 어느 정도 지정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정당정책연구소가 정당의 매니페스토

34) 정당정책연구소들 중 민주정책연구원만 유일하게 홈페이지 '연구원 활동' 게시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의 정기이사회 개최 소식을 공지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개최 사진과 함께 “정관 제15조(결산) 및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 보고)에 의거하여 작성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3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와 같은 간략한 내용만 적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하고 있지 않다.

와 정책공약집 작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조진만 2014). 정당정책연구소 내에 가치 매니페스토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당의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기본임무를 부여한다면 정책선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외부 또는 여타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보면 전체 연구 개발 활동 중 85.3%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정당정책연구소의 내부 연구 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에 기반하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조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공동의 연구 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7월에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국회 신뢰 제고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착수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정당정책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정당정책연구소들 간 공동 연구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그만큼 초당적인 문제에 대한 정당정책연구소들 간의 협의와 공동의 고민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향후 정당정책연구소들이 함께 공동의 연구 개발 과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책연구소 평가지표를 토대로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를 통해서 특정 연구와 정책 개발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실제로 얼마나 입법화되었는지, 그리고 정부 예산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효과 분석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정당정책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당정책연구소의 교육 관련 활동은 자신이 추

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만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당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의 비중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해외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교육 활동을 중시하고 많은 비중을 두는 것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교육 관련 활동은 그 실적상 가장 낮은 비중을 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다른 활동들과 비교하여 교육 활동 비율이 1~10% 이내로 낮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정당법상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정당법상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시민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거의 전적으로 국고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정당재단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당정책연구소의 교육 활동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의 경우 교육 활동이 미진한 동시에 그 대상이 당원과 당직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부 청년, 대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활동이 존재하지만 그 횟수가 매우 적다. 이것은 해외의 정당정책연구소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책 연구 개발 역량 강화 못지않게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정책연구소가 다양한 대상들을 상대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셋째, 교육 활동과 연계한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독일의 정치재단의 경우 재능 있는 젊은 인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짧은 기간에 동시에 성취한 국가

로서 해외 정당정책연구소들과 같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해외 장학사업과 외국 연구원 채용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의 경우 장학프로그램의 동문이 14,12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과 성과들을 도출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창출해가고 있다. 해외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정치적인 영역의 민주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도 이와 같은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홍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온라인 홍보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정당정책연구소의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메일 발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 활동은 보고서 발간 등과 같은 오프라인 자료를 통한 홍보 활동과 비교하여 비용도 절약되고 관련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정책 홍보의 수단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콘텐츠를 홍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단기적인 과제에만 소모적으로 자원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힘들다.

현재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연구소 소개와 같은 간단한 정보들만이 영어로 게시되어 있다. 각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영어 자료집의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면 맥겐의 정당정책연구소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된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지금까지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정당정책연구소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 활동 실적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떠한 위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들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넷째,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우 정당에게 상당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에 사용하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상위 정당정책연구소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이와 같은 점은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점과 비교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외국의 정당정책연구소 사례를 다수 발굴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큰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다양한 학문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부록 1] 해외 주요 정당정책연구소 현황 정리

순위	연구소	사이트 링크	국가	영문 서비스 제공
1	Konrad Adenauer Foundation(KAS)	https://www.kas.de/home * 영문 서비스 지원사이트에 접속해도 영문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음	독일	△
2	Friedrich Ebert Foundation(FES)	https://www.fes.de/	독일	X
3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https://www.freiheit.org * 영문 서비스 지원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음	독일	△
4	Fabian Society	https://fabians.org.uk/	영국	O
5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FEPS)	https://www.feps-europe.eu/	벨기에	O
6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NDI)	https://www.ndi.org/	미국	O
7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IRI)	https://www.iri.org/	미국	O
8	Heinrich Boll Foundation(HBS)	https://www.boell.de/de https://www.boell.de/en (영문 서비스 지원사이트) * 영문 서비스 지원을 해주지만 독일어만 지원하는 사이트와 차이를 보임(노출되는 기사가 다름)	독일	△
9	Hanns Seidel Foundation(HSS)	https://www.hss.de/	독일	O
10	European Ideas Network(EIN)	http://www.europeanideasnetwork.com/	벨기에	O
11	Demos	https://demos.co.uk/	영국	O
12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WMCES), FKA Centre for European Studies	https://www.martenscentre.eu/	벨기에	O
13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https://www.progressivepolicy.org/	미국	O
14	Party School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ttp://www.idcpc.org.cn/ http://www.idcpc.org.cn/english/ (영문 서비스 지원사이트) *영문 서비스를 지원해주지만 중국어만 지원하는 사이트와 차이가 심함	중국	△

15	Fundacion Jaime Guzman(FJG)	https://www.fjguzman.cl/	칠레	X
16	New Democrat Network(NDN)	https://www.ndn.org/	미국	O
17	Foundation for EU Democracy	http://europeandemocracy.eu/	벨기에	O
18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KA Evert Vermeer Foundation	https://www.foundationmaxvanderstoel.nl/	네덜란드	X
19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FAES)	https://fundacionfaes.org/es/	스페인	O
20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Fondapol)	http://www.fondapol.org/	프랑스	O
21	Green European Foundation(GEF)	https://gef.eu/	벨기에	O
22	Rosa Luxemburg Foundation(RLS)	https://www.rosalux.de/ https://www.rosalux.de/en/ (영문 서비스 지원사이트) * 영문 서비스 지원을 해주지만 독일어만 지원하는 사이트와 큰 차이(노출되는 기사가 다름)	독일	△
23	Wiardi Beckman Foundation(WBS)	https://www.wbs.nl/	네덜란드	X
24	Terra Nova	http://tnova.fr/	프랑스	X
25	Fondazione Italianeuropei	https://www.italianeuropei.it/it.html	이탈리아	O
26	European Peoples Party	https://www.epp.eu/	벨기에	O
27	Institute of Strategic Analysis and Policy Research(INSAP)	https://insap.org.my/	말레이시아	O
28	Fundacao Armando Alvares Penteado(FAAP)	http://www.faap.br/	브라질	X
29	SEDAR Institute	https://www.facebook.com/kitasedarmalaysia/?ref=page_internal	말레이시아	X
30	Institute of European Democrats(IED)	https://www.iedonline.eu/	벨기에	O
31	Bertil Ohlinstitutet	http://ohlininstitutet.se/	스웨덴	O
32	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	http://www.spmrf.org/	인도	O
33	Fondation Jean-Jaurès	https://jean-jaures.org/	프랑스	X

34	Foundation fo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search(SETA)	https://www.setav.org/	터키	O
35	Fundação Perseu Abramo (FPA)	https://fpabramo.org.br/	브라질	X
36	Jinnah Institute	https://jinnah-institute.org/	파키스탄	O
37	India Foundation	https://www.indiafoundation.in/	인도	O
38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https://www.vifindia.org/	인도	O
39	Russkiy Mir Foundation	https://ruskiymir.ru/ https://ruskiymir.ru/en/ (영문 서비스 지원사이트) *영문 서비스 지원을 해주지만 러시아어만 지원하는 사이트와 차이가 큼	러시아	O

[부록 2] 독일 정치재단의 국가자금에 대한 공동 선언³⁵⁾

Gemeinsame Erklärung zur staatlichen Finanzie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Die Konrad-Adenauer-Stiftung, Friedrich-Ebert-Stiftung, Friedrich-Naumann-Stiftung, Hanns-Seidel-Stiftung und die Heinrich-Böll-Stiftung haben ihr Selbstverständnis formuliert und ihren Standort bestimmt. Ihre gemeinsame Erklärung ist Selbstverpflichtung und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zugleich. Im November 1998 ist sie in der Europäischen Begegnungsstätte der Konrad-Adenauer-Stiftung in Cadenabbia intensiv beraten worden. Sie wurde einvernehmlich verabschiedet und von den Vorständen unterzeichnet. Die Rosa-Luxemburg-Stiftung schloss sich 2003 dieser Erklärung an.

Die Konrad-Adenauer-Stiftung, Friedrich-Ebert-Stiftung, Friedrich-Naumann-Stiftung, Hanns-Seidel-Stiftung und die Heinrich-Böll-Stiftung sind die der Christlich Demokratischen Union Deutschlands,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der Freien Demokratischen Partei, der Christlich Sozialen Union in Bayern und der Bundespartei Bündnis 90/Die Grünen nahestehenden Politischen Stiftungen. Mit der Wahrnehmung ihrer satzungsmäßigen Aufgaben wollen sie zur Gestaltung der Zukunft unseres Gemeinwesens beitragen. Ihre gesellschaftspolitische und demokratische Bildungsarbeit, Information und Politikberatung im In- und Ausland, die auf den Prinzipien der freiheitlich demokratischen Grundordnung aufbauen und den Grundsätzen der Solidarität, Subsidiarität und gegenseitigen Toleranz verpflichtet sind, haben insbesondere zum Ziel:

durch Vermittlung politischer Bildung die Beschäftigung der Bürger mit politischen Fragen anzuregen sowie ihr politisches Engagement zu fördern und zu vertiefen;

durch Wissenschaftsförderung, politische Forschung und Beratung Grundlagen politischen Handelns zu erarbeiten sowie den Dialog und Wissenstransfer zwischen Wissenschaft, Politik, Staat und Wirtschaft zu vertiefen;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Parteien sowie der politischen und sozialen Bewegungen zu erforschen;

mit Stipendien und studienbegleitenden Programmen die wissenschaftliche Aus- und Fortbildung begabter junger Menschen zu fördern;

durch Veranstaltungen, Stipendien und Pflege und Erhalt von Kulturwerken Kunst und Kultur zu fördern;

durch Informationen und internationale Begegnungen die europäischen Einigungsbestrebungen zu unterstützen und zur Völkerverständigung beizutragen;

mit Programmen und Projekten entwicklungspolitische Hilfe zu leisten und zum Aufbau demokratischer, freiheitlicher und rechtsstaatlicher Strukturen, die den Menschen- und Bürgerrechten verpflichtet sind, beizutragen.

Es gehört zum Selbstverständnis der Politischen Stiftungen, ihre Ressourcen mit größtmöglichem Nutzen einzusetzen und darüber öffentlich Rechenschaft zu legen. Die

35) Konrad-Adenauer-Stiftung et al. "Gemeinsame Erklärung zur staatlichen Finanzie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https://www.kas.de/gemeinsame-erklaerung-zur-staatlichen-finanzierung-de-er-politischen-stiftungen>> (검색일: 2019/06/30).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über ihre Tätigkeit und die Verwendung ihrer Mittel ist eine selbstgesetzte Verpflicht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und stärkt das öffentliche Vertrauen in ihre Arbeit. Auch aus diesem Grund sind die Politischen Stiftungen übereingekommen, die Empfehlungen der vom Bundespräsidenten berufenen Kommission unabhängiger Sachverständiger aufzugreifen, ohne insoweit auf eine etwaige gesetzliche Regelung zu warten. In dieser Gemeinsamen Erklärung stellen sie ihr Selbstverständnis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staatliche Finanzierung ihrer Arbeit und die öffentliche Rechenschaftslegung dar.

Erster Abschnitt: Freiheit, politische Bildung und staatliche Förderung

1. Die Politischen Stiftungen sind ein wichtiger Teil der politischen Kul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e leisten für das Gemeinwesen nützliche Arbeit (Empfehlungen der vom Bundespräsidenten berufenen Kommission unabhängiger Sachverständiger), so daß deren staatliche Förderung im öffentlichen Interesse liegt und der Verfassung entspricht (Bundesverfassungsgericht 2 BvE 5/8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in dieser Entscheidung die langjährige Staatspraxis der Globalfinanzie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bestätigt.

2. Der freiheitliche Staat hat durch die Verfassung den Auftrag, politische Bildung zu fördern. Er lebt aus der politischen Kultur, deren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Wurzeln sich seiner Gewalt entziehen. Politischer Diskurs und politische Entscheidung setzen Information und ethisch-politische Orientierung voraus. Politische, Orientierung bietende Bildungsarbeit nicht-staatlicher Bildungsträger, die auch politische Forschung, Information und Beratung sowie Begabtenförderung umfaßt, ist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ie Entfaltung politischer Freiheit und sichert den Fortbestand des freiheitlichen, pluralistischen Gemeinwesens.

3. Der Staat verstößt nicht gegen seine verfassungsrechtliche Neutralitätspflicht, wenn er die Bildungsarbeit der Politischen Stiftungen finanziell fördert (BVerfG aaO). Er erfüllt vielmehr seinen verfassungsrechtlichen Bildungsauftrag effektiver, wenn er Finanzzuwendungen erbringt, als wenn er selbst durch eigene Behörden tätig wird. Politisches und kulturelles Leben bedarf der Flexibilität und Kreativität. Die staatliche Finanzhilfe regt die dezentrale Erfüllung des Gemeinwohls an und bewirkt einen Wettbewerb der gesellschaftlichen Kräfte um Ideen, Konzepte und attraktive Programme. Er führt zu Leistungsorientierung, Initiativenvielfalt und zur Aktivierung privaten Sachverständs auf breiter Ebene. Politische Bildungsarbeit ist Zukunftsgestaltung, nicht Verwaltung; ihre Organisation bedarf unbürokratischer Strukturen und offener Verfahrensweisen.

Zweiter Abschnitt: Status der Politischen Stiftungen

1. Die Politischen Stiftungen sind privatrechtliche Organisationen, die Leistungen erbringen, die - wie dargestellt - im öffentlichen Interesse liegen, aber vom Staat selbst nicht wahrgenommen werden können. Die Tätigkeit der Politischen Stiftungen hat ihr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soweit es ihre privatrechtliche Organisation und ihre Tätigkeit betrifft, in Art. 5, Art. 9 Abs. 1 und Art. 12 Abs. 1 GG.

Die Tätigkeit der Politischen Stiftungen unterliegt nicht den parteirechtlichen Regelungen des Art. 21 GG und des Parteiengesetzes. Die Tätigkeiten der politischen Parteien und der Stiftungen verfolgen verschiedene, voneinander abgrenzbare Ziele. Ihre politische Bildungsarbeit soll die Beschäftigung der Bürger mit politischen Sachverhalten anregen und den Rahmen bieten für eine - allen Bürgern zugängliche - Diskussion politischer Fragen. Dadurch wird das Interesse an einer aktiven Mitgestaltung des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Lebens geweckt und das dazu notwendige Rüstzeug vermittelt (BVerfG 2 BvE 5/83).

2. In Übereinstimmung mit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VerfG 2 BvE

5/83) gehört es zum Selbstverständnis der Politischen Stiftungen, daß sie von den Parteien rechtlich und tatsächlich unabhängig sind und ihre Aufgaben selbständig, eigenverantwortlich und in geistiger Offenheit wahrnehmen. Sie wahren auch in der Praxis die gebotene Distanz zu der jeweiligen Partei. Die Politischen Stiftungen werden (BVerfG 2 BvE 5/83) diesen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gerecht: Verfassungsrechtliches Leitbild, Selbstverständnis der Politischen Stiftungen und tatsächliche Praxis stimmen überein.

3. Die Politischen Stiftungen besetzen ihre Aufsichts- und Vertretungsorgane sowie die Position des Hauptgeschäftsführers bzw. Geschäftsführers in eigener Verantwortung. Der gebotenen Distanz zu den Parteien tragen sie auch bei der Besetzung der Führungspositionen in folgender Weise Rechnung:

Der Vorsitzende des Vorstands, der Vorstandssprecher, der Geschäftsführende Vorsitzende, das geschäftsführende Vorstandsmitglied und der Schatzmeister einer Politischen Stiftung üben in der jeweils nahestehenden Partei keine vergleichbare Funktion aus.

Die Vertretungsorgane der Politischen Stiftungen bestehen nicht vornehmlich aus in hervorgehobener Stellung aktiv tätigen Parteimitgliedern. Eine hervorgehobene Stellung in einer Partei haben Bundes- und Landesparteivorsitzende, Mitglieder eines Bundesvorstandes, Schatzmeister, Generalsekretäre und Bundesgeschäftsführer sowie vergleichbare Funktionsinhaber in den Fraktionen des Bundestags und der Landtage.

Dritter Abschnitt: Staatliche Förderung und Neutralitätspflicht

1. Die Förderung der gesellschaftspolitischen und demokratischen Bildungsarbeit, Information und Politikberat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ist Bildungsförderung im gesellschaftlichen Pluralismus.

Nach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genügt der Staat seiner verfassungsrechtlichen Neutralitätspflicht, wenn er die dauerhaften, ins Gewicht fallenden Grundström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emessen berücksichtigt (BVerfG 2 BVE 5/83). Nur wenn die staatliche Förderung der pluralen Struktur der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Kräfte Rechnung trägt, wird sie d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gerecht, Gleiches gleich und Ungleiches seiner Eigenart entsprechend verschieden zu behandeln (BVerfG aaO).

Dazu vertret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die Auffassung, daß Maßstab für die Dauerhaftigkeit und Wichtigkeit einer politischen Grundströmung die Stärkeverhältnisse sein sollten, die vier Bundestagswahlen widerspiegeln, weil erst dadurch die Dauerhaftigkeit und Wichtigkeit belegt wird.

Es obliegt der parlamentarischen Entscheidung, nach welchen Kriterien Politische Stiftungen erstmals Globalzuschüsse erhalten.

Ein geeigneter Anhaltspunkt für die Dauerhaftigkeit der ins Gewicht fallenden Grundström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ürfte eine wiederholte Vertretung, dabei zumindest einmal in Fraktionsstärke, der der Politischen Stiftung nahestehenden Partei im Deutschen Bundestag sein. Dabei könnte auch zwischen ihrer Stärke als Fraktion oder Gruppe unterschieden werden.

Bei der erstmaligen Festlegung der Höhe der Förderung könnte das Parlament von einem Sockelbetrag ausgehen und diesen in einer bestimmten Anzahl von Wahlperioden kontinuierlich bis hin zur anteiligen Förderung im Rahmen des oben genannten Maßstabes aufwachsen lassen.

Scheidet eine Partei aus dem Deutschen Bundestag aus, sollte die ihr nahestehende Politische Stiftung mindestens für die Dauer einer Wahlperiode den Anspruch auf Zuteilung von Globalzuschüssen behalten.

2. Die Politischen Stiftungen erhalten neben den Globalzuschüssen projektbezogene

Fördermittel aus dem Bundeshaushalt. Nach Auffass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ist es sachgerecht, daß die genannten Maßstäbe auch auf die Gewährung der Projektmittel angewendet werden.

Vierter Abschnitt: Staatliche Grundstockfinanzierung

Zur Erfüllung ihrer im öffentlichen Interesse liegenden Aufgaben bedürf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einer personellen, sachlichen und finanziellen Ausstattung, die eine kontinuierliche und professionelle Arbeit ermöglicht. Dafür erhalt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institutionelle Förderung aus dem Bundeshaushalt (Globalzuschüsse). Dieser Globalfinanzierung kommt eine besondere Bedeutung zu, da sie den Grundstock bildet, ohne den eine kontinuierliche fachliche, personelle und finanzielle Planung nicht möglich wär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mpfehlungen der vom Bundespräsidenten eingesetzten Kommission unabhängiger Sachverständiger vertret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im Hinblick auf die Zuteilung und Bewirtschaftung der Globalzuschüsse folgende Auffassung:

1. Entsprechend der bisherigen Praxis sollten die Globalzuschüsse weiterhin mit Gesamtansatz und Einzelansätzen im Haushaltsgesetz festgelegt werd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folgen der Anregung der vom Bundespräsidenten berufenen Kommission unabhängiger Sachverständiger und halten es für angemessen, daß bei einer Erhöhung des Gesamtansatzes der Globalzuschüsse die Zuwachsrate des Gesamthaushaltes grundsätzlich nicht überschritten werden sollte.

2. In dem durch das Haushaltsgesetz festgelegten Rahmen bewilligt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als zuständiger Zuwendungsgeber wie bisher die Globalzuschüsse gegenüber den Politischen Stiftungen zur Erfüllung ihrer satzungsmäßigen Aufgaben auf der Grundlage der Bundeshaushaltsordnung und der Besonderen Bewirtschaftungsgrundsätze, die als Nebenbestimmungen dem Bewilligungsbescheid zugrundegelegt werden. Zuwendungsfähig sind Projektausgaben, Personalausgaben, sächliche Verwaltungsausgaben und Ausgaben für Investitionen. Andere gemeinnützige Organisationen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können von den Politischen Stiftungen im Rahmen des in Satz 1 genannten Verwendungszwecks finanziell gefördert werden.

3. Die Politischen Stiftungen verwenden die Globalzuschüsse ausschließlich zur Erfüllung des Verwendungszwecks. Im Sinne ihrer jeweiligen geistig-politischen Zielsetzung strebt ihre Wirtschaftsführung Professionalität, Effektivität und Effizienz sowie einen hohen Qualitätsstandard an und beachtet den Grundsatz der Sparsamkeit und Wirtschaftlichkeit.

4. Die Flexibilität der Politischen Stiftungen sollte erhalten bleiben (Empfehlungen der vom Bundespräsidenten berufenen Kommission unabhängiger Sachverständiger). Über ihre rechtlichen Verpflichtungen hinaus leg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dem Bundesminister des Innern mit dem jährlichen Abruf des Globalzuschusses neben der Übersicht gemäß den Besonderen Bewirtschaftungsgrundsätzen eine Wirtschaftsplanung in Form einer Gesamtübersicht vor, in der alle im Haushaltsjahr zu erwartenden Einnahmen und die voraussichtlich zu leistenden Ausgaben aufgeführt sind.

Die geplanten Ausgaben werden begründet. Dies gilt auch für die Ausgaben für Personal und Verwaltung einschließlich der Stellenstruktur.

5. Die Politischen Stiftungen lassen ihre Wirtschaftsführung auch künftig jährlich auf eigene Kosten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prüfen und weisen die Verwendung der Globalzuschüsse jährlich innerhalb von acht Monaten nach Abschluß des Haushaltsjahres gegenüber dem Bundesminister des Innern nach. Der Verwendungsnachweis besteht aus einem Sachbericht, einem zahlenmäßigen Nachweis und dem Prüfbericht des Wirtschaftsprüfers über die

Verwendung der Globalzuschüsse. Dies gilt entsprechend für die Verwendung von Mitteln aus Globalzuschüssen, mit denen andere gemeinnützige Organisationen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siehe oben Ziffer 2.) gefördert wurd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legen dem Bundesminister des Innern ferner den vom Wirtschaftsprüfer geprüften und zur Veröffentlichung vorgesehenen Jahresabschluss entsprechend § 264 HGB mit Bilanz und Einnahmen- und Ausgabenrechnung vor.

Fünfter Abschnitt: Projektförderung aus dem Bundeshaushalt

Zur Erfüllung ihrer satzungsgemäßen Aufgaben erhalt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neben den Globalzuschüssen Projektfördermittel aus dem Bundeshaushalt. Im Rahmen der Einsparmaßnahmen in den öffentlichen Haushalten und zur Verbesserung der Transparenz der Stiftungsfinanzierung hab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selber im Herbst 1992 gegenüber dem Haushaltsausschuß des Deutschen Bundestags angeregt, die Projektförderung aus dem Bundeshaushalt auf die Titel zu beschränken, die sich aus der Anlage dieser Gemeinsamen Erklärung ergeben. Seit dem Haushaltsjahr 1993 wird so verfahren.

Die Beantragung, Verwendung und Abrechnung der Projektförderungsmittel richten sich - wie für jeden anderen

Zuwendungsempfänger - nach der Bundeshaushaltsordnung, den Richtlinien der Zuwendungsgeber und den Allgemeinen Nebenbestimmungen zur Projektförderung (ANBest-P).

Sechster Abschnitt: Kontrolle und Öffentliche Rechenschaftslegung

1. Die Politischen Stiftungen weisen darauf hin, daß die ordnungsgemäße, sparsame und wirtschaftliche Verwendung der Globalzuschüsse und Projektförderungsmittel seit jeher von der jeweils bewilligenden Bundesbehörde auf der Basis der eingereichten Verwendungsnachweise kontrolliert wird. Die Verwendung der Globalzuschüsse wird zudem aktuell und laufend im Rahmen der begleitenden Kontrolle des Erfolgs durch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auf der Grundlage der Allgemeinen Nebenbestimmungen zur institutionellen Förderung (ANBest-I) geprüft. Außerdem wird die Haushalts- und Wirtschaftsfüh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vom Bundesrechnungshof kontrolliert, dessen Prüfrecht sich aus § 104 Abs. 1 Bundeshaushaltsordnung ergibt. Der Bundesrechnungshof legt seine Prüfberichte der jeweils bewilligenden Bundesbehörde vor.

Daneben wird die Verwendung der Landesmittel durch Landesbehörden und Landesrechnungshöfe kontrolliert. Die Einhaltung der steuerrechtlichen Gemeinnützigkeitsbestimmungen wird von den Finanzbehörden geprüft.

2. Wie eingangs dargestellt, ist di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eine wichtige Vertrauensgrundlage für die Arbeit der Politischen Stiftungen. Es ist ihr vorrangiges Anliegen, die Öffentlichkeit regelmäßig und umfassend über ihre Arbeit zu informieren und die Verwendung ihrer Mittel transparent zu machen. Sie haben deshalb bereits in den letzten Jahren auch ohne gesetzliche Publizitätspflicht ihre Mittelverwendung offengelegt. Zusätzlich greifen die Politischen Stiftungen die Empfehlungen der vom Bundespräsidenten berufenen Kommission unabhängiger Sachverständiger auf und werden ihre Wirtschaftsplanung in Form einer Gesamtübersicht nach beigefügtem Muster (Anlage 2) veröffentlichen.

Dies gilt gleichermaßen für den vom Wirtschaftsprüfer geprüften Jahresabschluss entsprechend § 264 HGB in Form einer Bilanz und einer Einnahmen-/ Ausgabenrechnung. Er enthält ergänzend folgende Angaben (Muster Anlage 3):

Zahl der Personalstellen im Vergleich zum Vorjahr;

Personelle Besetzung der gesetzlichen Organe der juristischen Person und des

Hauptgeschäftsführers bzw. Geschäftsführers sowie dessen Stellvertreters mit Hinweis darauf, welche dieser Personen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der Landtage, der Bundes- oder Landesregierungen oder Bundes- oder Landesvorstände der jeweils nahestehenden Partei sind. Die genannten Angaben werden im Bundesanzeiger und in den Geschäftsberich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veröffentlicht. Dies gilt entsprechend für die Wirtschaftsplanung und Jahresabschlüsse anderer gemeinnütziger Organisationen politischer Bildungsarbeit, die eine Politische Stiftung mit Globalmitteln fördert.

Mit diesen bereits praktizierten oder eingeleiteten Maßnahmen ist ein hohes Maß an Transparenz der Finanzierung der Politischen Stiftungen erreicht.

Die Politischen Stiftungen werden ihr Handeln auch künftig nach den Maßstäben dieser Gemeinsamen Erklärung ausrichten.

[부록 3] Fabian Society의 기금모금 규정³⁶⁾

FUNDING CODE OF PRACTICE - CORE TEXT FOR ALL PARTNERSHIP AGREEMENTS Approved by Executive Committee, December 2011

1 The Fabian Society,¹ welcomes and is grateful for financial and other support for its work from external organisations and from individuals. External organisations may include private sector businesses, public enterprises, trade union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charitable trusts, among others. Forms of support may include sponsorship of publications and events (conferences, seminars, lectures, receptions, etc), funding for research, and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provided for other activities.

2 We recognise that those supporting our work have reasons for doing so, and in some cases may be seeking some benefits in return. The Society is a democratically constituted organisation and is accountable to its members. We operate in a political world where our role must be absolutely clear and transparent. These guidelines are therefore intended to set the ground rules for our relationship with funders.

3 The Fabian Society seeks financial and other kinds of support only for work we believe will further our programme and which reflect our concerns. We do not undertake activities at the behest of others simply because they may provide a source of funding.

4 The Society insists on the retention of complete editorial control over its work, and does not allow funders to decide the content either of publications or of conferences, seminars and other events. We will be happy to receive helpful suggestions, but the final editorial decisions always rest with us.² The organisation of Fabian events, publications and other outputs are carried out solely by the Fabian Society staff. Funding partners should therefore always communicate with the relevant staff member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and should not directly contact participants about the project, unless this has been explicitly agreed by the Fabian Society in advance for some specific purpose.

5 The Fabian Society's work frequently involves senior politicians, advisers or senior Labour Party personnel. But this is always for the purpose of furthering political and policy debate. We do not provide access to such figures simply in return for funding. We are not a lobbying organisation.

6 The Fabian Society is an independent think tank and political society whose aim is to advance social democratic politics and promote free debate. We may therefore refuse

36) Fabian Society. "FUNDING CODE OF PRACTICE." (December 2011), <<https://fabians.org.uk/wp-content/uploads/2018/02/Fundraising-Code-of-Practice.pdf>> (검색일: 2019/06/30).

sponsorship of research, publications or events from sources whose involvement, in the opinion of the Society, may suggest to outside observers that the debate we are promoting has been influenced by particular vested interests. We recognise that financial supporters will usually be involved in the relevant field of work. But their involvement with us should reflect (and be seen to reflect) a concern to promote general debate in that field, rather than their particular interests. Where there may be a perception that a sponsor may restrict or unduly influence the debate, we may seek co-sponsorship from other organisations with counter-balancing interests. The nature of the work, rather than the status of the funder, will also be taken into account (for example funding for a balanced debate will receive less scrutiny than funding for original research when the reality and appearance of impartiality is essential).

7 The Fabian Society does not accept financial or other support from organisations whose activities are judged by the Society's Executive Committee to be unethical or otherwise likely to damage the Society's reputation through association. These include certain arms exporters (such as those exporting arms to regime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manufacturers of landmines), manufacturers of tobacco and pornography, and companies whose activities in respect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the environment, taxation, corruption, intrusions on privacy and consumer protection are regarded as unacceptable (for example bribery, exploitation of low paid workers or vulnerable consumers or wilful harm to the environment). The General Secretary shall decide whether this rule may apply to a specific organisation and when in doubt will seek advice from the society's Finance and General Purposes committee.

8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abian Society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We hope that funders and potential funders of our work will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ese guidelines and will work within them in partnership with the Society.

1. Including the Young Fabians, Fabian Women's Network and Scottish and Welsh Fabians to whom this code applies.
2. The only exception is where the society carries out research consultancy for publication by a third party. In these instances all other aspects of this code will still be followed.

[부록 4] FAES의 굻거버넌스 규정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DE GESTIÓN**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DE GESTIÓN - ÍNDICE

TRANSPARENCIA Y COMUNICACIÓN.....	3
PRIMERO.- INFORMACIÓN RELEVANTE Y RENDICIÓN DE CUENTAS	3
SEGUNDO.- COLABORACION INSTITUCIONAL	3
CONTROL Y SUPERVISIÓN FINANCIERA	3
PRIMERO.- AUTONOMÍA	3
SEGUNDO.- OBTENCIÓN Y OPTIMIZACIÓN DE LOS RECURSOS	4
TERCERO.- PLANIFICACIÓN Y SEGUIMIENTO DE LA ACTIVIDAD	4
GOBIERNO DE LA FUNDACIÓN	4
PRIMERO.- COMPORTAMIENTO ÉTICO	4
SEGUNDO.- CRITERIOS DE ACTUACIÓN	4
TERCERO.- GRATUIDAD	4
<i>PATRONATO.</i>	5
CUARTO.- NATURALEZA	5
QUINTO.- DESIGNACIÓN, RENOVACIÓN Y SUSTITUCIÓN	5
SEXTO.- OBLIGACIONES Y RESPONSABILIDADES DEL PATRONATO	5
SÉPTIMO.- OBLIGACIONES Y RESPONSABILIDADES DE LOS PATRONOS	6
OCTAVO.- DERECHOS	7
NOVENO.- CONFLICTO DE INTERESES	7
<i>CARGOS DE LA FUNDACIÓN.</i>	7
DÉCIMO.- EL PRESIDENTE	7
DECIMOPRIMERO.- EL SECRETARIO.....	7
FUNCIONAMIENTO Y ADOPCIÓN DE ACUERDOS POR EL PATRONATO Y EL COMITÉ EJECUTIVO	8
PRIMERO.- PREPARACIÓN DE LAS SESIONES	8
SEGUNDO.- DESARROLLO DE LAS SESIONES	8
RELACIONES DE LA FUNDACIÓN CON DONANTES Y VOLUNTARIOS	9
PRIMERO.- RELACIÓN CON LOS PATROCINADORES Y COLABORADORES	9
SEGUNDO.- JUSTIFICACION DE LAS AYUDAS RECIBIDAS	9
TERCERO.- LOS VOLUNTARIOS	9
EL EQUIPO DE GESTIÓN	10
PRIMERO.- SELECCIÓN DE PERSONAL Y DEFINICIÓN DE FUNCIONES	10
SEGUNDO.- DESARROLLO PROFESIONAL, IGUALDAD DE OPORTUNIDADES Y ACCESIBILIDAD	10
TERCERO.- CONFLICTO DE INTERESES.	10
ACEPTACIÓN, CUMPLIMIENTO Y VERIFICACIÓN DE LAS NORMAS DE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11
PRIMERO.- SEGUIMIENTO Y CONTROL DE LA APLICACIÓN	11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DE GESTIÓN

TRANSPARENCIA Y COMUNICACIÓN

Primero.- Información relevante y rendición de cuentas

La Fundación:

1. Dará a conocer a la sociedad sus fines, actividades y beneficiarios de su actuación. Igualmente hará públicos sus Estatutos y estas *Normas*, así como la composición de sus órganos de gobierno y equipo directivo.
2. Someterá sus cuentas a una auditoría externa, sin perjuicio d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legales.
3. Informará sobre sus cuentas anuales, esto es el informe de auditoría, balance y cuenta de resultados, así como de la memoria de actividades y cualquier otra información relevante.
4. Hará públicas sus actividades difundiendo la información a que se refieren los apartados anteriores. La Web será un instrumento fundamental para la comunicación y la publicación de las actuaciones de la Fundación.
5. El Patronato de la Fundación y todos los demás órganos de gobierno se obligan a velar por el estricto cumplimiento de la legislación que en cada momento esté vigente relativa al régimen jurídico, económico y fiscal de las fundaciones, sus actividades, transparencia y control financiero. Y, en concreto, de la Ley de Fundaciones, Ley de Régimen fiscal de las entidades sin fines lucrativos, Ley de Transparencia, y la Disposición Adicional 7ª de la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Segundo.- Colaboración institucional

La Fundación procurará colaborar con otras entidades del tercer sector, empresas e instituciones públicas y privadas, que puedan contribuir al cumplimiento de sus fines.

CONTROL Y SUPERVISIÓN FINANCIERA

Primero.- Autonomía

1. La Fundación contará con fuentes de financiación que favorezcan la continuidad de su actividad y garanticen su autonomía financiera.
2. La Fundación no aceptará aportaciones económicas que condicionen el cumplimiento de sus objetivos, valores o principios, que pongan en peligro el cumplimiento de sus fines o cuyo origen sea ilícito o no sea transparente.

Segundo.- Obtención y optimización de los recursos

La Fundación:

1. Contará con una política de aprobación de gastos presidida por la austeridad y con criterios de selección de proveedores, en cuya contratación procurará ajustarse, siempre que sea posible, al principio de concurrencia.
2. Establecerá un procedimiento de control interno de sus ingresos y gastos.
3. Velará para que su patrimonio no pierda valor y contará con unas normas de inversión, aprobadas por el Patronato, elaboradas con criterios de seguridad, liquidez, rentabilidad y transparencia.

Tercero.- Planificación y seguimiento de la actividad

La Fundación:

1. Planificará su actividad e informará al patronato sobre los proyectos y actividades que desarrollen las distintas áreas de la Fundación que serán aprobados por el Patronato.
2. Establecerá sistemas de control y seguimiento interno de su actividad.
3. Contará con procedimientos para controlar la adecuada utilización de las donaciones a terceros, si las hubiera.

GOBIERNO DE LA FUNDACIÓN

Primero.- Comportamiento ético

El respeto a la ética y a las leyes inspirará la actuación de quienes integran la Fundación, lo que implica diligencia, buena fe y primacía de los fines de la Fundación en consonancia con la voluntad del patronato.

Segundo.- Criterios de actuación

La determinación de los beneficiarios de las actividades fundacionales se realizará por el Patronato con criterios de imparcialidad atendiendo a la naturaleza específica de cada actividad.

Tercero.- Gratuidad

1. Los miembros del Patronato desempeñarán sus cargos gratuitamente, sin perjuicio del derecho a ser reembolsados de los gastos, debidamente justificados, que el ejercicio de su función les ocasione, siempre de acuerdo con criterios de austeridad y eficacia.
2. Las retribuciones que pudieran percibir los patronos con funciones distintas a las que le corresponden como patronos, contarán con la

aprobación del patronato y la correspondiente autorización previa del protectorado de fundaciones.

PATRONATO.

Cuarto.- Naturaleza

El Patronato es el órgano de gobierno y representación de la Fundación que se reunirá con la periodicidad necesaria para desempeñar con eficacia sus funciones.

Quinto.- Designación, renovación y sustitución

La designación de los miembros del Patronato se realizará en la forma prevista en los estatutos, actuando con rigurosidad, objetividad y diligencia. En la designación de patronos se tendrán en cuenta sus capacidades, experiencia e independencia.

Sexto.- Obligaciones y responsabilidades del Patronato

1. Dar cumplimiento a la voluntad fundacional y a los Estatutos, así como velar en todo momento por el cumplimiento del fin fundacional.
2. Seleccionar y llevar a cabo las inversiones de los recursos de la Fundación del modo más adecuado para asegurar el cumplimiento de su fin fundacional.
3. Designar a las personas que hayan de desempeñar el cargo de Patrono. Ejercer la acción de responsabilidad respecto de los actos realizados por los miembros del Patronato.
4. Aprobar los Planes de actuación.
5. Examinar, y en su caso aprobar, las Cuentas Anuales y la Memoria de actividades.
6. Acordar la modificación de los Estatutos, así como la fusión, la extinción y la liquidación de la Fundación, pudiendo decidir libremente sobre el destino de los bienes y derechos resultantes.
7. Establecer Institutos especializados para la realización de actividades específicas y Delegaciones Territoriales, así como regular su estructura y funcionamiento.
8. Constituir Consejos Asesores de la Fundación, de sus Institutos, Delegaciones y áreas sectoriales de actividad; así como designar y cesar a sus miembros.
9. Organizar y dirigir el funcionamiento interno y externo de la Fundación; establecer los Reglamentos de todo orden que considere convenientes;

nombrar y separar libremente a todo el personal directivo, facultativo, técnico, administrativo, auxiliar, subalterno y de cualquier otra índole, y señalar su sueldo, honorarios y gratificaciones, sin otras formalidades que las que discrecionalmente se señalen para cada caso.

10. Promover la colaboración con otras Fundaciones nacionales o extranjeras, y con cualesquiera instituciones que se ocupen de objetivos semejantes.
11. Delegar en el Presidente, el Vicepresidente, el Secretario General, o en otros miembros del Patronato, pudiendo al efecto designar un Consejo de Dirección, alguna o algunas de las facultades precedentes, salvo la aprobación del Plan de actuación y de las Cuentas Anuales, la modificación de los Estatutos, la fusión, la extinción y la liquidación de la Fundación, ni aquellos actos que requieran la autorización del Protectorado.
12. Otorgar y revocar poderes a las personas que estime conveniente.
13. Ejercer las demás facultades y funciones que le atribuyen los Estatutos o resulten propias del Patronato e inherente a éste, considerado como el órgano supremo de representación, gobierno y administración de la Fundación.

Séptimo.- Obligaciones y responsabilidades de los patronos

1. Orientar y controlar la gestión de la Fundación con toda fidelidad al interés de la Fundación.
2. Cumplir el código de conducta para el ejercicio del cargo de patrono, aprobado por el patronato de la Fundación.
3. Participar activamente en las reuniones del Patronato, recabar la información necesaria, solicitar la colaboración o asistencia que considere oportuna e instar la convocatoria de reuniones del Patronato, o la inclusión en su orden del día, de aquellos extremos que considere convenientes.
4. Guardar secreto de las informaciones que conozca como consecuencia d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5. Abstenerse de asistir e intervenir en las deliberaciones en que pueda verse afectado por un conflicto de intereses y deberá advertir al Patronato de la existencia del mismo.
6. No realizar en beneficio propio, o de las personas a él vinculadas, ninguna inversión u operación de la que haya tenido conocimiento con ocasión del ejercicio de su cargo.

Octavo.- Derechos

Los miembros del Patronato tienen derecho a recabar la información adicional que estimen necesaria sobre asuntos de su competencia, así como información periódica sobre las cuentas y principales indicadores de la actividad de la Fundación.

Noveno.- Conflicto de intereses

1. Los miembros del Patronato deberán abstenerse de intervenir en las deliberaciones y votaciones sobre propuestas de nombramiento, reelección o cese en los cargos, así como en cualquier otra cuestión en la que pudiera existir un interés particular o de la entidad a la que representen o por las que pudieran verse afectados.
2. Sin perjuicio de los procedimientos de autorización o comunicación que legalmente procedan, el Patronato debe conocer y aprobar cualesquiera relaciones comerciales que pudieran plantearse entre la Fundación y los miembros del Patronato o las entidades que representen.
3. Los miembros del Patronato no podrán utilizar su condición de patrono para obtener cualquier tipo de ganancia económica u otro beneficio personal.

CARGOS DE LA FUNDACIÓN.

Décimo.- El Presidente.

1. Deberá promover el buen funcionamiento de los órganos de la Fundación, procurando la presencia y la participación activa de los patronos, poniendo de manifiesto la importancia de cumplir con sus obligaciones.
2. Además de los deberes que le correspondan legal y estatutariamente, el Presidente velará para que los patronos reciban la información y documentación necesarias para 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Decimoprimer.- El Secretario General.

1. El Secretario General deberá dirigir los servicios técnicos y administrativos de la Fundación y la contratación del personal.
2. Elaborar los proyectos del plan de actuación anual y de presupuestos, así como los programas especiales de actuación, cuando procedan.
3. Supervisar la ejecución de los proyectos y actividades que realice la Fundación en el cumplimiento de sus fines.
4. Presentar al Patronato los proyectos de las Cuentas Anuales, del Inventario de los elementos patrimoniales, de la Memoria de Actividades y de la liquidación del presupuesto del año anterior.

5. Mantener las relaciones de la Fundación con otras personas, físicas o jurídicas, y Organismos y Administraciones públicos.
6. Llevar y custodiar los libros de actas, expedir las certificaciones de los acuerdos con el Visto Bueno del Presidente, y cursar las convocatorias de los órganos de gobierno de la Fundación.
7. Elevar a instrumento público los acuerdos del Patronato y de los demás órganos de gobierno de la Fundación.

FUNCIONAMIENTO Y ADOPCIÓN DE ACUERDOS POR EL PATRONATO Y EL COMITÉ EJECUTIVO

Primero.- Preparación de las sesiones

1. Para el desarrollo eficaz de las reuniones del patronato, los miembros del mismo recibirán las convocatorias con el orden de los temas a tratar, con una antelación mínima de cinco días naturales.
2. La Fundación pondrá a disposición de los patronos información suficiente, relevante y de manera comprensible, para que los patronos realicen un desarrollo eficaz de sus obligaciones.

Segundo.- Desarrollo de las sesiones

1. Las reuniones se ajustarán al orden del día, cuya prelación determinará el Presidente, que incluirá una hora de inicio y una hora orientativa de finalización.
2. Los patronos que deleguen su voto en otro miembro del Patronato para aquellas reuniones a las que no puedan asistir, procurarán hacerlo con instrucciones concretas al representante.
3. Las actas reflejarán con claridad y de forma inequívoca los asuntos tratados y los acuerdos adoptados. Especificarán los asistentes, presentes o representados, el orden del día de la reunión, las circunstancias del lugar y momento en que se ha celebrado, los puntos principales de las deliberaciones si lo solicitaran los patronos, así como el contenido de los acuerdos adoptados. En el acta podrá figurar, a solicitud de cada patrono, el voto contrario o favorable al acuerdo adoptado o su abstención, así como la justificación del sentido de su voto.

RELACIONES DE LA FUNDACIÓN CON PATROCINADORES, COLABORADORES Y VOLUNTARIOS.

Primero.- Relación con los patrocinadores y colaboradores.

Sin perjuicio de las obligaciones previstas con carácter general en estas *Normas*, la Fundación potenciará la transparencia en relación con sus patrocinadores y colaboradores.

Segundo.- Justificación de las ayudas recibidas.

1. La Fundación respetará la voluntad de sus patrocinadores y colaboradores sin modificar o aplicar sus aportaciones a un destino distinto al manifestado por aquéllos, sin contar con su autorización expresa.
2. La Fundación respetará el derecho de confidencialidad de sus patrocinadores y colaboradores sin revelar información sobre los mismos salvo que cuente con su autorización, dejando a salvo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legales, en particular las referidas a la prevención del blanqueo de capitales.

Tercero.- Los voluntarios.

1. La incorporación de voluntarios tendrá una finalidad altruista.
2. La Fundación definirá previamente las funciones de los voluntarios y el ámbito en el que deban actuar, no pudiendo encomendarles cometidos propios de los profesionales de la Fundación, coordinando la colaboración entre voluntarios y empleados.
3. Los derechos y obligaciones de los voluntarios se reflejarán en el acuerdo de incorporación.
4. Para el cumplimiento de sus funciones, la Fundación proporcionará a los voluntarios la formación adecuada directamente.
5. La Fundación suscribirá una póliza de seguro, adecuada a las características y circunstancias de la actividad desarrollada por los voluntarios, que les cubra de los riesgos de accidente y enfermedad derivados del ejercicio de la actividad voluntaria, así como por la responsabilidad civil por daños causados a terceros que pudiera ser exigida al voluntario o a la Fundación.
6. Los voluntarios están obligados a cumplir los compromisos adquiridos con la Fundación. Deben guardar, cuando proceda, confidencialidad de la información recibida y conocida en el desarrollo de su actividad.
7. Los voluntarios tienen derecho a realizar su actividad en condiciones de seguridad en función de la naturaleza y características de aquélla.
8. Los voluntarios tienen derecho a ser reembolsados por los gastos, debidamente justificados, realizados en el desempeño de las

actividades que les sean encomendadas, siempre de acuerdo con criterios de austeridad.

EL EQUIPO DE GESTIÓN

Primero.- Selección de personal y definición de funciones

1. La selección de personal se hará de acuerdo con los principios de mérito, capacidad e igualdad.
2. El Secretario General definirá los perfiles de las personas que componen el equipo de gestión, teniendo en cuenta las necesidades de la organización, la complementariedad de sus integrantes, formación, motivación, diversidad y su identificación con los objetivos de la Fundación.
3. Los empleados deberán cumplir con la política de confidencialidad y protección de datos.

Segundo.- Desarrollo profesional, igualdad de oportunidades y accesibilidad

1. La Fundación promoverá el desarrollo profesional y personal de sus empleados, asegurando la no discriminación y la igualdad de oportunidades, así como el desarrollo de planes y acciones formativas tendentes a favorecer su empleabilidad.
2. Garantizará a sus empleados un entorno libre de riesgos para la salud en todas sus instalaciones.
3. Fomentará medidas orientadas a la conciliación entre las obligaciones profesionales de los empleados y las responsabilidades personales y familiares de éstos.
4. Promoverá la accesibilidad y la supresión de barreras y la adaptación de equipos a las necesidades de los empleados.
5. Facilitará a los empleados los medios para el desempeño de sus funciones, debiendo estos hacer un uso adecuado de los mismos.

Tercero.- Conflicto de intereses.

Los empleados antepondrán los objetivos de la Fundación a los particulares, de forma que no se creen conflictos entre los intereses personales y laborales.

ACEPTACIÓN, CUMPLIMIENTO Y VERIFICACIÓN DE LAS NORMAS DE BUEN GOBIERNO Y BUENAS PRÁCTICAS

Primero.- Seguimiento y control de la aplicación

El seguimiento y control de la aplicación de estas *Normas* será competencia del Patronato de la Fundación que velará por su conocimiento y cumplimiento, así como sobre su actualización, tomando, en caso de vulneración, las decisiones procedentes.

[부록 5] 인도의 대외정책(India's Foreign Policy) 워크숍 세부 일정

I. INTRODUCTION AND KEY PRINCIPLES

S.NO	Topic	Faculty
1	Introduction to India's Foreign Policy	S Jaishankar Foreign Secretary,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2	Recent Innovations in India's Foreign Policy: Panchamrit Doctrine	Ram Madhav National General Secretary, Bharatiya Janata Party; Director, India Foundation Jawed Ashraf High Commissioner of India to Singapore
3	Overview of India's Foreign Policy since 2014	V K Singh Minister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Govt. of India
4	Indian Strategic Thought	Shakti Sinha Director, Nehru Memorial Museum and Library

II. INDIA AND NEIGHBORHOOD

S.NO	Topic	Faculty
1	India's Neighbourhood Policy	Amar Singh Former Secretary,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2	India's Wars and How They Shaped Our Foreign Policy	Alok Bansal Director, India Foundation Shekhar Sinha Former C-in-C, Western Naval Command, Indian Navy
3	India - Af-Pak Relations	Vivek Katju Former Secretary,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Amar Sinha Former Secretary,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4	India-China Relations	Ashok Kantha Director,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India Harsh Pant Professor, International Relations, King's College London, UK

III. INDIA AND MULTILATERALISM

S.NO	Topic	Faculty
1	From High Ground to High Table	Hardeep Singh Puri Minister of State (IC) for Housing and Urban Affairs, Government of India Kanwal Sibal Former Foreign Secretary, Government of India

2	India-ASEAN Relations	Preeti Sarin Secretary (East),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3	India and ASEAN Countries	Jawed Ashraf High Commissioner of India to Singapore Pradeep Rawat Ambassador of India to Indonesia Nagma Mallick High Commissioner of India to Brunei Darussalam
4	India-EU Relations	Ranjan Mathai Former Foreign Secretary, India Rahul Roy Chaudhury Senior Fellow for South Asia, IISS, UK

IV. INDIA'S RELATION WITH STRATEGIC PARTNERS

S.NO	Topic	Faculty
1	India-US Relations	Baijayant Jay Panda Member of Parliament, India Ashok Malik Press Secretary to the President of India
2	India-Russia Relations	P S Raghavan Convener, National Security Advisory Board, Government of India
3	India-West Asia Relations (Israel, Palestine and Iran)	Arun Singh Former Ambassador, India
4	India- Central Asia and India-Middle East Relations	Rajiv Sikri Former Secretary,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5	India-Africa Relations	Virendra Gupta Former Ambassador, India
6	India-Latin America Relations	Dattesh Parulekar Asst. Professor, Centre for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Studies, Goa University

V. KEY AGENDAS IN INDIA'S FOREIGN POLICY

S.NO	Topic	Faculty
1	India's Economic Diplomacy	Suresh Prabhu Union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2	India's Economy: Its Global Calling Card	Shri Shaurya Doval Director, India Foundation
3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 Domestic Politics in India	Baijayant Jay Panda Member of Parliament, India
4	Role of Indian Diaspora	Vijay Chauthaiwale In-Charge, Foreign Affairs Department, Bharatiya Janata Party Dhyaneswar Mulay Secretary (Consular Passport, Visa and Overseas Indian Affair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t. of India
5	India's Soft Power Diplomacy	Vinay Sahasrabuddhe President, 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 Government of India

6	Pillars of India' s Soft Power Diplomacy	David Frawley Founder & Director, American Institute of Vedic Studies Veena Sikri Former Ambassador, India Hari Kiran Vadlamani Founder, Indic Academy
---	---	---

참고문헌

- 강원택·박인휘·장훈. 2006.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형준·김도중. 2011.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현대정치연구』 제4권 1호: 5-38.
- 모종린. 2003. 『정책연구의 세계적 추세와 KDI의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박명준. 2012. 『독일 싱크탱크 산책: 대안의 정책을 만드는 생각 공장을 가다』 서울: 이매진.
- 서현진·임유진. 2016.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정치연구』 제6권 제1호: 27-46.
- 이재철·당위남. 2018.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과제: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3호: 57-76.
- 이재철·이현우·장지호. 2008. “McGann 지표를 활용한 국내 주요 정당 정책연구소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1호: 153-175.
- 임재주. 2012.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 의회』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정광호. 2006. “정책과정에서의 미국 싱크탱크(Think Tank)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예비적 분석.” 『행정논총』 제44권 1호: 265-304.
- 조진만. 2008.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2호: 111-135.
- 조진만. 2014.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실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의정논총』 제9권 1호: 113-14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준영. 2008.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치개혁은 가능한가?” 『국가전략』 제14권 3호: 169-195.
- 한의석. 2015.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모색-외국의 사례와 한국적 함의.” 『미래정치연구』 제5권 1호: 49-67.
- 황윤원. 2011. “우리나라 지방정부 싱크탱크 평가 연구: 15개 시도연구원에 대한 McGann 모델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1권 3호: 441-468.

- 황윤원 · 김재홍. 2011. “McGann지표를 응용한 한국의 싱크탱크 평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5집 3호: 97-122.
- 황윤원. 2013. “과학기술분야 정부 싱크탱크의 McGann지표 평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2집 4호: 81-112.
- Abelson, D. 1996. *American Think 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 Press.
- Callahan, D. 1999. “The Think Tank As Flack, How Microsoft and Other Corporations Use Conservative Policy Groups.” *Washington Monthly*, November.
- Denham, A. 1996. *Think-Tanks of the New Right*. New York: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 Dickson, Paul. 1972. *Think Tanks*. New York: Atheneum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obson, L. 1995. “Tanks on the Roll.” *National Journal* July(8): 1767-1771.
- McGann, J. 2005.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S.” Foreign Policy Institut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cGann, J. 2019. *2018 Global Go-To Think Tank Index*.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cGann, James G. and Erik C. Johnson. 2005. *Comparative Think Tanks, Politics and Public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 Plumptre, T. and B. Laskin. 2001. “Think Tanks and Policy Institutes: An Overview of Issues, Challenges and Successes in Canada and Other Jurisdictions.” Institute On Governance. Ottawa, Canada
- Pugliaresi, L. and D. Berliner. 1989. “Policy Analysis at the Department of State: The Policy Planning Staff.”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8(3): 379-394.

- Rich, A. 2004.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son, David. 1987. "Britain,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1946-1981, An Initial Comparative Analysis." Ian Budge, David Robertson, Derek Hearl. eds. *Ideology, Strategy and Party Change: Spatial Analyses of Post-War Election Programmes in 19 Democra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ne, Diane and Denham, Andrew. 2004. *Think Tank Traditions: Policy Analysis Across Nation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truyk, R. 2003. *Managing Think Tanks: Practical Guidance for Maturing Organizations*. Baltimor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 Weaver, K. 1989. "The Changing World of Think Tank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2(3): 563-578.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해외 국가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 현황과
한국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19년 9월 27일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전 화 | 02-503-2190

인 쇄 | 선일문화사, 02-998-4574

•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